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개선의 방향

고려대학교 홍후조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부설
21세기교육연구소
Educational Research & Innovation Center of Korea

- 이 연구는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부설 21세기교육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과 의견 등은 21세기연구소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개선의 방향

고려대학교 홍후조

[목 차]

제I부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이 속한 맥락 이해 3

제1장. 교육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기본 입장 4

제2장. 우리나라 학교교육 개혁의 기본 방향 9

1. 취학전 교육개혁 11
2. 초등학교 교육개혁 11
3. 중학교 교육개혁 13
4. 고등학교 교육개혁 16
5. 교원제도 개혁 18
6. 교육제도 개혁 20

제II부.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의 개선 방향 26

제1장. 국가교육과정기준의 현황과 문제

1. 국가교육과정기준의 문제점 30
2.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개선 방향 46

제II장.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의 ‘형식’ 개선안 77

1. 형식 개선의 필요성과 목적 77
2.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의 문제점 79
3. 각국의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의 비교 분석 84
4.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의 형식 개선 92

제3장.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의 ‘내용’ 개선 방안 109

1. 국가교육과정기준 개선의 방향 109
2. 국가교육과정기준 구현의 기본 입장 110
3. 달성할 핵심 가치와 태도 111

4. 배워야 할 핵심 교과 또는 학습영역	112
5. 달성할 핵심 역량(key competencies)	112
6. 중수준의 국가교육과정기준에 들어갈 항목들	114
7.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과 각칙의 핵심기능 개선의 과제	117
8.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개선의 몇 가지 방향과 방안	122
<참고문헌>	135

[참고자료]

1. 3R's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의 LIN	137
2. 중학교 본래의 특성 회복 필요성	144
3. 교과서 내용의 적정화를 위한 방향과 방안	147
4. 교과서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152

제I부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이 속한 맥락 이해

본 연구보고서는 크게 2개의 부로 구성되는데 제1부는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둘러싼 환경과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 및 그 개선을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한다. 이것은 제II부를 구성하는 맥락을 이룬다.

제1장. 교육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기본 입장

본 연구보고서는 연구자의 다음과 같은 교육과 그 환경에 대한 지식과 판단 및 태도로부터 안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들은 본 장의 맥락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1. 자연과 역사, 인간과 사회, 문명과 교육

- 지구는 닫힌 체제이고, 인간의 삶은 시한부여서,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때 인류는 대대로 영원을 추구할 수 있다. 우리 우주 속의 지구는 소중한 보배이다. 태양과 주변 별들, 그리고 이들이 운행하는 법칙, 그 무엇들 이상의 도움으로 우리는 생존하고 ‘축복’을 누리고 있다. 석탄, 석유, 우라늄, 세일 등 화석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고 탄소를 과잉배출하고 있다.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조금 더 불편하고 느리지만 태양열, 수력, 풍력, 지열, 폐기물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지구와 그 안의 생명체들의 공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야 한다. 지구촌 생명 중 인간은 수련하면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시한부의 인생이므로 한정된 시간은 그의 생명이다. 생명을 바쳐 할 만한 일을 찾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행운이다. 목적이 있는 인간 삶은 행복하다. 행복을 확대재생산할 때 인류는 지속된다. 역으로 삶의 부담과 불행을 더 많이 느끼는 사회구성원들은 인류의 재생산과 지속에 기여하기 어렵다. 지구생태계 내에서 다른 생명체들과 공존·공생·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는 지혜를 발휘할 때 인간의 생명은 대대로 지속가능하다. 교육은 기성세대가 다음세대에게 이런 생명원리를 전수하여 실천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제1사명으로 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변화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상태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는 ‘창의적 개발’을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바람직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변화 대상에 대한 내·외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압력에 의해 가능하다. 변화의 양상은 대폭적이고 급격한 혁명(개혁), 소폭의 점진적인 개선으로 나뉘며, 현 상태와 바람직한 요구의 격차를 축소·약화와 확대·강화로 나타난다. 일련의 사태들을 가능한 긴 시간과 넓은 공간에서 볼 때 제한되지만 인간은 개인적·집단적으로 과학적·이성적·통찰적으로 바람직성을 찾을 수 있다.
- 인간의 역사는 인구구조(저출산 고령화, 이민, 난민, 전염병 등), 자연환경(화석연료, 탄소배출, 에너지와 자원 부족, 기후환경), 과학기술(IT, BT, NT, CT, ST, ET, R&D, 벤처기업 활동 등), 가치관(세계화, 다문화, 다원화, 다양화, 책임과 의무 및 복지와 권리 등), 정치 경제(제도와 규칙의 변화, 금융위기, FTA,

공동체적 자유주의, 성장과 분배, 고용과 복지, 통일, 중국의 부상과 역내 갈등, 군사적 충돌 등) 등에 의해 변화한다. 교육은 인간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 때문인가를 다음세대들에게 일깨워주는 활동이다.

- 역사는 모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드높이는 과정으로, 좋은 교육과 학습은 이를 촉진한다. 나쁜 교육과 학습을 통해 역사를 역행하는 노력은 비판과 저항 받아 마땅하다. 인류사를 돌이켜보면 온갖 신들과 그 사제, 제왕과 그 신하, 귀족과 양반, 자본가 등 특정인이나 소수집단에게 모든 정치적 권력, 경제적 부와 소득, 사회적 지위와 명예 등이 편중되어 있었다. 후천적으로 선택과 변경가능하지 않은 것들에 의해 계급과 신분, 율법 등의 이름으로 대다수는 부당하게 차별받았다. 이제 평민, 서민, 장애인, 외국인, 노약자 등등이 모두 존귀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인간 역사는 이를 증명해주고 있으며, 현대와 미래로 나아갈수록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삶에서 온갖 분야와 종류에서 차이는 차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과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행불행을 느끼는데 익숙하다. 교육은 이를 교정하는 힘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인간의 역사는 각종 구속된 삶에서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이며, 인간의 노력은 지독하게 불평등하게 태어나 지독하게 불평등하게 살다가 지독하게 불평등하게 죽어가는 것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역행하는 노력은 비판과 저항 받아 마땅하다. 교육은 프랑스혁명이 제창한대로 자유와 평등의 확대를 돕되,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권력에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인 부와 소득에서 자유로운 활동의 추구하고 일정한 정도의 사유를 존중하고, ‘부와 소득에 비례하여’ 모든 공적 부담을 지워야 할 것이다. 일부에게 권력이 쏠리는 독재, 일부에게 부가 쏠리는 독점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땅, 강과 바다, 하늘’은 인류의 공유자산으로서 보며 누구나 한시적 임대사용권만 가지는 사회를 지향할 때 부자유와 불평등은 완화된다.
- 민족, 언어, 영토, 국체 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구촌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인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상호 우호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인류는 서로 다른 피부색, 언어, 역사, 풍습, 신념,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제도와 문화로 인해 갈등한다. 전쟁, 폭력, 불법 등에 기댄 독재, 독점 등의 시도에는 개인적·집단적으로 반대하지만, 인류와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찰 군대 등의 정당한 치안과 방어 노력은 지지한다. 다름의 존중과 다름을 틀린 것, 나쁜 것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반편견과 적극적 차별시정 노력은 교육의 중요한 문화적 활동이다.
- 우리 사회는 지금 ‘극단’의 시대를 지나고(치닫고) 있다. 주요한 분야에서 과잉, 과속을 넘어 축소와 과소의 노력, 균형 노력, 중도와 중용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 정치적으로 과잉 독재에서 과잉 민주화로 인해 성숙한 민주시민의 육성과 제도의 성숙을 요구한다. 잦은 선거에 따라 당리당략이 아닌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혜롭게 찾는 새로운 정치제도와 문화가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과잉 성장에서 과잉 복지로 치닫고 있어, 감당가능한·지속가능한 복지, 취약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의 재구성과 근면 성실한 경제인의 육성이 요구된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취하되 과잉복지로 인해 성장잠재력을 소진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적으로 과잉 탄소배출에서 과잉 핵배출로 치닫을 위협이 있어 재생 가능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이 요구된다. 사회문화적으로 과잉 획일화에서 과잉 다원화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방, 배려, 존중의 문화인 육성이 요구된다.

- 인간의 일생과 사회공동체는 단계별, 집단별로 배울 것(edufare), 일할 것(workfare), 누릴 것(welfare)의 초점이 다르다. 교육은 이를 존중해야하고, 여기에는 한정된 자원인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 일생의 초기, 중기, 후기에 필요한 교육적 배려는 다르다. 마찬가지로 사회나 국가의 발달단계에 따라 가능한 교육의 수준도 다르다. 지속가능한 발전, 자유와 평등의 확대를 통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향상을 위한 교육적 노력의 수준과 양은 나라나 공동체마다 조금씩 다른 단계에 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세뇌, 주입 등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역사의 발전 방향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노력에는 저항과 반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개인과 사회는 그 궁극적 이상 실현의 과정에서 위계적 발달단계를 겪는다. 즉 생리적 욕구, 생존의 안녕과 같은 기초적인 바탕이 먼저 만족되어야 하며, 이를 넘어서 상호간 예악(禮樂)과 법치의 존중, 애정과 소속, 존경과 존재 이유의 실현 등을 힘써 추구해야 한다.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사회문화적 지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제도와 문화를 존중한다. 일방적 권리와 수혜 주장이나 향유가 아니라 이에 따른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런 사실을 깨닫고 추구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 문명의 발달단계는 교육과 밀접하다. 수렵채집사회, 농업정착사회, 도시산업사회, 정보화·세계화·다원화·유동사회는 이에 알맞은, 그 병폐를 치유하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교육을 요구한다. 지식노동을 위주로 하는 최근 문명은 노동과 운동(놀이와 휴식)이 분리되는 식으로 제한된 신체(body) 생리적 조건을 가진 인류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교육은 일하는 근면성과 함께 건강을 관리하는 근면성을 아울러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세계화 사회는 불·필요한 정보(information)를 대량 생산 유통시키고 인간의 제한된 시청각을 혹사시키고 있다. 또한 다원화와 상대주의의 만연으로 사람들이 기준을 잡기 어렵다. 구매력이 높은 집단들은 필요한 교육을 해외와 가상공간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은 정보와 지식의 정련 활동을 통해 이에 대한 예방적

치료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의 세대 간 단절과 구성원들의 해체는 인간 행복과 교육의 기초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급속히 해체되는 가정을 복원해야 하며 사회적 성(gender) 차별 시정 노력을 요구한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취감을 느끼는 일에 몰두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그 삶에 가치를 더할 때이다. 인류의 행복은 심신의 평강, 사회적 관계에서 역지사지의 상호배려와 존중, 친환경적 생활 능력에 달려있으므로, 교육은 이런 능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인문사회과학자로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가치관 위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첫째,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향한 바램을 확장하는 것이 윤리요, 도덕이라고 본다. 둘째, 인류 역사는 극소수 사람의 가치와 존엄 옹호에서 모든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드높이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은 나만큼 소중한 사람들이다. 셋째, 애교심, 애사심, 애향심 등을 넘어 애국심으로, 애국심을 넘어 인류애, 사해동포주의를 지향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협력한다.

2. 학습과 교육, 학교와 교육과정

- 학습은 형식적, 준형식적, 무형식적, 비형식적인 다양한 형태를 띠지만, 교육은 상대적으로 형식, 제도, 계획, 효율, 효과 등을 강조한다. 자극과 반응, 보상과 강화, 모방과 연습, 학습, 훈련과 주입 등 효과적·효율적 교육의 방법은 다양하다. 교육은 정치, 경제, 문화와 같이 사회의 특정 분야에 일어나는 현상의 이름이고,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나 기관은 가정, 학교, 기업, 사회교육(평생학습)기관, 가상공간이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학교는 교육만 하는 곳도 아니다. 즉 교육은 학교에서도 하고, 학교는 교육도 한다.
- 교육은 인간발달과 사회 발전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어릴수록 caring에서 점차 education으로, 나중에는 learning으로 진행된다. 교육에서 이런 변화는 정도·비중·강조점의 차이로 나타날 뿐이다. 학교교육이 고등교육이나 성인 및 평생 학습을 지나치게 모방하여 교사 주도의 과잉 주입(teaching)에서 과잉 학생중심(learning)을 강조하는 것도 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교육은 교수자가 교육을 주도하되, 학습자의 요구를 존중하는 교육의 균형이 요구된다.
- 교육은 학습의 특수한 형태로, 교수자가 있어 학습자의 학습을 돕되, 학습자의 요구를 존중하여 교수자가 책임지고 주도한다. 교육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장한 인간활동이다. 인간은 모두 불완전하다. 교육은 인간의 어떤 면이든 상대적으로 덜 불완전한 인간이 상대적으로 더 불완전한 인간을 제도적으로 돕는 활동이다. 교육은 인간을 덜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교육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등에는 사회적인 면과 개인적인 면이 공존한다. 어느 한 쪽만 강조하기보다 사회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맞추어 조절되어야 한다. 교육에서는 성인의 일부가 다음 세대 전체를 감당해야 하므로 1인 혹은 소수가 근원적으로 다수 학습자를 상대할 수밖에 없다. 공교육으로서 학교교육은 근본적으로 집단 교육이다. 섬, 벽오지 등 여건이 열악한 곳에서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1인 혹은 소수 학습자를 위해 교수자가 필요하다. 한 학습자를 위한, 학습자 개개인을 위한 ‘개별화 교육’은 특정 조건에서만 바람직하다.

- 개인이 태어나 자라는 가정에서 식의주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것은 부족하다. 성인 이전에 성장하는 세대에게 학교는 주요한 교육장소이다. 학교는 이들을 의무 교육으로 불러 모았다. 사람은 모이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습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학교는 개인 간 ‘경쟁’을 치열하게 시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지나친 경쟁에 기반한 제도와 문화를 누그러뜨려야 한다. 경쟁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 못남, 실패 등에서 혜택을 보는 제도와 문화이기 때문이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공동체는 만들기도 어렵지만 깨지기도 쉽다. 학교는 도리어 의도적으로 이기적인 인간들을 공동체 속에서 상호 ‘협동’하도록 그 교육 목적, 내용, 방법, 평가를 통해 강조해야 한다.
- 교육은 주로 학교를 통해서 제도화된다. 학교교육은 계획적·효과적·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에는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제도, 방법, 문화가 있다.
- 교육과정 분야의 임무는 각종 교육활동의 불확실함, 혼란스러움, 무질서함, 불투명함 속에서 이를 정리하여 따를만한 ‘기준’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더 나은 배움과 삶을 촉진하여 그 존엄성을 높여가는 일이다. 교육과정이 없다면 교육활동은 어떻게 될까? 교육과정 총론 연구 개발 전문가가 없다면 교육과정은 어떻게 될까? 교육과정은 교육활동의 ‘나침반,’ 교육개혁의 ‘지렛대’ 기능을 수행한다.

제2장.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개혁안의 맥락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교육과정 개혁안이 안출된 것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본 교육개혁안은 세계 및 국가 전략에 의한 국가운영을 위해, 민간과 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모든 부문에 개방, 자율과 경쟁,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되, 공동체적 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공동체적 자유주의의 기본 입장을 따른다. 국가경영전략에 따른 교육의 기본목표는 “아시아 중심의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인격적·협력적 인재 양성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을 것이다. 구미중심의 세계에서 아시아 중심의 세계로 진전할 때 우리는 이를 주도할 창의적 협력적인 인재를 길러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이웃 나라들에 의한 식민지배를 겪은 우리는 내분에 의한 어부지리감이 된 적이 적지 않았다. 이 점에서 애향심, 애교심, 애당심 등등을 애국심 아래 복종시키는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국가공동체의 명운과 지속가능한 발전, 북한의 발전과 한민족의 통일준비,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패권국가로 인해 우리가 수차례 경험한 역사적 사실 앞에, 다음세대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개인간 경쟁보다 협동적 학습력을 키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신뢰, 합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교육은 그간 지나치게 개별화 교육, 혹은 자아실현이라는 개인적인 발전을 강조해왔고, 자신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혈연, 학연, 지연에 얽매어서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소시민을 키워왔다. 소아를 넘어 국가와 세계라는 공동체의 명운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민을 기르는데 미약하였다. 결국 국가의 위기에 처하여 일치단결하여 극복하는 애국적 시민을 길러내지 못하였다. 더구나 다문화 세계화되는 사회의 국가정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교육은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학교교육은 ‘개인간 학력 경쟁에서 공동체적 협동’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수요자 입장에서는 “모두가 제 역량을 한껏 발휘하는 세계수준의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수월성 교육은 하향 평준화교육에 대응되면서, 남과 비교한 과거의 엘리트교육이 아니라 각자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누구나 학교교육을 통해 각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 제 갈 길을 찾아가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곳에서 남다른 발상, 발견, 발명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교육은 기존 지식을 남보다 빨리 그리고 많이 아는 것에 치중했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고, 새로운 지식 기술 가치관을 창출하는 탐구력과 창의력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최종 학교를 졸업할 때 누구나 취업(창업, 가업 승계 등)에 필요한 전공직업기술과 이에 가장 밀접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학교를 통해 익혀야 할 학습하는 방법, 일하는 태도, 살아가는 자세는 자기주도적일 뿐만 아니라 더욱 협동적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창의적·협동적·인격적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것이다. 핀란드(Board of Education, 2005)에서는 국가의 교육목표로 ‘학교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기 존중감을 높여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이 자기효능감과 협동심을 기르고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준비하고 연습하는 곳이다. 또한 그 학습성과를 평가하는 평가방법은 객관식 선다형 지필고사를 넘어 직접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수행평가와 논술형 서술평가가 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개인간 학력경쟁보다 창의적·협동적 문제해결력을, 근거없는 우월감이나 열패감이 아닌 자기존중감이나 자신감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설화된 지식 이해를 넘어 창의적 문제해결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궁리탐구하여 실제로 할 줄 아는 능력(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교육목표와 방향을 재정립할 때이다. 이를 위해 각급학교에서 추구할 교육개혁의 기본목표를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첫째, 취학전 교육은 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무상 육아를 실현한다.

둘째, 초등과 중학교 교육은 기초 기본 내용을 균등하게 책임 교육한다. 특히 준교인 중학교의 운영 방식을 중학교 본연으로 변경한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알맞게 맞춤형을 구현한다.

넷째,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산학 및 취업 연계의 철저한 직업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학교와 교단교원을 지원하는 컨설팅행정을 구현한다.

여섯째, 평생학습,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사람의 질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교육도 세계교육시장에 패쇄적일 수 없으며, 조기유학으로 대변되는 외국 교육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만 없다. 영어교육을 비롯하여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통해 세계일류의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구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교육의 주체들이 갖는 교육경영의 창의적 자율성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교육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의지는 그들의 교육실천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더 높은 책무성을 구현하려고 할 때 주어지는 자율성이다. 자율성을 통해 더 나은 전문성과 더 높은 책무성을 달성할 때 자율성-전문성-책무성의 확대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개혁의 기본 원칙을 따를 수 있다.

첫째, 모든 교육개혁의 기본목표는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적 성취(삶과 학업 및 직업 능력)에 둔다.

둘째,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원이고, 특히 교단 교사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이 재편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적어도 30년 후 다음세대가 어떤 사회를 이루기를 바라고, 그 맥락 속에서 1~2년 안에 해야 할 교육개혁 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개혁은 종합적이어야 한다. 특정한 집단, 분야, 학교급 등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그 나머지 것들이 도리어 악화되고 피해를 입게 된다.

즉 모든 교육적 지원은 교원이 본업에 충실하도록 하여, 결국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적 성취를 이루도록 하는데 있다. 그 교육적 성취는 개인의 잠재력 개발, 전인적 성장, 자아실현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본래 교육을 분석하는 틀은 (1) 교수자와 (2) 학습자의 (3) 상호작용(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과 이를 돕는 (4) 공식적 교육제도(법규, 행정, 재정 등)와 (5) 비공식적 교육문화(전통, 관례 등) 등이다. 이 글은 여러 가지 쟁점과 문제를 주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의무교육, 고교 교육, 대입시 등의 측면에서 다루어 본 것이다.

1. 취학전 교육개혁

① **초기 2년의 엄마품 및 육아휴직 보장:** 교육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태교나 젖먹이교육에서 불평등이 줄어야 한다. 아가와 부모(엄마)가 애착(attachment)의 끈을 튼튼히 하지 못하면, 성장하면서 온갖 후유증이 초래된다. 물질적·심리적·시간적 교육투자는 오히려 요람시기에 가장 많아야 한다. 0-2세까지는 부모 품에서 절대행복을 보장해야 한다. 육급휴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초-중-대학 중에서도 가장 어릴 때 가장 많은 양의 교육투자를 해야 한다. 저비용으로도 고효율과 효과의 장기지속을 남기 때문이다. 영양, 운동, 정서적 안정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연하여 교육이 먹혀들어갈 때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효율적·효과적이다. 최소 2년간 육아휴직은 어떤 식으로든 보장해야 취학전교육의 기초가 튼튼해진다. 또한 직장마다 탁아소를 늘려서 유아기의 돌봄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3-5세아 교육기관의 일원화:**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취학전 교육은 일원화되어야 하고,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격차도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유치원 등에서 드는 교육비는 가정의 '부와 소득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지원하는 voucher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헤드스타트의 실질적 가동:** 가난한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초등학교에 조기진학시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갓난아기와 첫돌아기가 6년 후 같은 학년에 들어가는 것은 불평등의 시작이다. 오뉴월 하루 햇벌에 곡식이 다르듯, 같은 해 1월생의 올된 아이들이 12월생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잘한다고 알려져 있다. 출발격차를 줄이려면 1년에 한번 입학이 아니라 2회, 혹은 4회는 입학할 수 있어야 하고, 적극적 격차축소 노력(affirmative action) 후에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시기(5세 이하)의 교육은 서로 어울려 놀이하고 직접적인 오감의 발달 이상을 추구하는 것을 금해야 할 것이다. 강제로 영어, 한글, 수셈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해야 생애발달과 전인적 발달의 기초를 놓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 초등학교 교육개혁

- ① **1,2학년 기초교육 강화:** 학교교육은 1,2학년 출발 때가 매우 중요하다. 담임교사가 적어도 2년 연임을 하면서 쓰기, 읽기, 셈하기를 책임지고 완습시켜 주어야 한다. 학급당 교사당 학생수를 15-20명 전후로 대폭 줄여서 책임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놀이와 활동을 통한 상호 배려와 질서를 익히고, 직접경험과 자연과 사물 체험을 통한 오감의 발달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시기이다.
- ② **기초수준 부진아까지 보충수업 확대 및 학습효율성 제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지원이 적을수록 학업성취는 낮아지고, 많을수록 높아진다. 사교육비와 각종 조기유학경험의 차이는 학교에서의 성취와 장기적으로 사회에서 성취격차를 더 벌린다. 학업성취도평가결과 기초미달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지원을 기초수준까지 확대하여 학교교육기 내내 부진아 보충지도는 계속되어 최소한의 성취를 이루도록 도와야 한다. 핀란드의 경우 보통 미만 학생들을 꾸준히 끌어올리는 것이 교사들의 주된 업무이고 보람이며 교사들이 존경받는 이유이다. 핀란드의 경우 1학년에서 35%를 보충수업하면 9학년에 가서는 15%를 보충학습지도 하면 될 정도로 줄어든다. 그러나 우리는 100점 만점에 20점 미만의 기초미달자만 보충학습지도하여 없애면 되는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교육정책을 쓰고 있다. 기초미달자와 함께 기초수준 학생들도 끌어 올리는 지속적인 보충학습을 하여 모두 보통 이상을 달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교사의 제1업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초중학교 전면무상급식에는 연간 3조원이 들지만 기초수준까지 보충학습지도에는 3천억원이면 충분하다. 전면무상급식보다 부와 소득에 비례한 급식비 지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아이들 입에 밥숟가락 물린다고 교육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 공정사회에 기여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려면, 교육당국과 학교의 학습부진아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가장 좋은 투자대책이다. 교도소 지어 운영하는 것보다 기초 기본 교육에 더 투자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학습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OECD 국가들의 학생들은 주당 30시간 전후로 학습시간을 투입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주당 50시간 정도를 투입하고 있다. 최장학습시간임에도 세계 최저 학습효율성이다. 학생의 시간활용과 함께 학교의 시간활용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교수방법보다 부진아들의 학습방법을 개선하는데 교원연수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효율성을 높이는 학습방법의 개발과 교육은 우리 교육의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 ③ **가정의 부와 소득에 비례한 교육복지 원칙 수립:** 무작정 균등하게 지원하는 보편 복지정책, 가령 전면무상급식은 심각한 재정적자를 초래한다. 가정의 부와 소득에 비례해 전액면제와 전액부담 사이에서 다양한 부담비율을 지도록 함이 공정교육을 하는 재원 확보에서 중요하다. 복지에서도 양입제출의 원칙이 지켜져야 나라가 튼실해지고 시민들은 성실해진다. 초등 고학년부터 학교공부에 매력을 잃고 판전을 피우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맞는지를 알아내고 이에 맞는 교육기회를

주는 것이 참다운 교육복지이다. 학교공부포기자와 특수 분야의 영재아들에게 통상적인 학교교육은 어울리지 않기에, 전자에게는 기초직업기술교육을 후자에게는 전문교육과 교양교육의 기회를 별도로 마련할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제대로 된 의무교육이고 교육복지이다.

- ④ **결혼이민자의 언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 종류 확대:** 제2외국어는 다양한 것들 중에서 선택하여 필수로 이수하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문화 가정과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언어를 제2외국어로 배울 기회를 가져야 제대로 클 수 있다. 결혼이민자와 유학생을 비롯해 국내 외국인을 활용한(외국어교사는 자격보다 능력이 중요하다) 외국어교육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다문화자녀들의 자긍심과 적응을 도울 수 있다. 초등 고학년(3/4-6학년)에서 생활외국어(제2외국어) 15종 이상을 도입한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몽골, 우즈베크 등의 결혼이민자,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언어를 생활외국어로 공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제2외국어가 더 많이 확대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근거로 선정할 수 있다. 그 기준은, 1) 해당 언어의 사용 인구(언중의 크기), 2)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군(群)의 국제적 위상, 3) 한국과의 교류 정도(한국에 국제결혼이민자가 많은 나라의 언어), 4) 언어가 가지는 역사·문화적 위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22개의 언어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⑤ **주요용어의 영어와 현대한자어 병기:** 초등 고학년부터 교과별 주요 용어에 대해 ‘현대’한자어, 영어 등을 병기하여 외국어 어휘에 대한 노출빈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생활에 편의를 도모한다. 현재 우리는 너무 늦게 한자를 배우고, 적게 그것도 복잡한 고어체를 배우고 있다. 초등 고학년부터 교과서에 현대한자어로 병기하는 방식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 ⑥ **최소교육성취기준 설정 및 보장:** 아무리 뒤처지더라도 4학년을 마칠 때까지 4척 연산을 제대로 시키고, 초등졸업 전에는 적어도 4학년 수학은 마치도록 책임지 도해야 한다. 누구나 자기생명을 지키는 ‘수영’만은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 4대강변을 활용해 적어도 100개 이상의 수영장을 건설해 여름방학에는 수영캠프로, 겨울방학에는 빙상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즉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최소 교육성취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졸업 이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책임 교육해야 할 것이다.

3. 중학교 교육개혁

- ① **중학교 본연의 모습 회복:** 현재 학교폭력, 학생소외, 학업포기자와 가출자 속출의 문제를 양산해내는 준고교(junior high school)형 운영에서 벗어나 자유학기제의 특성을 가미한 중학교(middle school)로의 변환이 요구된다.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 예술과 체육 중시, 동아리활동 강조,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활동 강조

등에서 보면 중학교교육을 개혁할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즉 중학교를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식의 준고교형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중핵 교육과정, 통합 교육과정으로 사춘기 학생의 정서와 교내외 체험활동에의 학생 참여가 더 활발한 명실상부한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준고교형 중학교 운영이 결국 학교폭력, 학생소외 등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요구하였다.

- ② **사춘기 정서 및 인격교육 강화:**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교 초기는 뇌가 재구조화 되고, 몸과 마음이 모두 달라지는, 곤충에 비유하면 ‘변태’하는 시기이다.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민감기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장 품성이 좋은 교사가 아이들의 담임을 맡아야 한다. 담임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므로 3년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탐색지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줄이고, 교사에 의한 수업을 교육의 전부라고 여기지 말고, 상담사, 복지사 등의 도움을 받아 교육할 시기다.
- ③ **회화 중심의 영어구사력 완전학습:** 대다수 학생들의 가장 큰 학습성과 문제는 세계화된 사회에서 실질적인 의사소통능력으로서 영어구사력이다. 초·중·고등학교의 조기유학, 대학생들의 해외어학연수나 교환학생 등은 모두 영어회화능력의 습득에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은 일상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두도록 한다. 또한 영어를 잘 못 하는 학생들에게는 가장 잘 하는 외국어 한 가지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④ **예술, 체육의 중점학교 확대:** 소질과 적성이 조기에 드러나는(전성기 조기도래의) 체육, 예술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더 많이 세워야 한다. 전체 중학생의 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예술과 체육을 특화한 중점학교에서 학습기회를 얻도록 하거나 방과후 혹은 주말학교를 통해 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통상적인 학교교육에 의해 양성되면 교육할 적기를 놓치는, 전성기가 일찍 오는 분야에 대한 대비를 적기에 해주어야 하는 문제이다. 절정의 전성기가 15~25세 사이에 온다면 그 전에 10년, 1만 시간을 확보하여 해당 분야의 심화●특수●전문●직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우수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이다.
- ⑤ **국가정체성 및 통일준비 교육의 강화:** 국사, 국어 등의 교육을 통해 개방적 애국심을 가진 공민을 길러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18세기 이전사는 동아시아 발전 속에서, 19세기 이후에는 세계사의 부침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과 노력을 해왔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교류사로서 우리역사를 개방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성공적 계승을 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공민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인류 역사 발전 방향에 맞는 민족과 나라를 통합 단결시키는 교육을 해야 나라의 기틀이 튼실해진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 점에서 ‘얼빠진 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다. 최소한 대한민국 이상의 세계인을 길러야 할 터인데,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동민, 군·구민, 도·시민 기를 것처럼 분열시키고 있다. 동양3국간 최소한의 교류를 위한

번자를 버리고, 常用 현대 한자 약자와 간자 2천자를 통일해서 가르치는 노력도 필요하다.

- ⑥ **졸업인증제로서 인명구조훈련과 진로교육:** 교육은 중요성·긴급성 등에 비추어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가령 건강과 체력을 기르는 체육교육에서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초등학교에서는 수영을 제대로 가르치고,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생명을 건지는 응급조치, 인명구조훈련을 시켜서 졸업시켜야 한다. 나아가 고교에서는 비만, 전염병, 성인병을 예방하는 예방의학과 개인맞춤형 운동을 처방하는 등 건강교육을 쇄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로와 직업” 과목을 주당 3-4시간씩 한 학기 동안 필수과목으로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 ⑦ **비진학자 및 중도탈락자의 의무무상 기초직업교육 기회 제공:** 누구나 공식적인 최종교육단계에서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교육제도이다. 중학교 졸업장 속에는 일정기간의 직업준비교육기간이 포함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반 학생들을 위한 직업기술 교과는 누구나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대표적인 직업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기초직업교육(취업, 창업, 가업승계 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의무교육을 마치고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에게는 ‘강제로라도’ 생업 훈련 중 하나를 습득시켜서 사회로 내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리의 반사회적인 집단(조폭, 포주)이 반사회적인 직업교육을 피땀흘려시키는 나쁜교육을 허용하게 된다. 학교에서 머리쓰는 공부를 하기 싫다면, 주변의 가게, 공장, 회사 등에서 손발과 몸을 쓰는 기능훈련을 통해 생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독일 등 북유럽식 견습생제도 같은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손쉽게 그리고 의무무상으로 기초직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생한 일터 현장, 가게, 공장, 회사, 관공서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음세대의 생업을 위한 기초직업기술교육을 ‘무상의무’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⑧ **중학교 졸업자격시험 도입:** 중학교까지의 공통필수 교육과정을 통해 시민으로서 살아갈 기본 능력과 향후 학업과 직업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익혔는가에 대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교까지는 기본 교과(국어, 외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직업기술, 예술, 체육 등 8가지)를 수단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시기이다. 아무리 부진한 학생이라도 학교교육을 받았다면, 문해력(literacy), 수리력(numeracy), 탐구력(inquiry) 관련 성취나 예술과 체육 및 진로 등과 관련한 성취를 언제까지는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그 성취정도를 평가하고 반드시 달성하도록 지원 독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 의사소통으로서 영어구사(BICS, 15세), 초등 6학년 수준의 수학, 학교교육을 마치기 전에 기초직업기술의 습득(중도탈락자와 미진학자)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모든 학습자를 위한 교육복지로서 책임지는 기초 기본 교육을 제대로 확보해야, 이후에 전개될 각 집단의 생업을 돕는 맞춤형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졸업자격시험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초에 치루어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학기에 보충학습을 강도 높게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그래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건부로 중학교 졸업과 고교진학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4. 고등학교 교육개혁

- ① **진로별 학습기회 제공**: 현재 고교는 진학계는 소수의 자율고 특목고 아래 대다수 일반고가 있고, 직업계는 소수의 마이스터고 아래 특성화고가 있는 상하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외고, 과고, 체고, 예고처럼 우수한 소수에게는 선택과 집중의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평범한 대다수에게는 두루뭉술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개척의 기회를 흐리고 있다. 교육에서 학습기회는 그 역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 준성인으로서 고교부터는 진로별 학습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문이과 획일과 양분, 국영수 편중, 평준화 비평준화 갈등, 대입시 혼란과 경쟁은 일그러진 고교교육의 자화상이다. 진로에 맞게 공부하고, 시험 치는 제도, 학생의 자기 적성과 진로를 개척하는데 필요한 학습기회를 주는 제도가 좋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하고, 할 필요가 있어서 해야 하는 공부를 할 권리가 있다. 현재처럼 예체능을 잘 하는 학생들이 문이과생들의 내신성적을 올려주는 제도는 불공정한 것이다. 허울 좋은 평준화 비평준화에 의한 껌데기뿐인 학교선택제를 폐기하여, 진로를 개척하는 학습기회를 주려면, 특히 예술과 체육 등 중점학교를 제대로 만들려면, 지역내 여러 학교들이 학교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해서 교육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개별 학교로서는 한정된 교사수, 학급수, 학생수, 시설 등으로 인해 도저히 다양한 분야로의 진로별 학습기회를 마련해줄 수가 없다. 현재 학교들의 무력한 교육은 그 결과이다. 각 학교가 개설할 교육과정을 학교간 역할분담하여 정하고, 이에 맞는 학생수용(배정), 교사수급, 시설확충 등의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은 특성화고의 학교간 역할분담, 유명 사립고나 국립대학법인화에 따른 여러 분교 및 캠퍼스 연기, 미국의 주립대학내 여러 캠퍼스의 시스템적 연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내 여러 학교간 중형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를 도입 가동하고 학교 거버넌스를 다시 짜야 한다. 결국 대교장이 이끄는 flagship school을 중심으로 여러 학교를 엮는 방식이다. 특히 교장과 교사의 학교근무시간을 6년 이상으로 늘려서 학교의 제도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안정화시켜야 한다. 선출직 교육감은 교감 교장 등 학교관리자 수를 줄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교단교사의 직급다층화를 통해 자연스런 승진욕구를 교단 내에서 해소하고, 학교관리자의 수를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한다. 이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와도 같은 이치다.
- ② **기숙학교 확대**: 이명박정부의 교육개혁 중 가장 성과가 높은 것이 기숙학교 확대였다.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교육과 가정을 벗어나 자주적이고 동료들과

협동적 사회생활 및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농산어촌의 폐교를 활용한 기숙사를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 고교수준에서 기숙사학교를 늘리는 것은 가정의 부모자녀관계의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노작의 생활화, 자연친화 및 공동체 일원으로서 규범의 획득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 농산어촌이 비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도심의 고교 일부를 이전 배치하거나 신입생이 없어 퇴출의 기회를 엿보는 대학을 전환하여 기숙사 고교를 만들 필요가 있다.

- ③ **내신제도 개선 및 진로맞춤형 대입시 정립:** 사회적 자본을 형성 확대하기 위한 사회사업기구로서 학교는 개인간 경쟁보다 공동체 성원으로 협력을 강조하여 가르쳐야 한다. 학교교육의 사회적 취지에 맞게 개인간 경쟁이나 자기주도 학습능력만 아니라 협동적 학습능력을 강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중학교의 석차나 고교의 석차등급은 비교육적이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대신 진로에 가장 중요한 과목의 성적표기는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자수를 표기하면 바람직하다. 그 활용과 가공에 의한 판단(석차, 등급, 평어 등)은 독자와 사용자 몫으로 남겨둔다. 절대평가라는 이름으로 수우미양가나 ABCDEF를 도입하면 어느 학교나 수나 A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성적인플레이를 초래하게 된다. 시험에서도 선택형을 대폭 줄이고 수행형, 논술형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입시는 불필요한 과잉학습과 꼭 필요함에도 과소학습을 유도하고, 무질서하고 복잡하며, 불공정한 경쟁을 만들어 학생, 학부모, 고교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 타당하지 못한 입시로, 수영선수를 뽑는데 주먹 쥔 사람이 줄 서는 격이다. 모집단위별로 특성화된, 타당한, 치를만한 입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대학의 보건의료 간호 생명 등은 비슷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모집단위로 진학할 학생들은 과학 중 화학과 생명과학을 잘 하고, 의료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을 확인하는 대입시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경상계열은 문과지만 수학을 더 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각 계열과 모집단위별 선수학습에 해당하는 과목과 체험활동을 지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예측가능한, 타당한, 특성화된, 공정한 입시경쟁을 만들어야 한다. 인문, 사회, 경상, 외국어 국제, 이학, 공학, IT, 보건의료, 예술, 체육 분야도 모집단위에 맞는 필요한 공부와 체험활동을 유도하는 타당하고 공정한 입시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서둘러 해야 할 일이다.

- ④ **예술 체육 교육의 강화:** 이미 예술과 체육활동이 주는 효용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음에도, 문약(文弱)을 지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방과후학교, 주5일수업제, 토요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기숙사학교 등으로 학생들의 학교체류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1인1체1예를 시행할 수 있는 시공간적 인프라가 갖추어졌음에도 이를 프로그램화, 제도화하지 않은 나태함이 학생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 체격에 비해 체력이 약해지고, 비만과 고도비만자가 늘어나고(전체 초·중고생 19만4816명 중 13.2%, 표준체중의 150% 초과하는 고도비만자 1.1%; 조선일보 2010.11.5에서 재인용), 심신허약자들이 증가한 학교교육은 건강할 수 없다. 심장병 환자 등을 고려하고 체력장을 부활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구화된 식

단 등으로 가난한 집 자녀들은 고도비만아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선진적인 교육에서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체육 교육의 건강한 균형을 지향한다. 체육 예술 분야 중점학교를 확대하면서, 일반학생들의 예술 체육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⑤ **직업기술 교육의 강화:** 학생들이 오감을 고루 활용하거나 손발과 온몸을 움직여하는 활동성 공부, 실험, 실습 실기 등 현장에서 생생하게 배우는 기회를 학교에서는 더 많이 열어야 한다. 학생들 중에는 무미건조한 지식공부에 지쳐서 학교 부적응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등교육에서 직업교육이 가진 교육적 가치가 특성화고의 쇠퇴와 더불어 쇠락하고 있다. 실제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공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물품을 만들고 하는 데서 성취를 느끼고, 실험 실기 실습 중심의 직업기술교육의 효용을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학습자의 공식적 최종 교육은 직업교육’이다. 즉 학습자들의 마지막 공식적 교육 안에는 일정기간의 직업준비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중등학교 졸업후 사회진출자는 1학기, 대학 졸업에는 1년의 직업준비교육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직업준비교육없이 사회진출하는 경우를 근원적으로 없애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원(professional school)에 해당하는 법학, 경영학, 의학, 공학 등의 학부과정이나 중등교육 수준에서 그 하부를 떠받치는 교육의 중요성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5. 교원제도 개혁

- ① **유초중등 교사양성교육 통합:** 취학전 1년부터 12학년까지 교사양성교육을 통합한다. 취학전 3년-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중학교 등 각 6년을 가르칠 교사자격제를 보완하여 만들되, 학교급간 서로 겹치도록 양성하여 학교간 협력, 통합운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교간 종횡의 협력을 통한 진로별 학습기회 보장의 기초는 여기에 있다. 가르칠 교과목수와 학년수에 따라 수학기간의 장단을 조절하되, 교사양성은 대학원과정에서 석사수준으로 상향조정하되 5년제로 한다. 우수 교사 확보의 한 방법으로 중등교사후보생의 경우 해당과목 수능 1등급 학생들은 교대나 사대에 속하지 않아도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수습교사제 도입 및 교단교사의 직급다층화:** 교단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좋은 교육이 이루어진다. 전문직이라는 미명만 붙여놓고, 교사를 평생 1,2급으로 묶어두면서, 수업, 학생지도를 떠나야 승진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좋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단교사가 꾸준히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성장과 발전을 하도록 수습-희망-보람-공지-우수-수석 등으로 직급을 다층화해서 대우해야 한다. 그들의 적정수업시간수, 호봉, 역할, 직급별 정원 등을 재설계하여 교사도 학생과 더불어 꾸준히 성장 변화 발달하도록 이끈다. 1년 이상의 수습기간을 두어 교직

적성을 충분히 평가하도록 한다. 교직에 남을 것인가 다른 직업을 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결정은 교단교사로 15년 정도 지난 후 교단교사로 남을 것인지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및 교육행정가(연구사, 장학사, 연구관 장학관)로 진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15년 교단교사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경영자 양성 과정을 대학원에 개설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직무수행 만족도 조사를 간편하게 실시하되 연 4차례에 시행하고, 그 결과를 승진과 성과급에 일부 반영한다.

③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 개선:** 사립재단들은 교원임용을 둘러싸고 부정을 저지르기 쉽고, 취업이 어려워진 이들은 여기에 현혹되기 쉽다. 결국 실력이 부족하면서도 편법으로 임용된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배울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수교사 확보차원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시험 1,2차 합격자 중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사고를 제외하고, 설립 후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사립 중교를 공영화하여 실질적으로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는 설립보다 운영이 더 중요한데, 설립만하고 경영은 못하는 영세한 사립학교를 줄이고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공립에 준하여 경영하도록 관리 감독함이 맞을 것이다. 사립학교 퇴출에 따른 초기투자금의 일부를 환수해가는 것을 제도화해야 악성 사립교가 독버섯처럼 기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교원수급, 교원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시설 개선을 공립수준으로 높여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④ **교단교사의 안식년 및 교단복귀형 장학사제도 도입:** 30년 교직경력 중 10년 7년 5년 3년 후 각각 안식년(학기)을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현재는 장학사들만 수업과 학생 지도 부담에서 해방되는 안식년을 독점하는 셈이다. 1-2년 파견 근무 후에는 반드시 수업으로 돌아오는 교단복귀형 장학사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교단을 떠난 경영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오직 승진과 직위 유지를 위한 무한경쟁이나 무사안일이 줄어들 것이다. 현재 공립학교에서 교장들은 2년 미만으로 임기를 짧게 하여 중임을 피하고, 교사들은 학교와 지역을 옮겨 다녀서 결국 주인 없는, 그래서 장기발전 계획 수립도 못하는 공립학교는 교육개선이 어렵게 되었다.

⑤ **본업 충실형 업무 재편 및 교무지원인력 확충:**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지도라는 본업에 충실하도록 업무를 재편해야 좋은 교육이 가능해진다. 사무행정, 부대업무, 잡무로 교사를 들볶아서는 본업에 소홀하기 마련이다. 보조교사, 조교, 교무지원사, 행정지원사 등을 고용해서, '이것 때문에' 본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들을 모두 말겨야 한다. OECD국가들은 교육비 중 인건비가 8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0%에 불과하다. 교단교사를 돕는 지원인력 고용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교수요원 7만8천명에 행정직원이 2만8천명인데, 초중등학교는 교사가 42만명인데 행정직원은 5만명에 불과하다. 대학, 기업, 관공서에 지원인력이 필요하듯

이, 초중등학교에도 이들이 필요하다. 행정실에서 하지 않는 모든 일을 교사에게 다 시키면 좋은 교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사들로 하여금 본업에 충실하도록 적어도 3만명 정도의 교무지원인력을 추가 고용하여 교사의 사무행정을 대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⑥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및 선진통일교사 및 진로지도 교사 양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단교사들이 지켜야할 가치이고 윤리이며 법정신이다(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제14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과특성과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정치시민교육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맞다. 인문사회계 교과에서 정치적 이념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을 개별 교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파적 이념주입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공공재로서 학교교육과정이나 교과서검정기준은, 세계화 시대에 개방적 정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패권을 다투는 동아시아 강대국 속에서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패권주의를 옹호하는 가운데, 헌법이 추구하는 방향에서 통일과 선진국으로의 국가번영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국가교육과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직후 북한지역 아동청소년들을 교육할 선진통일교사(大敎師)를 1만명 정도 양성해두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체성교육, 공동체주의, 세계시민 교육을 통합하는 교육내용으로 총180시간의 부전공 연수 정도로 한다. 그리고 중학교를 비롯한 진로와 직업을 필수로 하여 가르칠 교사를 정기적으로 양성한다.

6. 교육제도 개혁

- ① **헌법 31조 1항의 개정:** 우리 교육제도의 후진성은 헌법 31조 1항에서 비롯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능력은 서로 다르므로 균등하게 교육하기 어렵다. 이는 소수에게만 교육 기회를 주고, 대다수에게는 못 줄 때 만든 조항이다. 21세기형으로 고쳐보자. 모든 국민은 성, 지역, 언어, 인종, 국적 등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균등하게’ 즉 기초 기본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복지차원에서 책임지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야 한다. 나아가 기초 기본 교육을 넘어선 심화, 특수, 전문 분야 교육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이에 따라 알맞게’, 즉 차이를 내도 차별이 되지 않는, 교육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타고난 개인적 적성과 장차 나아갈 사회적 진로에 따라, 알맞게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원리를 지켜서 교육제도를 만들면 공정한 교육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초중학교의 기본교육은 끝까지 책임지도해줄 것이고, 이것이 끝나면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직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은 진로에 알맞게 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 31조를 보면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학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교육복지로서 취학전 교육과 진로별 교육

을 보장해야 하는 고교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공백으로 남아 있다. 특히 진학이든 직업이든 진로별 학습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고교 이후의 진로 교육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결과적으로 그 아래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에서 진로별 학습기회 보장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학교가 무작정 진학교육과 일반적인 교양교육만 해도 되는 양 규정되어 있다.

- ② **의무교육기 기본 교육제도(학제, 교육과정제, 교원양성제)의 상충 해소:** 6-3-3의 학제, 9-3의 의무교육과 교육과정제, 6-6제의 교원양성과 수업담당제는 교육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실상 학생의 성장발달에 상응하여 편의상 갈라놓은 것들이 각종 이해관계로 인해 학교에서 원활한 교사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12년 일관제를 운영하기는 어렵더라도 9-3년제 방식의 학교운영은 교원 운용,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 학생수용 등을 원활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향후 교사는 유-초 저학년, 초등, 초 고학년-중학교, 중학교, 중고교, 고교 등으로 상하 학년군과 학교급이 중첩되도록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유초중은 보다 미분화 통합된 놀이와 활동 중심의 직접 체험의 교육에 이은 기본 교과를 통한 철저한 기초 기본 교육이 필요하고, 고교는 진학과 직업에 따른 철저한 진로별 선택교육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학생수 학교수가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하면 보다 융통성있는 교원양성과 운용, 학생수용이 절실하다. 의무교육의 충실한 운영(보편적인 보충학습을 통한 기본교육의 철저)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후에 무상교육의 확대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 ③ **융통성 있는 학기 학제 운영:** 주5일수업제에 맞추어 학교시간운용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 교과특성에 맞춘 차시 운영, 일과, 주간, 분기, 학기, 학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보다 긴 학기 운영을 하는 초·중등학교의 학기를 꽃(봄)방학과 단풍(가을)방학의 중간 방학을 두는 4분기제 운영, 연2회 입학과 졸업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 초기 아동발달차에 따른 월령효과 완화, 초등 저학년에 발달격차 완화(헤드스타트 실시 가능), 초등 저학년의 담임연임제 실명제 책임지도제 가능, 집중이수의 원활한 운영, 진로 집중과정의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선택 교과제 실시, 속진과 유급의 활발한 적용, 교사들의 학교간 순회이동의 불편 축소, 교원 인사이동 시기와 일치, 대입시 등 주요 시험을 복수로 치를 수 있어 입시 경쟁 및 부담 완화, 재수생 반수생을 줄여 준다. 대학 혹은 고교의 연중 수시 입학 가능하고, 학년도와 회계연도의 일치 가능성 높임, 외국과 학생 교환, 유학생의 시간 낭비 완화, 세계화된 탄력적인 교육일정 가능, 사회진출 입직연령 조기화, 군입대 회사 입직 시기와 일치 가능성 제고, 한국사회의 나이차에 따른 연령차별 완화 등이 가능하다. 중간방학을 두는 4학기 4분기제는 도입하되, 최근 운위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는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추석과 음력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여도, 주5일 주중에 있는 공휴일을 주말로 옮기고 수업하는 공휴일을 해야 수업의 단절이 줄어들고 절기도 더 잘 지켜질 수 있다.

- ④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대규모 학교 분할**: 전국적으로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1800여개, 100명 이하가 2700여개나 있다. 교육부는 과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작은 학교가 좋은 교육을 하는 아름다운 학교라는 미신은 깨져야 한다. 학교는 적정규모가 되어야 운동회, 학예회, 소풍, 예술제 등을 할 수 있다. 섬 지역은 단 한명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학교를 유지하고 교사를 파견해야 하겠지만, 육지로 연결된 학교임에도 축구도 못 할 정도로 작은 학교를 방치하는 것은,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교장 교감 자리를 늘리고 일부 교사의 특수지학교 근무평정을 받는 수단에 불과하다. 정녕 학생을 위한 학교 존속은 아니다. 형편에 따라 각 면에는 유-초 저학년 ‘기초’학교, 큰 면지역이나 2-3개 면에는 초등학교,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의 6년제 ‘기본’학교, 중학교, 읍지역 이상에서는 중등학교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수용하여 학교규모를 적정화함이 바람직하다. 도심의 고교를 이전하거나 거대 중고교를 분리하여 고교를 농산어촌으로 이전하고 기숙사를 더 많이 짓는다면 학생인구 분산효과, 사교육절감효과, 전인교육효과, 부모-자녀관계의 정상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학교가 산재한 농산어촌이든, 문이과식 획일교육을 하여 제구실 못하는 대도시 밀집의 대규모 고교를 지역별로 엮어 진로별 학습기회를 주도록 연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大校長을 둔 ‘지역내 고교간 연합운영’을 통해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지역내 학교간 진로별 교육과정 개설(학습기회 제공)을 다양화해야 한다. 대도시의 대규모 학교가 조성되지 않도록 교육청은 전입생을 조절하고, 거대규모 학교는 연차적으로 분할한다.
- ⑤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대안 마련**: 정치적 쟁론을 다투면서 공교육을 실천할 수는 없다. 교육적 혼란, 시행착오 낭비가 고스란히 교단교사와 학생들에게 나아가 국가공동체로 파급된다. 초중등교육은 공동체성, 사회적 자본 형성에서 중요하다. 이점에서 초중등교육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 우리는 공교육을 통해 특정 동민, 구민, 시민, 도민을 기르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 이상을 기른다. 그래서 누가 교육감직을 수행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교육자치제의 취지를 벗어나 정당정치의 하부가 되어버린,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고 투표율도 낮은, 고비용이 들어 부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일관된 교육을 위해 중단위 교육청을 도입한 후 그 청장을 광역단체장 혹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⑥ **중단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 학교밖의 인사들이 학교를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것도 줄여야 한다. 특히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부로 이어지는 다단계 간섭은 학교를 못살게 구는 잘못된 제도이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지역내 여러 학교가, 지역이 못하면 국가가 나서면 족하다.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을 생활권 중단위로 통합, 60-70개의 교육청으로 단일화하여 학교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담당하는 학교수, 학생수, 교사수, 생활권역 등 규모를 감안하여 현재 지역교육지원청보다 중단위 교육지원청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 인원

감축, 공문 축소 등의 효과를 학교에 가져다 줄 수 있다. 물론 이는 광역단위 행정기구 개편과 맞물려 있다.

- ⑦ **교장 양성 아카데미 도입 및 공모제 확대:** 교단교사와 다른 방식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사들이 교육과정 및 수업 중심의 학교경영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장 양성아카데미를 통해 양성되어 pool이 구성되도록 한다. 현재의 교장 충원 방식보다 양성된 교장들 중에서 경영능력이 뛰어난 인사를 공모형식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교육감에 의한 임면보다 학교구성원이 학교발전에 책임자를 공모선발하는 방식을 더 늘려야 할 것이다.
- ⑧ **교육과정 제도 개선:** 교육과정기준은 혼란스럽고 불투명한 교육활동에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기준이 낮거나 우선순위 없이 흔들리면 교육활동은 혼란에 빠진다. 국가교육과정기준은 일시적 개정이 가져오는 혼란과 낭비 및 통합조정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연구 개발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총론 개정과 함께 자동적으로 각론 전체를 재개정하는 폐습도 단절해야 한다.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개별 교과목의 지위만을 강화하는 입법을 금지해야 한다. 특정 당파나 교과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 사회여론주도층과 교육과정총론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총론의 질 높은 개발과 학년군별 연차적, 교과군별 순차적 개정에 따른 질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개인과 학교, 지역만 아니라 국가 및 세계 공동체의 발전과 유익에 보탬이 되는 교육과정기준을 ‘장기적으로 다인수가 참여’하는 쪽으로 개발해나가야 한다. 현재의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기능을 낮은 수준으로 모든 학교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중’수준으로 질 높게 만들어 그 이하의 학교들은 개입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그 이상 학교들은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 ⑨ **교과서 제도 개선:** 국가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에 중요한 국어, 사회 등의 교과서의 경우 그 발행형식에 유의하고, 검정일 경우 기준을 헌법정신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다. 심의있는 교과서와 심의없는 자율 교과서로 나누고, 모든 교과서의 종수는 사용자의 수에 비례하되 5종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을 좌우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가격예고(제안)제를 실시한다. 체육 등 일부 실기 교과서는 서책을 폐지하고, 동영상 자료로 대체하도록 한다. 수업과 학습에 긴요하지 않은 교과서는 학생개인용이 아니라 다학년용, 학교비치용으로 발행형식을 전환한다. 또한 교과서 내용 구성도 매우 중요하다. 즉 단원 내용에 밀접한 ‘진로 직업, 창의적 기법, 사회협동성’을 키우는 사례를 빈 구석에 싣는 일, 주요 용어를 글로벌 언어인 영어와 동아시아 언어인 간자(簡字)를 병기해주는 일, 사회와 과학의 외래어 외국어를 원어의 발음기호대로 적는 일 등은 교과서가 文化材로 작용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⑩ **고교의 교과교실 확대:** 교과 특성에 맞는 수업을 위해 초등 고학년부터 교과교실제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교과특성에 맞는 수업방법, 학

습방법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대부분 학교가 과학실을 갖추고 있지만 실험 실습하면서 과학을 과학답게 가르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험 실습을 통해 반드시 학습되어야 할 항목을 지정하고 실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과학을 과학답지 않게 가르쳐도 무방한 시험을 고치는 것이 더 급선무다. 학교 교육시설은 직접체험을 늘리고 가상경험과 간접 경험을 될수록 줄이는 쪽으로, 창의성과 협동심을 키우는 설계기반학습, 프로젝트학습, 문제해결학습을 늘리는 쪽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학생발달단계에 맞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육내용이 추상적·이론적일수록 학생간 학력격차는 줄어들고, 구체적·실제적일수록 학력격차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⑪ **교육평가 제도 개선:** 초등학교부터 단답형보다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창의적·성찰적 시민을 길러낼 수 있다. 또한 지필고사를 넘어 실험 실습 실기의 수행평가 확대나, 총괄평가를 넘어 교수학습과정에 피드백되는 진단평가와 형성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내신성적 산출에서 교과특성이나 그 목적에 맞게 결과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 기본 교육에 중요한 도구 주지 교과나 진로별 교육에 중요한 교과는 엄정한 평가를 하되, 세계수준이나 국가수준의 절대평가기준이 철저히 적용되기 전까지는, 평가결과 표기를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자수 정도로 하면 되고, 절대평가가 아니면서 선불리 판단정보(수우미양가, ABC 등의 평어)를 주는 것은, 선발과 경쟁이 있는 곳에서는 도리어 쉽게 출제하여 성적 잘 주기의 학교교육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여타의 교과목은 우수-보통-미흡, Pass여부만 기록해도 될 것이다. 전국단위의 기초학력진단평가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수준 학생들에게도 보충학습을 꾸준히 시행해야할 것이다. 학교, 교육청 등의 기관평가는 부문별로 일정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부담을 더는 방법이다.

⑫ **교육취약계층의 복지 확대:** 학교에는 학습이나 교육보다 상담이나 치료가 요구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해 방과후 돌봄 기능도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 학교는 전통적 의미의 학습센터 기능과 종합적 사회문화센터로서 기능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사회교육과 평생학습시설이 풍족한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에서, 후자는 그런 시설이 빈약하고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에 적절한 학교기능일 수 있다. 교육취약계층에게 취학전 교육, 심지어 고교 교육에 대한 무상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재정이 있다면 학업중단률이 높은 다문화가정 자녀(초등 25.6%, 중학 59.2%, 고교 81.1%)를 비롯하여 미취학 중도탈락생들에게 필요한 의무교육과 기초직업기술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일이 더 긴급하다. 전면무상급식 등의 과잉복지는 결과적으로 가장 가난한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야할 것을 빼앗아버리고 만다.

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회복:** 학교에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 5.31교육개혁의 중요한 성과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

원과 견제를 받는 학교운영을 낳았다. 그러나 교육감간선제 직선제를 거치면서 학교운영위를 ‘다루는’ 학교장들의 숨씨는 이들을 무력화시켰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한 학교경영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이 재차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⑭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금지의 법제화:** 공교육의 학교와 경쟁관계에 있기도 하고, 선행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의 수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늦게까지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체력에 달려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규수업과 방과후 수업 후에 사교육조차 참여해야하므로 심신이 피곤하다. 그래서 사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제한도 조례로 지정되었다. 사교육기관이나 종사자들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학교가 제공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복습이나 과제를 관리해주는 역할,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와주는 기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기관, 맞벌이 가정의 방과후 주말 방학 중 보살핌 제공 등으로 그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입시에서는 당해 연도에 졸업 예정자들의 입학시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연 2회 학기별 입학제 도입 등으로 반수생, 재수생, 삼수생 등을 줄여야 할 것이다.

제II부.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의 개선 방향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의 형식과 내용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앞의 2개의 장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의 현황 문제와 개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이해는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이 속한 교육적 교육과정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교육은 주로 학교를 통해서 제도화된다. 학교교육은 계획적·효과적·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에는 상대적으로 보나 나은 제도, 방법, 문화가 있다.

교육과정 분야의 임무는 각종 교육활동의 불확실함, 혼란스러움, 무질서함, 불투명함 속에서 이를 정리하여 따를만한 ‘기준’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더 나은 배움과 삶을 촉진하여 그 존엄성을 높여가는 일이다. 교육과정이 없다면 교육활동은 어떻게 될까? 교육과정 총론 연구 개발 전문가가 없다면 교육과정은 어떻게 될까? 교육과정은 교육활동의 ‘나침반,’ 교육개혁의 ‘지렛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이 속한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면모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과정의 기본질문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났을 때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이다.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는 왜,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 질문들은 또한 교수자의 입장과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육 목적,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육평가를 체계적으로 숙고하게 한다.

교육과정은 교육적 가치의 실현 과정이다. 교육적 가치는 사회, 학습자, 교과전문가의 요구에서 나온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상, 교육받은 인간상, 소망하는 교육상에서 나온다.

교육과정의 기본질문은 공식적(official) 교육과정과 그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잠재적(latent/hidden) 교육과정, 고의로 가르치지 않거나 배우지 못하는 영(null) 교육과정으로 나뉜다.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에 긍정적 기여를 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공식적 교육과정은 계획, 실천, 평가 등을 통해 기술, 측정, 예측, 통제 가능한 것이다. 인간사의 중요한 부면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무엇을 어찌한다.’라는 명제에

따라 공식적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 교육과정은 누가 결정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의 사람들로 구성된 주체의 존립수준 4가지, 교육과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의 구성영역 3가지, 교육과정은 어떤 한살이를 반복하는가의 변화단계 5가지이다. 공식적 교육과정은 6면체로 보면 60가지의 상자(cell)로 이루어져 있다.

공식적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주로 일정한 기관과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꾸리는 교육과정은 기관(학교, 기업 등), 지방(학교구, 교육청, 산업 분야), 국가, 세계(EU, 동아시아, UNESCO, IB) 등 4수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영역들로서, 주로 전체적인 것을 규율하는 총칙(총론)과 이를 구체화하는 각칙(각론)이고, 각칙은 다시 형식적인 교과 교육과정과 비(무·준)형식적인 교과 외 활동(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기관 수준(학교, 국가 등) 이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육과정 총칙은 교육의 전체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적용되는 수준과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인) 총칙, 각칙의 (준/가교)총칙, 교과서 연구 개발 지침 등에서 잘 드러난다. 총칙은 일반적 보편적 장기적 전망과 목표와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을 담은 기본바탕(platforms), 각칙의 구성을 드러내는 구성 틀(frameworks), 해당 교육과정의 계획-실행-평가를 위한 지원 사항과 실행 지침(guidelines)으로 이루어진다.

각칙 중 교과는 미분화-통합-분화-세분화-전문화 과정을 거치는데, 차상위단계에서 아래를 보면 통합되어 있고, 차하위단계에서 위를 보면 분화되어 보인다. 교과는 단원(unit)-과목(subject matter)-교과(subjects, subject area)-과정(courses, 학과, department)-계열(track, 학부) 등으로 묶여진다.

각칙 중 교과외 활동은 여러 교과를 가로지르는 주제를 다루는 부분(cross-curricular themes: 창의성, 사회협동성, 진로 등)과 교과가 다루지 않는 부분(extra-curriculum)으로 이루어진다. 교과가 제 특성에 맞게 잘 가르쳐진다면 교과 외 활동의 기능은 줄어든다.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어찌한다.’는 것은 크게 계획, 실행(운영·경영), 평가(개선)의 한 살이를 겪는다. 그런데 교육과정은 계획적인 면이 많아서 계획은 다시 ‘정책’ 결정과 의사결정, 각종 ‘기준’의 연구개발, 구체적인 ‘교재’의 연구개발로 진행된다.

둘째,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의 기본질문에 대답하는 노력은 교육과정 분야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맥락적 지식을 이룬다.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의 기본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지식, 기능, 태도, 사회성 등이다. 때로는 내용과 활동, 지식과 역량 등으로 구분하여 대답되기도 한다. 또한 이것들은 교과나 교과 외 활동이라는 틀에 담겨서 학교에서 교수학습된다.

기본질문에 대한 대답의 하나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는 기질, 본성, 흥미, 관심, 소질, 적성 등에 따라 하고 싶은 공부(일, 놀이 등의 활동), 연습, 훈련, 노력, 수준, 능력 등에 따라 잘 하는, 잘 할 수 있는 공부, 장차 학업 및 직업 진로에서 요구하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부를 찾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기본질문에 대한 대답의 하나는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어문을 중심으로 한 문해력(literacy), 수와 양의 관계를 탐색하는 수리력(numeracy), 궁리탐구하는 탐구력(inquiry), 심미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예술성(artisty), 그리고 건강을 도모하는 운동력(health)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기본질문에 대한 대답의 하나는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내용과 활동 분야를 배우지만 중국에는 하나의 전공 직업 기술이나 지식, 그에 밀접한 외국어, 건강관리의 1체, 심성관리의 1예를 배우게 된다. 또한 제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법과 남과 더불어 협력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학습법과 자세를 배운다. 이런 교육의 성과는 각자 제 갈 길을 찾아가는 진로에 들어서는 것이고, 이를 통해 각자 제 분야에서 남다른 발상, 발견, 발명을 하는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있다.

기본질문에 대한 대답의 하나는 학교교육은 지속적인 평생학습능력을 키우는 기초로서, 단기적으로 교양인을 키우는 ‘진학교육’과 사회생활인을 키우는 ‘직업교육’을 목적과 내용으로 한다. 공식적 학교교육의 최종은 직업교육이다. 중도탈락자와 비진학자를 위한 기초적인 직업교육은 의무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육이 직업교육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거리에 나가 할 일이 없어지게 되고, 반사회적인 집단에 속하여 반사회적인 일거리를 찾게 되고, 개인과 사회에는 여기서 큰 폐해를 입게 된다. 사회는 학교보다 교도소를 운영하는데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 학교나 사회는 모든 학습자들이 생업(취업, 창업, 가업 승계 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으로 공식적 교육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기 교육과정은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라 초등저학년까지는 자연환경에서 ‘놀이와 활동’을 중심으로,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교까지는 ‘기본 교과’를 중심으로, 고교 이후부터는 ‘진로별 교육과 학습’을 중심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구성된다. 0~2세까지 유아는 부모 품에서 ‘절대 행복기’를 보장받아야 하며, 유아의 성장에 따라 사회적 욕구는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기본질문에 대한 대답의 하나는 다 같은 것(공통)과 서로 다른 것(상이)이라는

갈래를 낳는다. 공통과 상이는 언제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를 묻게 되고, 초·중학교 때 모든 사람에게 주로 필수로, 상이는 고교 이후 진로별 집단에게 주로 선택으로 적용된다. 공통과 상이가 적용집단의 범위와 관계된다면, 필수와 선택은 적용(부과) 방식이다. 공통필수와 상이선택이 서로 조응한다.

공통필수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한 기초 기본 교육은 사람들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균등하게(동일하게) 실시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는 인간발달상 상대적으로 어릴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의무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적 조치는 보통 미만(기초미달+기초수준)의 학생들에게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초중학교의 기초·기본 교육을 위한 ‘기본 교과’는 인간의 개인적·집단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능하는 것으로서, 교육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모국어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개인과 집단 및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제도와 문화를 탐구하는 능력, 수와 양의 관계를 탐구하는 능력, 자연과 사물의 세계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능력, 식의주 생활의 편의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정서적·심미적 안녕과 상상과 창의력, 심신의 건강과 체력 높이는 교과 등 8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 내용이나 탐구 방법으로 교과를 구분하면 너무 많아져 도리어 혼란스럽고 학교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

상이선택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한 진로별 교육은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유사한 집단으로 가려서 묶어 교육하는 것으로, 차이를 내도 차별이 되지 않는, 교육적으로 온당한 기준인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성한다. 이는 주로 상대적으로 장성한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면서, 보다 전문적인 대학교육이나 직업수행을 위한 바탕을 형성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적 조치는 학교 간에 협력하여 진로별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진로별 교육은 고교 이후 사회 진출(취업, 창업, 가업 승계 등)와 대학 진학을 위한 것으로, 한 학교에서 모두 다 감당할 수 없어, 지역 내 학교 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진로별 교육과정은 다음 단계의 직업준비나 진학준비에 바탕이 되는 교과나 과목, 교과 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중 계열과 과정의 종수를 먼저 정하고, 이에 따라 교과와 과목 등이 집중성, 균형성, 계열성있게 구성되도록 한다. 진로에 따라 그 교과를 공부하는 교과의 종류, 범위, 수준, 분량, 초점(강도), 방법, 평가 등이 달라진다.

제1장. 국가교육과정기준의 현황과 문제

1. 국가교육과정기준의 문제점

먼저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과 각론을 연구 개발 고시하고 이것을 개정하는 관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밝혀서, 개선 방향을 잡는데 뜻대로 삼고자 한다.

교육과정기준은 교실을 포함한 학교의 교육활동의 ‘교육종합계획서’이면서 그간의 폐단을 제거하는 ‘교육문제종합해결책’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나아가 교육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설명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가 무엇을 어찌한다.’는 3형식 문장은 인간이 관여된 사태를 파악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다. ‘누가’는 주체의 문제이다. ‘무엇’은 대상이다. ‘어찌한다.’는 활동이고 변화하는 행동이다. 주체는 연구 개발, 의견 제시, 심의, 고시, 운영, 관리 등과 관련된 개인과 집단 및 기관 등과 관계된다. 대상은 공통필수 교육과정과 상이선택 교육과정,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의 형식(구조, 체제)과 내용(품질)을 지칭한다. 활동은 어떠한 절차나 과정을 거치면서, 순서대로, 전체나 부분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다.

아래에서는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개정 준비도(개정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초 연구 축적), 개정 주체(교수, 교원 등 참여자 문제), 개정 기관(연구 개발 기관간 협력), 개정 단위(개정 대상의 크기, 학교급, 교과군), 개정 영역(총론과 각론), 개정 범위(전면개정과 부분수정), 개정 과정(절차), 개정 기간(6개월-3년), 개정 주기(전면 개정의 경우 1-7년), 개정된 문서의 품질(상중하, 고중저), 개정된 문서의 효력(폐단을 개선하는 힘)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해 보기로 한다.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개정과 관련한 일의 범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국가교육과정기준 개정 관련 탐구할 주제들

개정 관련 주제		내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주체 (누가)	개정 주체	교원, 연구원, 교수, 산업체 인사, 학생, 학부모, 일반인 등	개정 참여자의 교수 편중, 부적격자 참여,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 연구자간 경쟁과 비협조	대상별 적격자 선정 기준 및 비중 마련(교육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육개선에의 뚜렷한 의지, 준비된 인사) 참여자간 의견 반영 비율 조정 의사소통 구조 체계화 교과 간 배정 비율 경쟁 해소 방안 마련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각 전문가의 양방적 투입
	개정 기관	연구기관, 학회, 교육부, 교육청, 학교	분리, 분산, 고립, 경쟁, 임의적 교육정책의 개입	유기적 종합, 협력 의사소통 구조 체계화

개정 관련 주제		내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등; '연구 개발, 실행, 평가, 개선' 관리의 유기적 관련		기준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 개발의 전문성 자율성 책무성 확보
대상 (무엇을)	학습 단계별 교육과정	누리과정, 공통필수, 상이선택	공통필수와 상이선택 교육과정의 동시 개정	순서대로 누리과정과 공통필수 교육과정의 연계·통합 추진 취학전-초저; 초고-중, 고의 3단 설계
	학교별 교육과정	학교급, 특수집단(장애아, 학업중단아, 대안학교, 영재아)	상호 단절, 취약집단을 위한 교육과정의 결함, 혼선	연계, 완결 (분야별)취약집단을 위한 교육과정 기준 마련
	구성 영역	총론과 각론	총론과 각론의 특성, 주독자에 대한 초점 불분명 총론의 영성함. 내용의 중복,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하지 못함 각론이 교과서 구성의 모본으로서 상세·복잡 특히 각론내 여러 교과과의 일시 개정 총론과 각론의 낮은 가독성	학교경영의 모본으로서 학교장이 읽을 총론의 종합적 특성 총론 개정 후 각론의 순차 개정 총론의 친절성, 종합성 각론의 핵심화·중핵화·대강화 수업(교실, 교과)을 위한 모본으로서 각론의 특성
	개발 대상	교육과정기준, 교과서	기준 개발의 비체계성 교과 특성과 무관하게 제작된 수업에 쓰이지 않는 일부 교과서 교과서 과잉의존 현상 실질적인 학습 발생이나 교육목표 달성보다 교과서 진도 마치기가 우선 학생심리발달과정 및 수준 반영 미흡	어느 것을 어느 수준에서 개발 보급할 것인가? 기준 개발의 체계성 어떤 기준(교과, 과정)? 어떤 교과서(학생개인용, 학년용, 학교용), 쓰이는 교과서 학생심리발달과정 연구 및 반영 교과서 분량 적정화, 교육내용의 적정화(각론의 대강화) 교육과정 질관리 체제 마련
	문서 형식	체제(영역, 요소)	결함, 부실, 졸속	종합성, 유기성, 방향제시성, 정치성, 체계성 
	문서 내용	교육과정 내용의 상충하, 고충저	낮은 수준	도전감 있는 중수준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
	문서 효력	교육 적폐 개선력	무기력 관련법 문제(비타당성)	유력(학교경영과 교실경영의 지침서로서 작동) 관련법 개정
활동 (어찌한다)	준비도	기초 연구의 축적도 기준 개발을 위한 인프라 장기 구축	결함, 허술,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실천 부족, 기초 연구 부족	준비됨, 숙성
	범위 (정도)	전면개정, 부분수정	임의	적절성
	절차	순서와 절차	구체적인 순서와 절차 기	치밀

개정 관련 주제		내용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술 부족	비소모적이어야 함
	소요 기간	6개월~1년	단기	충분한 기간(총론 1년, 각론 1년 씩) 순차적으로
	개정 주기	1년~7년	수시	분량, 중요도에 따라 큰개정은 10년 주기
	적용 (실행)	교육과정의 실질적 현장 반영 정도	형식적 문서양산, 형식적 업무처리 일환적폐가 개선되지 않는 교육활동 우수교사의 전문성 자율성 발휘 어려움 게으른 교사의 낮은 책무성 교장의 교육과정 이해와 열의 부족	교육과정의 변화가 적용된 실제적 운영, 책무성과 전문성 발휘 창의적 적용(자율성)
	효과 검증	교육과정의 효과 검증	결함, 허술, 형식적, 단순 행정적	교육과정 질관리 체제 마련 체계적, 실질적 평가 및 차기 개정을 위한 피드백

현재까지 드러난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를 둘러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수시 개정

수시(隨時)는 어느 때든지, 아무 때나 등의 뜻을 담고 있다. 연구자는 당시 교과서 사용 유효기간(5년)에 연동되어 5년 주기로 바꾸던 교육과정 개정 주기를 ‘단’ 주기개정이라고 비판해 온 바 있다. 교육과정기준을 따라야 하는 교과서 개발이 도리어 교육과정기준을 바꾸는 힘을 가졌다는 점에서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것은 교육과정기준이 오랫동안 교과서 구성을 위한 모본으로 작용해 온 결과였다.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은 학교경영의 모본으로, 교과교육과정기준(각론)은 교사 수업의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기준 개정의 변천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의 변천

교육과정 시기	공포, 고시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주요 개편 내용 및 특징
			정치사회적 배경	개정의 철학 및 이론적 배경	기존 교육과정의 문제점	
교수요목기 (194	1945. 9 1946. 9 1947. 1	교육에대한긴급조치 국민학교, 초급 중학교 고급중 학교 교과과정	해방과 분단, 정 부수	민주주의, 민족주의, 의,	-	▪ 국민중학교 교과 편제 시간 배당 ▪ 교육법, 교육제도 정초기 ▪ 일제 잔재 불식, 평화와 질서 유

교육 과정 시기	공포, 고시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주요 개편 내용 및 특징
			정치사회 적 배경	개정의 철학 및 이론적 배경	기존 교육과정 의 문제점	
5 -195 4)		표 각과 교수요목	립, 일 제잔 재청산	새 교 육 동 선 교육 의회	교 운 조 교 심	지, 생활의 실제에 적합한 지식 기 능 연마 ▪ 한글첫걸음, 초등국어독본 발간
제1 차 (195 5 -196 2)	1954. 4. 20 1955. 8. 1 " "	시간배당 기준령 국민학교 교과과정 중학교 교과과정 고등학교 교과과정 (문교부령)	한국전 쟁 폐 허 복구	진보주 의, 새 교 육 운 동	난 도 높은 교 육 내용 제시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 범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기준령 ▪ 교육법 정신 구현 ▪ 전인, 반공, 도의, 실업 교육 강 조 ▪ 교육과정의 융통성, 지역성 고려
제2 차 (196 3 -197 2)	1963. 2. 15 " " 1969. 2. 19	국민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4.19, 5.16군 사군데 타, 제 3공 화 국 출 범	합리적 교육과 정, 경험중 심 교 육과정	단 편 적 지 식 위 주의 교 양 지양	▪ 기초학력 강조 ▪ 생활경험중심 교과활동 ▪ 반공·도덕이 특별활동의 일부 ▪ 내용의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조직의 합리성; 운영의 지역성 ▪ 고등학교 단위제 채택 ▪ 계열성 강조
제3 차 (197 3 -198 1)	1973. 2. 14 1973. 8. 31 1974. 12. 31 1979. 3. 1	국민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유신체 제 제 4 공 화국 출범	학문중 심 교육과 정	기 본 개 념 소 , 구 습 탐 학 부 족	▪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 ▪ 국민적 자질의 함양 ▪ 인간교육의 강화 ▪ 지식·기술교육의 쇄신 ▪ 지식의 구조화, 탐구 학습의 강 조 ▪ 도덕 교과 신설
제4 차 (198 2 -198 6)	1981. 12. 31	유치원 교육과정 국민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 5 공 화국 출 범 (7. 30 교육개 혁 조치)	교육과 정 의 적합성 (인 간 중 심 교육과 정)	내 용 의 선 수 의 정 화 미 흡	▪ 국민정신 교육 강화 ▪ 전인 교육 충실 ▪ 과학·기술교육(진로교육)개념 도 입 ▪ 전인적 발달 강조 ▪ 국민학교 1,2학년에 통합 지도 시도 ▪ 중·고교 자유선택 시간 설치 ▪ 일반·실업계고 공통필수과정 설 치
제5 차 (198 7 -199 1)	1987. 3. 31 1987. 6. 30 " 1988. 3. 31	중학교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국민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 6 공 화 국 출 범 8 0 년 대 후 반 의 민주화 운동	적 합 성 제 고 교육과 정개정 의주기 성	4 차 교 육 과 정 근 으 한 부 분 개정	▪ 교육과정의 적정화내실화·지역 화 ▪ 자주성, 도덕성, 창의성 강조 ▪ 유치원 지도영역은 5개 발달영역, 국민/중학교는 교과활동과 특별활동 으로 편성 ▪ 국민학교 1~2학년「슬기로운 생 활」을 2학년까지 연장 ▪ 중학교 '생활기술'을 가정과기술로 병립 ▪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자율재량권 확대
제5 차 (198 7)	1987. 3. 31 1987. 6. 30 "	중학교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국민학교 교육과정	제 6 공 화 국 출범	적 합 성 제 고	4 차 교 육 과 정	▪ 교육과정의 적정화내실화·지역 화 ▪ 자주성, 도덕성, 창의성 강조

교육과정 시기	공포, 고시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주요 개편 내용 및 특징
			정치사회적 배경	개정의 철학 및 이론적 배경	기존 교육과정의 문제점	
7-1991)	1988. 3. 31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운동	교육과정개정의 주기성	을 근으로 한 부분 개정	- 유치원 지도영역은 5개 발달영역, 국민/중학교는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편성 - 국민학교 1~2학년 「슬기로운 생활」을 2학년까지 연장 - 중학교 '생활기술'을 가정과기술로 병립 -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자율재량권 확대
6차 (1992-현행)	1992. 6. 30 1992. 9. 30 1992. 9. 30 (1995.11.1) 1992. 10.30	중학교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국민학교 교육과정 (초등학교 ")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문민정부 출범	과정지향적, 학습경험의 질 관리, 생태적, 실천적 현상학 교육과정 강조	중·고·고교 과정의 일체화,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성, 과목의 융·복합, 교육과정의 내·외적 조화	- 주어지는 교육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것으로 -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지역화·자율화 - 교육과정 체제·구조·내용·운영의 종합 개혁 -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다양한 이수교과목 개설, 필수과목 축소·선택과목 확대) -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학습량과 수준 조정, 교과목 체계 개선, 교육내용의 적합성 추구, 학습 부담 경감) -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 고려, 학습과 생활의 기초능력 신장, 평가 방법) - 지역적 특수성 반영을 위한 시도 단위의 교육과정 결정권 확대 -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시도, 초등학교 재량시간 신설 - 초등학교 영어 교수 확대(1997-)
제7차 (2000-)	1997.12. 30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실업계, 특수목적계, 기타계), 특수학교 등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 교육과정	문민정부 출범, 교육개혁 위원회, 정보화 세계화 강조	수요자 중심 교육, 열린교육, 포스트 모더니즘, 구성주의 패러다임	학습자의 다·고·도·학·의·육·택·제·한·학·생·의·습·관·없·히·적·용·을	- 학습자 및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강조 1-10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고 2,3학년은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2원화 -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 재량활동의 확대 및 신설 - 초등 통합교육과정을 교과간 통합보다 활동주제 중심 통합을 지향 - 중학교 선택과목에 제2외국어 추가 - 일반계 고교의 인문사회와 자연 과정이 열리어 과정 개설 개방 - 사군 교육청의 교육과정 역할 확대

교육 과정 시기	공포, 고시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주요 개편 내용 및 특징
			정치사회 적 배경	개정의 철학 및 이론적 배경	기존 교육과정 의 문제점	
2007 개정	2007.2.28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실업계, 특수목적계, 기타계), 특수학교 등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 교육과정의 부분 수정	국가 사회적 요구, 주 5일 수업제 시행			- 수준별 교육과정의 수준별 수업으로 변화 -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사회교과 '사회'와 '역사'의 과목 분화로 별도의 학년과 시간이 배당 - 단계형, 심화보충형 등의 구분이 폐지 - 집중이수제의 강화로 학기별 교과목 이수 가능 - 주 5일 수업제 시행으로 재량활동 시수 감축 -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학습 내용 축소 - 문제해결 및 고등 사고 능력의 신장
2009 개정	2009.12.23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실업계, 특수목적계, 기타계), 특수학교 등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 교육과정	미 래 사 회 가 요 구 하 는 의 인 인 재 양 성, 학 생 자 의 자 신 성 창 성 의 신 장, 심 학 역 량 강 화		교 과 활 동 을 위 주 로 체 험, 봉 사, 진 등 의 재 위 교 부 족	- 공동교육기간의 이수기간 축소 - 선택 교육과정 기간의 확대 - 학년군 설정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경직성 탈피와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 - 교과(군)별 20% 범위 내 증감운영 - 교과집중이수를 통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감축 -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해 '창의적 체험활동' 신설 -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 개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강화

출처: 홍후조 외(2002). 「교육과정 개선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의 변화와 질 관리 방안의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 중 14-15쪽의 표를 수정 보완한 것임.

그러나 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수시개정이라는 국가교육과정기준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용어를 붙였다(2003년 세미나 보고서). 이를 받아 2005년 2월 25일 교육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사회적 변화상을 수시로 교육내용에 반영하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함으로써, 교육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개정 요구가 있을 시, 교육과정심의회(교과별 심의회, 학교급별 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수시’로 열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수시개정이 있는 이후 크게 바뀌지도 않고 그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처럼 ‘미시적’으로 바뀌는 면도 없지 않다. 김경자 교수(한국교육과정학회, 2013년 10-12월, 뉴스레터 113호:4)는 수시개정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한 바 있다.

“급격한 개혁보다는 작은 단위의 단계별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는 연구 또한 귀담아 듣자. 국가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체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개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더 질 높은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인가? 국가 교육과정 개정은 여전히 한꺼번에 전부 일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2월 23일, 소위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그간 수차례 수시 개정이 있었다. 고교 전문 교과 교육과정에 베트남어 및 해당 과목 추가, 종론의 학교 급별 편제와 시수조정, 인성 교육 요소 강화, 방송통신중학교 교육과정과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변화가 이루어졌다(이미숙 외, 2013 발간 예정). 아래 표를 보면 제2차, 제4차, 제7차 수시 개정은 그 폭이 넓고 여러 교과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수시 개정으로 ‘간소하게’ 처리하였다. 수시 개정은 자칫하면 몇몇 사람들의 편견이 담긴 간이 개정으로 이어지기 쉽다.

7차 교육과정 이후 2007 개정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에 걸친 부분 수시 개정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7차 교육과정 이후 부분 수시 개정 현황(표 보완 중)

구분		날짜	주요 개정 내용
7차 수 정	7차 교육과정 고시	1997. 12.30	학습자 및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강조 - 1-10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고 2,3학년은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2원화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재량활동의 확대 및 신설 초등 통합교육과정을 교과간 통합 보다 활동주제 중심 통합을 지향
	1. 1차 수시개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2004. 11.26	교과이수단위 증배 운영 가능 - 필요에 따라 총 교과 이수단위를 10% 범위 내에서 증배 운영가능 -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전문교과에 한해 증배운영 가능
	수시개정 채택 정책 발표	2005. 2.25	교육과정 개정 시 현장교원과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 - 현장 교원들은 지역·학교별 교과교육연구회를 통해 평소 교과 지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과정 개정시 반영 - 학부모나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상시로 제안
	2. 2차 부분개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5-101호	2005. 2.28	수능 사회탐구 영역 국사과목의 출제범위에 근현대사 내용이 포함됨.
	3. 3차 부분개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2006. 8.29	수학과, 영어과 교육과정 일부 개정 - 수학10-가, 10-나를 고등학교 수학으로 변경 - 수학과 수학익힘책의 분리

구분		날짜	주요 개정 내용
07 고 시 및 수 정			- 고등학교 계열별 필수과목 변경
	4. 4차 부분개정 2007 개정 교육과정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79호	2007. 2.28	-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재량활동의 학교 자율적 운영 - 과학교육 및 역사교육 강화 -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수업시수 일부 조정
	5. 2008년 9월 수시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8호	2008. 9.11	보건교육과정 신설(2008 보건교육과정)
	6. 2008년 12월 수시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	2008. 12.26	초등영어교육과정 개정(2008 개정영어교육과정)
	7. 2009년 3월 수시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	2009. 3.6	10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2009 개정사회교 육과정)
09 고 시 및 수 정	8. 2009년 6월 수시개정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6.11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조치 발표 - 수업시수 20%증감, 창의적 체험활동 적용
	9.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 12.23	- 학기당 이수 과목을 최대 5과목 축소 - 교과집중이수제 도입
	10. 제1차 수시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53호	2010. 5.13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내용조정 - 중학교 한국사 영역의 근현대사 내용 보완 - 고등학교 근현대사 내용 축소 및 전근대사 내 용 보완 - 독도 관련 내용 강화: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의 부당성 및 독도와 관련된 올바른 역사관, 주권의식 확립내 용 추가
	11. 제2차 수시개정: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	음악, 미술, 체육 집중이수에 따른 시수 감축 금 지
	12. 제3차 수시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5호	2011. 1.26	녹색성장 관련 학습요소 반영 교과교육과정 개정 - 초·중학교 도덕, 사회, 과학, 실과/기술·가정 등 4개 교과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관련 내용 분산 반영 - 녹색성장교육 활성화 방안: '09.8 국정과제
	13. 제4차 수시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3호	2011. 2.24	베트남어 교육과정 신설 - 고교 외국어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기준학 과로 '베트남어과' 및 해당 전문교과 선택과목(9 개)신설
	14. 제5차 수시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2011. 8.9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개정 - 고교 교과 편제 수정, 선택과목 재구조화 - 고교 '한국사'필수 과목화
	15. 제6차 수시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2012. 3.21	사회과 교육과정 부분 개정: 고등학교 사회과목 및 실용경제 과목 신설, 일반과목의 증감 운 영 변화
	16. 제7차 수시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2012. 7.9	인성 교육을 강화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부분 개정

구분	날짜	주요 개정 내용
17. 제8차 수시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9호	2012. 2.7	방송통신중학교 관련 규정 신설
18. 제9차 수시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2012. 12.13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 부분 개정
19. 제10차 수시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3-7호	2013. 12.1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고시 - 일반고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역사 교육 강화, 학교 체육 활성화, 논술 기초 교육 근거 마련
20. 제11차 수시개정:		수능변화에 따른 문이과 융합형 교육과정 총론 개정 예정 발표(2015년 고시 예정)

출처: 교육부의 고시, 보도자료, 월간지 등을 참고하여 표를 수정 보완한 것임.

교육부 고시, 보도자료 등을 통한 각 교육과정 시기의 수시개정 횟수를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7차 교육과정 이후 부분 수시 개정 횟수(표 보완 중)

수시개정	고시횟수	보도자료횟수	총횟수
7차 개정	4	0	4
07 개정	3	1	4
09 개정	11	1	12

사실 국가교육과정기준 중에는 단순 개정 고시할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심지어 법률로 규정할 사항도 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과정기준을 변경한다면 학교는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과정기준이란 해마다 변경하거나 아무리 장관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장관이나 대통령 등의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수시개정은 아니라고 본다. 가정과 출신 장관은 가정을 독립 교과화하고, 경제학과 출신 장관은 경제 과목을 독립 신설하거나 한국개발연구원에 주고, 철학과 출신 장관은 논술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개정하는 데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부분적인 것에 매몰된 이들이 임의적·정치적 판단을 하여 개정하거나, 장관의 의지대로 개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이 개정을 주도하지만 보통 10년만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한다. 핀란드도 10년만에 개정하고, 호주도 10년마다 국가의 교육발전계획에 따른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듯이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과정기준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이나 사회가 워낙 빨리 변화하므로 최소한 20-30년의 변화상을 기대하고, 2-3년 안에 교육활동은 어떻게 변하게 할 것인가를 궁리해야 할 것

이다. 5년 단임정권 아래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 단기적인 선거공약에 따른 뿐이다. 가령 무상급식과 같이 선거에 표를 얻기 쉬운 공약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노후화된 건물을 수리하는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수준에서 장기적인 교육비전을 세우고 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교육과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동시(일시, 졸속) 개정

이것은 학교교육과정의 종적 측면에서 모든 학교급, 학년군의 교육과정기준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관행의 폐단을 지적하고자 하는 용어이다. 향후 취학전과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 고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다음 세대 육성에서 일관성을 가지도록 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모두 한꺼번에 개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졸작을 만든다. 아래 그림과 같이 차례로 만들되, 물고 물리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와 같이 국가교육과정기준을 구성하고 있는 총론과 각론, 특히 각론들을 모두 한꺼번에 개정하는 폐단을 비판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공통필수 교육과정기의 기초 기본 교과와, 상이선택 교육과정기의 진로별 선택 과목, 교과, 과정을 한꺼번에 개발하여 고시하는 관행을 말한다. 결국 나오는 것은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결국 폐단이 있는 교과 교육활동에 근본적인 개선을 유발하지 못한다. 일시개정은 졸속개정으로 저품질의 문서를 낳으므로 반드시 고쳐져야 악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은 단기간의 졸속 개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것은 수시개정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구태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육상, 교육받은 인간상, 지향하는 사회상을 그리고 그 쪽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작고 지엽적인 손질만 여러 차례 하다 보니 결국 누더기같은(patch-worked) 교육과정이 되었다. 집중이수가 대표적인 예이다. 집중이수할 학교급, 해당 교과목, 6학기 이수할 것을 1-2학기에 이수한다면 어느 학년과 학기에 개설할 것인지, 그에 따라 교원 수급, 교과서의 개편, 수업과 평가(내신평가와 고입 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있어야 했다. 진로집중과정도 마찬가지다. 그것의 종류, 해당 진로인 학생에게 부과할 과목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 부과할 과목의 교육과정기준의 차이, 교과서, 수업 및 평가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수의 과정을 한 학교 내에 모두 개설할 수 없을 때 지역내 학교간에 구현할 수 있는 방안, 교원의 진로별 수업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개발 및 연수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과정기준 문서는 그런 점에서 결함을 안고 있어 개선할 여지가 많다.

더구나 가장 기초적인 연구 데이터조차 축적되지 않았다. 가령 초중등 학생들의 교육과정기준 관련 설문조사를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표준화된 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사용, 전문가용도 없다. 고교 교육과정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학업 및 직업 진로상 요구를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변화상을 축적한 데이터가 없다.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큰 흐름을 잡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개정이 되는 것이다.

대입시에서는 사교육을 유발하니깐 대입시에서는 논술을 치르지 말라, 치르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뒤로는 다시 논술을 고교 교과목에 필수로 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서 문제가 되고 학교에 혼란을 초래한다. 수행평가 중 서술형 평가를 강조하고, 선택형 단답형의 비중을 대폭 줄이며, 대부분의 교과서에 초등 저학년은 한 문장, 고학년은 한 문단, 중학생은 서론-본론-결론의 3문단, 고교생은 기승전결의 1천자의 에세이를 해당 교과당 학기당 적어도 한 번 이상 숙제나 시험으로 내도록 하는 지침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고교에서 국사를 필수로 지정한 것도 문제가 많다. 세계화시대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시민으로서 주체성 위에 세계시민을 길러야 하는데 국사에만 집착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더구나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과정을 부정하는 1980년대식 반정부 민주화 시대의 민중사관으로 근현대사를 실패한 역사라고 규정하면서 다음세대들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한국사를 이런 관점에서 교과서를 기술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금성출판사 검인정 교과서와 정반대로 2013년 교학사 검정 교과서는 우리 국사학계의 입지점을 잘 드러내준다. 교과서에 반대한민국적 민주화 관점에서 기술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서 다음세대에게 나라의 얼을 심어줄 수 있으며, 개방적인 한국인을 길러낼 수 있을까? 전교조식의 한국사는 21세기에는 맞지 않음에도 이를 더 열심히 가르치고 이를 필수화하면 결국 나라에는 좌파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과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인 ‘일베’라고 알려진 보수파들이 맞서게 된다. 19세기 이전사는 동아시아의 발달사에서 우리역사를 보고, 20세기 이후는 세계사의 시각에서 우리역사를 보는 개방적 한국사를 가르쳐야, 우리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어 세계사적 전망을 놓치게 될 수 있다.

3) 분산 개발

현재 교육과정기준의 총본부격으로 관리하는 기구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다. 교육부는 개정 요구·의견 수집, 개정요구안 검토(교육과정심의회), 개정/운영 보완 여부 결정, 교육과정 개정 추진(개정 기본계획 수립, 개정안 연구 개발 위탁, 개정안 마련, 개정안 심의, 개정안 확정·고시, 교과서 편찬 등)을 관장한다(교육인적자

원부, 2005.2.25. 보도자료).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의 경우 해당 과에서 최종적으로 수정 가필 확정한다. 그 아래 연구 개발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가장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직업계 교과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학 과학 교과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취학전 0-5세 표준보육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육아정책연구소, 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 경제는 한국개발연구원, 특수아를 위한 교육과정은 국립특수교육진흥원 등에서 분산 연구 개발 관리하고 있다. 각각이 나름의 전문성이 있어서 이를 관장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초중등학교는 대학을 나온 누구나 거쳐 온 교육 내용 수준을 다룬다. 기관들 중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기준의 연구 개발이 가장 중요한 임무로 규정된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분산 개발의 효율성, 효과성,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 자체 설립법에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연구 개발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법률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수학 과학 등을 관장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것이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법보다 더 상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각 교과(보건교과를 위한 법, 체육교과, 한국사 등)가 자기 교과의 지위 비중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입법을 하고, 각 교과의 교육과정기준 및 교과서 개발을 해 나간다면 국가교육과정기준의 통일성, 교과간의 균형성, 교과간의 통합성 등을 달성하기 어렵다. 향후 이런 분산 개정 문제는 어떤 식이든 해결되어 통일성, 통합성, 일관성, 유기성을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개별 교과가 자신의 지위와 비중 확대를 위하여 이를 분리해서 관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계속되어도 좋은지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 눈에 물대기’식의 입법은 결국 국가교육과정기준의 통일성, 통합성을 훼손할 것이다. 분산개발에 의한 문제점과 분산개발을 용인하더라도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두고 작동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초연구가 부족하여 여기서 길게 논하기 어렵다.

4) 하수준의 기준

어느 학교나 큰 힘 안들이고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기준은 기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특히 국가교육과정기준은 그 나라의 미래상을 담은 교육의 종합적인 계획서이자, 그 나라의 교육이 지니고 있는 결점이나 고질적인 환부를 들어내는 교육의 종합 시정서이다. 기준의 새로운 고시와 시행으로 다만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여 힘든 정도라면 그런 변화는 교육의 질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고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 교육과정기준은 학교경영과 교실수업에 개선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예가 있다. 가령 이명박정부에서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았지

만 우리나라의 지난 100여년간 영어는 환골탈태(換骨奪胎)를 했다. 더 이상 배운 대로, 가르쳐오던 대로 영어를 가르치기 어려워 영어교사들이 다른 교과로 전직하거나 그만두는 일이 생겼다. 영어는 환골탈태했고, 그것은 외국인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으로서 영어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나쁜 예도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기준 총론은 집중이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교육과정기준 고시 전에 이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의 항목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작 어느 학교급의 어떤 교과에서 어떻게 집중이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없이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란 이름으로 ‘방임’되었다. 새로운 교육과정기준이 힘든 변화를 요구할 때 반발은 심한데, 여기에 불확실성이 겹치면 혼란만 양산한다. 집중이수가 그랬다. 중학교에서 예술(음악, 미술), 도덕, 기술·가정, 선택과목 등에 대해 모든 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조금씩 분산이수하지 말고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적절히 안배하여 가르치되, 이런 기술·가정과 도덕을 묶어 조합하고, 예술과 선택과목을 묶어 조합하면 6학기를 적절히 안배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들 교과목들은 분산이수할 때보다 집중이수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수업, 과제,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교사의 수업의 질도 높아졌을 것이다. 여기에 맞게 교사수급, 담임배정, 교과서 제작 등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기준은 이를 방임했다. 방임의 결과는 참혹했다. 중학교만 아니라 모든 학교급에서, 위의 교과목만 아니라 모든 교과목에서 학교마다 교사가 확보된 정도에 따라 뒤죽박죽으로 한 학기 8개 교과목 이하라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대혼란과 불만을 야기하였다. 공통필수 교육과정을 학교마다, 학년 학기마다 다른 방식으로 배우다 보니 전학하는 학생들에게서 중복·반쪽·미 이수 현상이 일어났다. 해당 교육과정기준 개정에 참여한 인사들도 이에 대해 기준에 안내가 자율화란 이름으로 결여된 결과를 몰랐다(당시 한국 교육과정학회 월례회 발표자료 참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학교경영과 교실수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사고실험(simulation)을 못하고 그냥 장관 한사람의 명령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교육과정기준 개발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교육 혁신에 대한 뚜렷한 의지도 있어야 하지만, 그 기준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활동으로 구현될 것인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성과를 남길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실격임을 인정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로써 집중이수는 명칭에 오욕을 쓰고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교과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여전히 ‘모든 교과목을 매학년 매학기에 모든 학생들에게 다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풀리지 못하고 있다. 어느 학교급에서 어떤 교과목에서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일어나게 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준과 지침을 주지 못하면, 기

준이 친절하지 못하고 엉성하면 도리어 학교교육을 후퇴시키고 혼란만 초래한다.

교육과정기준 개정은 이처럼 학교급, 교과교육의 환골탈태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어느 한 학교급이나 교과 교육을 그렇게 환골탈태시킬 수 있다는 교육과정 개정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기준 개정은 가장 게으른 교사 하위 20%, 가장 빈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도 무엇이 잘 못되고 있는가를 모르는 하위 20% 학교가 그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견인차 노릇을 해야 할 것이다.

5) 교육현실 개선 없는 문서 개정

교육과정기준은 그럴싸한 문서를 만드는 일은 아니다. 교육종합시정서로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현실의 교육활동 개선에 영향력을 지녀야 한다. 영향력이 없고 그냥 지침만 덩그러니 있다면 현실 교육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부분에 “(8) 학교는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중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교과에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과목인 진로와 직업을 제대로 편성해서 가르치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지목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안다. 거기에 진로지도란이 있는데 그것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를 거치면서 희망직업란을 채우는 것이다. 그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예시하고 있는데, 초등이나 고교나 모두 다 동일하다. 무차별적이다. 심지어 초등이 더 구체적이고 고교에 와서 더 일반적인 직업을 적어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 다른 하나는 중학생들은 졸업하면서 직업계나 진학계로 진출한다. 그들에게 직업진로는 강 건너 불이고 학업진로는 발등의 불이다. 그럼에도 진로에 대해 직업진로만 강조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학교급별 공통사항 중에는 “(10)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수준별 수업은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능력’만을 고려한 것임에도 마치 진로를 위한 장치인 양 기술되어 있다. 초중학교는 민주사회의 자유로운 교양시민을 기른다는 점에서 능력(성적, 석차) 등에 따라 지나치게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수준별 수업은 가급적 중학교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임에도 모든 학교급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습부진아의 느린 학습속도를 고려하여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도, 단계나 수준을 더 나누어 제공할 수도 있어야 한다. 가령 중학생이 초등학교의 수학을 총정리할 수도, 고교생이 중학교 수학을 총정리할 수

도 있어야 한다. 부진아를 양산하여 학생들에게 정의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낳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학의 경우 생활수학으로 매우 난도를 낮추는 것이 수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나 학생을 위해서나 국가의 발전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말 진로를 위해서라면 진로별로 재구성한 과목을 주어야 한다. 인문사회계의 국어와 달리 과학기술계, 예술계, 체육계의 그것은 달리 구성되어 있어야 진로별로 고려한 교육과정이 되는 것이다.

다른 나쁜 예도 있다. 일반고교의 단위배당 기준표를 보면, 학교 자율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한다고 되어 있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어떻게 고려한다는 말인가? 고교 교과목 중에는 진로와 직업(일반과목), 음악과 진로(일반과목), 체육과 진로 탐구(심화과목)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다른 교과에는 진로 탐색이나 준비를 위해 도움 주는 과목이 없다. 일반고 편성 운영 지침에 진로집중과정에 대해 일부 구절이 있다. 다음 두 구절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정작 진로집중과정이 무엇이며,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들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런 태부족 지침으로는 진로별 교육과정을 어떻게 짜서 제공할 수 있는지 교육청, 학교장, 교사 등이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이를 최종적으로 만든 이들도 알 수 없는 암호가 되어 버렸다.

<표 5>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 문서에 나타난 진로집중과정에 관한 규정

(예)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학교자율과정’에서 진로 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 (10) 개별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내 학교간 개설할 집중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구절은 좋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되지 않는 더 나쁜 예도 있다. 고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돕는 교육청 지원 사항에서도 학교간 협력과 역할분담에 대해 규정해두었다. 이것은 연구자가 다양한 진로집중과정을 아무리 큰 학교일지라도 한 학교 내에서 다 개설해줄 수 없으므로, 특히 장차 학생수 급감, 학교의 소규모화, 소규모 학교의 동원가능한 자원의 제약, 학교교육과정의 영세화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 현재의 학교간 부질없는 경쟁이 아니라, 지역내 학교간 협력과 역할분담하여 개설하면 된다는 것을 역설해 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진로집중과정에 대한 정의, 그 종류, 구성방법, 학교와 교육청에서의 실행방법 등이 없다. 요컨대 고교를 마치면서 다양한 분야로 나뉜 대학진학이나 더 세세하게 분리된 사회진출로 진로별 학습을 통해 진로를 개척해 가야 할 고교생을 위한 실질적인

진로별 교육과정 안내는 거의 없는 셈이다. 교육과정은 학생이 해당 과정을 끝마칠 무렵에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학교장과 교사수준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6) 공급자 중심 개정

교육과정기준 문서는 기준으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교육활동의 기준으로서 작용하려면 교육활동(학교수준, 학년수준, 학급수준, 수업수준 등)을 계획하는데 모본으로서 작동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이 만들어지면 교과별 수업배당 시수만 확인하면 다른 할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서는 주로 총론 연구자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정작 학교장 등은 학교 교육계획, 경영계획을 짤 때 거의 참고하지 않는다. 이미 주어진 교과목과 시간 배당에 적절히 맞추면 되는 것이다. 국가교육과정기준은 이런 점에서 학교장이나 교사와는 느슨한 관계(loosely coupled)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 교육과정 문서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교육과정 문서를 보아야 학교경영계획을 제대로 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려면 우선 총칙의 주 독자, 주사용자를 학교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총론은 이 점에서 초점이 없거나 초점이 흐릿하다. 학교가 운영할 교육과정을 개략적으로 안내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비중이 없어 보인다. 나아가 학교교육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각칙도 교과서 개발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을 뿐, 정작 교실수업의 지침 역할을 하지 못한다. 교사들이 각칙을 보고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교과서나 지도서 혹은 각종 시험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각칙의 주사용자, 주독자를 교사로 한다면 각칙의 형식이나 내용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학교가 추구할 교육적 가치가 들어있고, 학교경영, 학급경영에서 유의할 사항이 들어있는 기준 문서로서 작용하려면 총칙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무초점, 흐릿한 초점, 다초점은 총칙 문서의 발전이나 학교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7) 교과교육과정기준의 학문중심 개정

특히 교과교육과정기준 개발 과정에 대학 교수들이 연구책임자가 되고 대거 참여하여 교육적인 교육과정기준이 아니라 학문적인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기준을 만들어 낸다. 학문적인 것은 학문 후속세대나 전문가 집단에는 필요하지만 생활인,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자질은 다른 것임에도 학문적인 개념과 이론을 알면 지성인이 길러지는 것처럼 여기고 학문적 체계를 강요한다. 각 교과에 여러 개의 전공들이 들어 있어 각 세부 전공별로 교수들이 이를 대표하고, 결과적으로 대학의 학문체계를 반영한 개론서 형태의 교과서 만들기로 유도하고 있다. 초중학교 사회과에서 공통 기본 교과에 역사, 지리, 일반사회의 3균분이나 과학과에서 물리,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의 4균분, 기술가정의 2균분 등은 아주 비교육적이다.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문에 입문시키려는 것과 같다. 학생들은 이를 어렵게 여기고 흥미가 없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상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개정의 준비(준비도, 기초 연구 축적도), 주체(참여자의 구성), 대상(학교급 총론과 교과군 각론), 범위(전면개정, 부분수정), 주기(기간, 장중단기), 품질(상중하), 효력(폐단개선) 등을 둘러싼 문제점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표 6> 현행 교육과정 개정상의 문제점

개정상 문제점	문제의 내용
수시 개정	교육과정기준의 부분수정은 가능하지만, 보다 중요한 큰 틀이나 내용을 광정하는 중기적 개정, 전면개정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
줄속 개정	수시개정의 결과로서 특정한 입장이 반영된 왜곡된 개정으로 새로운 문제를 낳아 재개정의 대상을 만드는 것
동시 개정	교육과정의 종적 측면의 모든 대상(학교급, 학년군)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관행
일시 개정	교육과정의 횡적 측면의 모든 범위(총론, 특히 각론)를 한꺼번에 개정하는 관행
하수준 개발	개정 결과 내용이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견인하기에는 그 품질이 낮은 것
문서 개정	교육종합시정서로서 결함. 문서상 용어나 구절은 갖추고 있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상태
분산 개발	연구 개발 기관이 서로 나뉘어져 있고, 이를 유기적으로 종합하는 기관이 없는 상태
공급자 중심 개정	총칙의 독자(사용자)와 각칙의 사용자에 대한 뚜렷한 초점이 없어 공급자 중심 개정이 되어 있음
학문중심 개정	개발의 주체가 대학 교수들이 되어 교육보다 그 학문적 수련을 강조하는 폐단

2.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개선 방향

교육과정기준은 총론, 각론의 총론, 각론의 각론이 모여서 교육활동의 방향과 모습을 알려주는 ‘교육종합계획서’이면서, 그간 교육 현장의 적폐와 문제점을 해소하는 ‘교육종합교정서’이다. 또한 이를 사용하는 현장에는 사용설명서로 친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처음 도입된 정책이나 개념들은 친절한 안내를 요구한다. 문서의 오탈자를 고치는 정도라면 모를까, 중차대한 교육과정기준을 개발하면서 아무 때나 필요할 때마다 해도 되고 할 수 있다는 ‘수시’라는 개념 자체가 격에 맞지 않는다. 아무리 급해도 작은 개정은 ‘정기’ 개정이 맞다. 가령 학년도의 특정 시기에 작은 수정을 한 것을 고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단기, 졸속, 일시, 동시 개정으로서는 맞지 않는 일이다. 도리어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뿐이다.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개발하는 제도와 풍토가 중요하다.

교육과정기준은 교실의 학급경영을 포함한 학교의 교육활동의 ‘교육종합계획서’이면서 그간의 폐단을 제거하는 ‘교육종합시정서’로 제시되어야 하므로, 그 개선을 논하는 것도 종합적이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흔히 3형식 문장 ‘누가 무엇을 어찌한다.’는 사태를 파악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다. ‘누가’는 주어, 주체의 문제이다. ‘무엇을’은 목적어이고 대상이다. ‘어찌한다’는 동사이며 활동이다. 주체는 연구 개발, 의견 제시, 심의, 고시, 운영, 관리 등과 관련된 개인과 집단 및 기관 등과 관계된다. 대상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의 형식(구조, 체제)과 내용(품질; 공통필수 교육과정과 상이선택 교육과정)을 지칭한다. 활동은 어떠한 절차나 과정을 거치면서, 순서대로, 전체나 부분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다.

아래에서는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개정 준비도(개정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초 연구 축적), 개정 주체(교수, 교원 등 참여자 문제), 개정 기관(연구 개발 기관간 협력), 개정 단위(개정 대상의 크기, 학교급, 교과군), 개정 영역(총론과 각론), 개정 범위(전면개정과 부분수정), 개정 과정(절차), 개정 기간(6개월-3년), 개정 주기(전면 개정의 경우 1-7년), 개정된 문서의 품질(상중하, 고중저), 개정된 문서의 효력(폐단을 개선하는 힘)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하기로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향후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총론과 각론은 논의를 펼친 ‘론’이 아니라 규범적 실행의 기준이자 지침이 되므로, ‘칙’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총칙을 둘러싼 온갖 논의를 다 펼치더라도 결국에는 교육활동 기준으로서 규범적 법령적 특성을 띄도록 ‘총칙’이라고 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총론을 한 뒤에 ‘총칙’이, 각론을 한 뒤에 ‘각칙’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이렇게 할 때 총칙 문서에서 무기력하면서도 허례허식적 구색 맞추기식의 항목들이 사라지고, 실행을 안내하는 실효성 높은, 유효한(effective) 규

칙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표 7> 국가교육과정기준 개정 관련 주제

개정 관련 주제		내용
주체 (누가)	개정 주체	교원, 연구자, 교수, 산업체 인사 등 개정 참여자
	개정 기관	연구 개발, 실행, 평가 개선의 관리의 유기적 종합
대상 (무엇을)	개정 단위	개정 학교급, 학년군, 교과군
	개정 영역	총론과 각론, 기준과 교재
	개정 문서의 품질	형식과 내용의 품질, 상중하, 고중저
	개정 문서의 효력	교육활동의 적폐를 개선하는 힘
활동 (어찌한다)	개정 준비도	기초 연구의 축적 정도
	개정 정도	전면개정과 부분수정
	개정 과정	순서와 절차
	개정 소요기간	6개월~1년
	개정 주기	1년~7년

1) 준비된 개정

이것은 인적 측면과 관련 연구 개발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육성과 온축을 통한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연구개발을 의미한다. 먼저, 참여인사나 기관을 국가교육과정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참여하도록 지원 육성해 두어야 한다. 총론과 각론의 교육과정기준 개발의 주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쳐 총론과 각론을 개발할 것인가? 총론과 각론 문서는 각각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가? 총론과 각론의 문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고시된 문서의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가? 그 항목들은 법률 사항인가 아니면 고시 항목인가? 항목은 필수로 따라야할 강제 사항인가 아니면 권고 사항인가? 그것들은 어떻게 평가되고, 개선되어야 하는가? 등등 국가교육과정기준을 둘러싼 연구과제들을 꾸준히 연구하여 축적한 바가 많지 않다.

교육과정기준을 개정하는데 참여하는 인사들 중에는 국가교육과정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면서 어떤 영역의 대표로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학계 원로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 경우 그가 국가교육과정기준을 한 평생 연구한 원로라면 수긍하겠지만 다른 분야에서 원로일 뿐 국가교육과정기준에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국가교육과정기준을 자신의 필생 과업, 연구 주제로 삼고 그 개선을 위해 노심초사한 인사들은 많지 않다. 또 그들이라고 하여 가장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를 꾸준히 연구 개발하는 기관과 인사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그 일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연구자도 적고 연구자의 주요 관심사도 국가교육과정기준의 평가와 개선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 개정 과정

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전 지식과 국가교육과정기준에 대한 이미지와 의견을 가지고 참여한다. 마치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함께 모여 같은 주제를 토론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다음은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총칙을 개발하는 인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진술해 본 것이다. 교육과정 총론 연구자들은 이런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8> 총칙 개정 참여자의 자질에 관한 요건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꾸준한 연구를 통해 교육개선 의지와 아이디어가 있음을 보인 사람 -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다른 연구개발자와 협력을 잘 하는 사람 - 세계, 국가, 사회, 학교, 학생, 교원 등의 변화 추세와 과제를 잘 이해하는 사람 - 지향하는 사회상, 교육상, 인간상을 포함하여 국가 및 인류 장래에 대한 비전이 뚜렷한 사람 - 교과나 학교급 교육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높으나 이해관계는 없는 사람 - 국가교육과정기준의 형식과 내용의 문제점을 알고 그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가 분명한 사람 -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총칙과 각칙의 핵심특성을 이해하고, 그 종합성, 균형성, 중핵성, 계열성, 미래지향성 등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사람 - 유-초-중-고-대학 교육과정의 핵심특성, 공통과 상이, 체계적 분화, 상호연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 - 교과와 체계적인 횡적 종적 분화에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교과와 적폐를 알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뚜렷한 사람 - 교육취약집단의 가장 절실한 교육적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할 교육과정적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 국가교육과정기준이 학교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에 대한 사고실험(simulation)이 자유롭고 비교적 정확한 사람 - 교육 및 교육정책의 다른 분야와 교육과정 분야의 상호영향력 관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 - 국가교육과정기준의 형식, 내용, 개정 절차, 총칙과 각칙의 연계 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등 |
|---|

다음으로,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연구 개발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초 연구를 해두어야 한다. 교육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기초연구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하기보다 통상적인(routine) 주제를 연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때그때 주어지는 급한 불 끄기 식의 현안 과제에 매달리기도 한다. 어떤 방향을 가지고 꾸준히 끈질기게 연구하여 온축한 바가 적은 편이다. 최소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연구 축적한 바를 자신있게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질적이고 무기력하며 하수준의 교육과정기준에 대안이 필요하다. 이 영역(domain)의 창의적인 대안들은 급진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 분야(field)를 둘러싼 환경(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교원, 연구자, 출판사, 평가회사,

EBS, 학원, 사교육종사자 등)은 창의적인 대안을 반기지 않는다. 창의적인 대안을 수요해야 창의성이 발휘될 터인데 도리어 학교에서 받아들일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적인 제안들만 환영받고 있다. “창의성의 빈곤은 공급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수요의 부족에 원인을 두어야만 한다.”(유연옥 역, 2012: 323).

더구나 연구기반, 실증적 증거기반으로 교육과정기준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초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편이다. 교육과정기준 개정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교원의 요구, 전문가들의 요구, 교육행정가의 요구, 일반시민들의 요구, 학문이나 교과 전문가의 요구 등을 밝혀줄 표준화된 설문 항목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교육활동을 통해 꼭 거두어야 할 성과로서 학생들의 진로, 창의성, 협동성 등의 발달상황을 드러내는 표준화된 조사지도 없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5년마다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권고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1조 (아동종합실태조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학생의 요구에 기초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1) 요구조사할 학생집단의 확인

여기서는 준비된 연구 개발의 예시로 학습자 집단의 요구에 대해서 논해 보기로 한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어느 학년의 학생들이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정보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수혜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모든 학년을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시작 학년과 마지막 학년을 조사할 것인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할 것인지, 필요에 따라 표집하여 조사할 것인지? 패널을 정해서 조사할 것인지? 재학 중에만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졸업 후에도 계속 조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령 교과(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 줄 모르는 학생들은 교육과정 관련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소한 초등학교 5,6학년이 되어야 교육과정기준에서 말하는 교과(군)를 모두 접하게 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비교적 기초적인 공통필수 교육과정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

동의 동아리활동 외에는 학생들의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을 국가수준에서 학생의 요구를 들어 별도로 설계할 소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재 학교급간에 연속되고 계열상 새로 확대 추가되는 사항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 9> 유-초-중-고교의 교육과정 구성 내용에서 공통점과 상이점

학교급	교육과정의 기본 구성
유치원	5개 영역
초등학교 저학년	2개 교과 + 3개 통합 교과, 창체
초등학교 고학년	기본 교과, 창체
중학교	기본교과 + 선택과목, 창체
진학계 고교	교과별 과목, 창체
직업계 고교	계열, 학과, 과목, 창체

만약 모든 학년을 조사할 경우, 학습자의 요구조사를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면 교과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초등학교 3-4학년부터 차례로 조사해 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독일의 11+시험이나 싱가포르의 학생들의 수준별 트랙을 나누는 시기는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라는 점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조사도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체로 교과목들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력을 가름하는 학년이 되고 있다. 이 연령대는 자기 의견을 가지고 의사표명을 할 수 있고, 장래에 대한 전망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 된다.

2008년 이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한 학업성취도는 배경변인과 함께 분석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각 교과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학생들이 어떤 교과목을 선호하고, 흥미있어 하고, 분량이 많아 부담스러워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힐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를 거의 마치는 6학년 4월경에 실시하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정보와 함께 그들이 장차 배우게 될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데 기초 정보가 될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을 통해 중학교 교육과정을 계획하는데,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을 통해 중학교 교육과정을 반성하고 수정하고, 나아가 그들이 배우게 될 고교 교육과정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2학년만 빠지게 되는데, 모든 학생들을 다 조사하기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일 수 있고, 매해 해당 학년을 조사하므로 모든 학생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고교 1학년의 경우 고교 선택 교육과정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McGaw, 1996a, 1996b).

초·중등학교를 다 마치는 고등학교 3학년은 조사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고교 마지막 학년 학생들은 대입시와 취업 준비로 여유가 많지 않을 것이다. 비유하건대 고3은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재학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 전공공부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를 반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취업을 한 직업계 졸업생 입장에서는 고교 재학 중 이런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회고적 반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졸업생에 대한 의견조사(alumni survey)는 유용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평생을 걸쳐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본 조사연구는 초·중등학교 재학시에 혜택을 볼 국가교육과정기준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실행할 필요는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즉 교육과정은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이해(critical understanding of current curriculum)와 보다 바람직한 미래 교육과정의 창의적 개발(creative development of future curriculum) 활동을 두 축으로 하는데, 각 학교급의 마지막 학년을 통해서는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적 이해를 통해 개선의 여지를(retrospective improvement), 또한 각 학교급의 첫 학년들의 의견과 함께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의 창의적 개발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prospective planning).

<표 10> 학습자 집단의 요구조사를 통한 교육과정의 반성적 개선과 미래지향적 개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학교 1학년 학생	중학교 3학년 학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초등 교육과정의 반성적 이해를 통한 초등 교육과정의 개선 (retrospective improvement)	-	← 중학교 교육과정의 반성적 이해를 통한 중학교 교육과정의 개선 (retrospective improvement)	-
→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를 통한 중학교 교육과정의 계획 (prospective planning)	→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를 통한 중학교 교육과정의 계획 (prospective planning)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를 통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계획 (prospective planning)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를 통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계획 (prospective planning)

(2) 학습자 집단의 요구조사 항목

학습자들은 학교가 제공해 온, 제공하고 있는, 그리고 제공하려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일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견해 중 전국 혹은 지방, 그리

고 학교와 학급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더 나은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어떤 학교급의 학습자 집단의 교육과정에 대해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① 초등학교 교육과정, ② 중학교 교육과정, ③ 진학계 고교 교육과정, ④ 직업계 고교 교육과정이다. 특수목적계 고교나 특성화고교 등도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모두 진학계 고교로 간주하여 조사하면 될 것이다. 초등학생들에게는 일반적인 중학교, 국제중, 예술중, 체육중, 대안중 등에 대한 선택 경향, 남학교, 여학교, 공학교 선호 여부가, 중학생들에게는 진학교와 직업고, 기숙형 고교에 대한 선호, 남학교, 여학교, 공학교에 대한 선호, 전문고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에 대한 선호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학교 조사는 교육과정, 학교 개설 과정, 교과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고, 교과서 생산, 교사 양성과 배치, 학교시설 등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를 추정하는데 중요하다.

둘째, 각 학교급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영역을 학습자 집단의 요구조사를 하면 무엇에 대해 할 것인가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각각 총칙,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모두 조사할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만 조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상대적으로 학교 수준에서 조사하고 대응할 것이므로 조사할 필요성이 적다. 그러나 동아리활동처럼 지역사회 자원이나, 인적 물적 자원(CRM)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학습자 요구 조사할 때 고려할 영역들

	① 교육과정 총칙	② 교과 교육과정	③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1	0	-	-
2	0	0	-
3	0	-	0
4	0	0	0

위의 학습자 집단, 학교급의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하위 구성영역을 조합하면,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 즉, 교육과정 총칙을 구성할 때, 중학교 선택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고교의 계열별 집중과정이나 학과를 구성할 때, 집중과정이나 학과의 필수적인 중핵 교과와 선택적인 보완 교과를 구성할 때 학습자 집단의 요구 조사는 더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12> 학습자 요구조사할 때 고려할 영역들의 조사항목들

구분	① 교육과정 총칙	② 교과 교육과정	③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초등학교	- 변화와 유지에 대한 요구 조사 결과 참조	- 변화와 유지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 참조	- 동아리활동에 대한 요구
중학교	- 변화와 유지에 대한 요구 조사 결과 참조	- 선택 과목 요구조사 결과 반영	- 동아리활동에 대한 요구
진학계 고등학교	- 학교, 계열, 집중과정, 학과 선택 요구조사 결과 반영	- 집중과정별 핵심 및 보완 과목 요구 조사 결과 반영 - 선호, 유능, 필요한 교과목 요구조사 결과 반영	- 동아리활동에 대한 요구
직업계 고등학교	- 학교, 계열, 기준학과 선택 요구조사 결과 반영	- 학과별 핵심 및 보완 과목 요구조사 결 과 반영 - 선호, 유능, 필요한 교과목 요구조사 결과 반영	- 동아리활동에 대한 요구

셋째, 위와 같은 영역을 중심으로 학습자 집단의 요구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질문 항목을 작성한다. 국가교육과정기준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자 집단의 요구이므로 반드시 망라적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 일반이 그러하지만 학습자들도 많은 경우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것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판단을 변경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아직 배우지 않은 교과목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교과 학습 활동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간의 학습활동을 기초로 어떤 분야를 잘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분야를 하기 싫어하는지, 열심히 해도 잘 안되는지에 대해 알아가게 된다. 이는 각 학습자가 교과에 대한 흥미, 관심, 적성, 필요도, 자신감이나 효능감 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자 타고난 소질과 적성, 후천적으로 익힌 경험이나 선수학습정도 및 능력, 장차 사회적 진로에 따라 질문에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반응 중에서 확고하고 안정적인 것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변화 그 자체만 사실일 뿐 변화의 방향, 정도,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전에 정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보완, 수정, 변화되기도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처럼 상대적으로 소질과 적성에 기반한 진로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함에도 다년간 꾸준히 개인적 집단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적하면 일정한 경향이나 추세(pattern)를 보이게 된다. 평생직업과 직장이 사라졌고, 과학기술과 지식이 폭증하는 오늘날 진로는 단번에 결정하여 일생을 좌우하는 것이라기보다 잠정적으로 결정하여 한정된 기간 안에 열정을 바쳐 공부할 만한 것을 찾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것이 요구조사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 집단의 요구조사 영역과 항목 중에서 교과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교교육과정에서 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의 학업성취, 학습과 관련한 태도 및 학생과 가정 및 학교 배경 변인이 대부분 확인된다. 이들 5개 교과를 제외하고,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기술가정) 등에 대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확인하지 않는다. 학습자들이 전체 교과 중에서 어느 교과를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는지, 더 싫어하는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더 많이 공부할 계획인지 등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교육과정 총칙 입장에서는 교과 전체를 두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비중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 개정시마다 총칙과 교과 관련자들 사이에 교과의 중요성, 독립과 통합, 필수와 선택, 비중 등에 대해 갈등할 때, 학습자들의 견해는 무시되기 쉽다. 이 점에서 교육과정 총칙은 특정 교과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는 교과나 활동에 대해서는 학습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과를 짜임새 있게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의 교과학습이 중심을 가지면서 계열적으로 이수할 뿐만 아니라 교과 학습 내의 아는 것(to know something)과 할 줄 아는 것(to do something) 사이, 나아가 그것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something), 교과와 교과 밖의 다른 활동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과 부문은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자료(교과서, 지도서 등) 개발, 교사 임용과 배치 등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국가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해당 교과를 어떤 비중이나 지위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교육 부문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질 때, 학교에서는 전인교육을 할 여지가 생겨난다. 교과 학습에 관한 한 현재에도 불필요한 ‘과잉’학습과 꼭 필요함에도 ‘과소’학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적정 학습을 유도하는 데 있어 학습자 집단의 요구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과학습을 짜임새 있게 함으로써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진로지도, 품성도야, 상담, 사회성도야, 봉사활동, 교과통합, 가치관 정립 등 인간을 성장시키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마치 자유학기제에서 기본과정을 중핵과정으로 축소하고, 자율과정에 큰 비중을 둌으로써 중학교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의 분량이 과중하거나 학습수준이 너무 높은 교과가 무엇인지를 가려내어 적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수업 사이에 일정한 완충지대에 실시할 수 있는 예체능활동은 매우 중요한 전인적 교육활동이므로, 그리고 인간 삶의 복지(well-being)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가 학습기회로서 마련한 예체능 활동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과 부문과 달리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부문

은 상대적으로 학교 수준에서 계획, 실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자 집단의 요구조사를 국가수준에서 할 때에는 제외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 다만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은 종류가 많고 교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할 자원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교육과정은 학업과 직업 진로의 포부수준, 종류를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어느 수준의 학교교육 이후에 사회(직업)세계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교 졸업 후에 학생들은 다양한 대학 전공이나 다양한 직업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고교는 진로별 학습기회를 충분히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이후에는 일정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 그 결과로서 대학에 진학하고, 직업세계로 나아간다면 그 종류나 분야를 더 구체적으로 알고 학습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학업과 직업 진로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다른 일상적인 교육적 요구는 본래 의미의 교육과정적 요구라고 하기 어렵다. 교육과정은 학생과 교사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거나 그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교육과정적 요구는 교과이거나 교과가 아닌 어떤 활동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요구는 교육과정과 직접 관계될 때에만 교육과정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수업 진행과 관련한 학생의 요구는 교육과정과 연계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요구와 연계되려면 매우 정교한 정제가 필요하다. 초·중등학교에서는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NEIS가 있어, 이를 요구조사에 맞게 수정하여 중등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가능한 조사영역과 항목을 시안적으로 제시하고, 그 조사할 이유나 필요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 용도를 제시해보기로 한다.

<표 13> 초등학교(4~6학년) 학습자 집단의 요구조사 '항목'의 예

조사할 항목(안)	조사할 이유, 필요성, 결과 활용
- 스스로 공부하기 좋아하는 교과를 7-10개 중 2개 고르기	- 학생의 교과목 선호도, 교과전담 교사의 확대
- 내 장래를 생각할 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과를 7-10개 중 2개 고르기	- 학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 강화, 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예비조사
-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교과를 1개 고르기	- 수준별 이동수업 시행 여부, 발달 단계에 맞는 교과 교육과정 구성, 해당 교과 교육과정의 수준, 분량, 범위의 적정화 근거 마련
- 공부할 내용 분량이 많고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교과를 1개 고르기	- 수준별 이동수업 시행 여부, 해당 교과 교육과정의 수준, 분량, 범위의 적정화 근거 마련
- 공부하고 싶은 생활(제2)외국어 고르기	- 외국어의 학습시작 시기는 5/6세~12세 이전에 더 좋고, 세계화 다문화 시대에 중요한 것은 외국어 구사능력이므로
- 공부하고 싶은 체육활동(운동 종목) 고르기	- 체육은 전성기가 일찍 오고, 고학년 이후에는 필수선택을 적용

	할 필요가 점차 커지므로
- 배우고 싶은 예술활동(장르) 고르기	- 예술은 전성기가 일찍 오고, 고학년 이후에는 필수선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 내가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 1개 고르기	- 교내외 동아리활동 자원의 조달
- 내가 가고 싶은 중학교 고르기(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일반중, 국제중, 체육중, 예술중, 대안중 등)	- 특수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의 수요 파악, 예체능 및 대안교육 거점 및 중점 학교 수요 파악, 학교수의 확대 및 축소
- 내가 공부하고 싶은 정도 고르기(중졸, 고졸, 대졸, 석사, 박사 등)	- 학제 정비, 진학교육 및 직업교육의 수요 파악 및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
- 내가 선택하고 싶은 직업 분야(대분류를 통한 30개 정도)	-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 파악

<표 14> 중학교 학습자 집단의 요구조사 '항목'의 예

조사할 항목(안)	조사할 이유, 필요성, 결과 활용
- 스스로 공부하기 좋아하는 교과를 10-15개 중 2개 고르기	- 학생의 교과목 선호도, 교과전담 교사의 확대
- 내 장래를 생각할 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과를 10-15개 중 2개 고르기	- 학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 강화,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예비조사
-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교과를 1개 고르기	- 수준별 이동수업 시행 여부, 발달 단계에 맞는 교과 교육과정 구성, 해당 교과 교육과정의 수준, 분량, 범위의 적정화 근거 마련
- 공부할 내용 분량이 많고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교과를 1개 고르기	- 수준별 이동수업 시행 여부, 해당 교과 교육과정의 수준, 분량, 범위의 적정화 근거 마련
- 중학교 선택과목(한문, 환경, 컴퓨터, 생활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중 1개 선택하기	- 학교 교육과정 설계, 해당 교과 교사 수요 파악, 교과서 수요 파악
- 생활외국어 중(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15개 정도)에서 공부하고 싶은 외국어 1개 선택하기	- 학교 교육과정 설계, 해당 교과 교사 수요 파악, 교과서 수요 파악, 외국어의 학습시작 시기는 5/6세~12세 이전이 더 좋고, 세계화 다문화 시대에 중요한 것은 외국어 구사능력임
- 배우고 싶은 직업기술 고르기	- 기술은 전성기가 일찍 오고, 중학교부터는 필수선택을 적용할 필요성이 높음
- 공부하고 싶은 체육활동(운동 종목) 고르기	- 체육은 전성기가 일찍 오고, 고학년 이후에는 필수선택을 적용할 필요가 점차 커짐
- 배우고 싶은 예술활동(장르) 고르기	- 예술은 전성기가 일찍 오고, 고학년 이후에는 필수선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내가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진로/봉사 활동 1개 고르기	- 교내외 동아리/진로/봉사 활동 자원의 조달
- 진학할 고교의 종류 선택하기(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일반고, 과고/외고/국제고, 예고, 체고, 전문고, 대안고 등)	- 특수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의 수요 파악, 예체능 및 대안교육 거점 및 중점 학교, 특수목적고 수요 파악, 학교 수의 확대 및 축소
- 진학할 일반계 고교의 집중과정 선택하기	- 일반고의 진로별 집중과정 설계, 해당 교과 교사 수요 및 교과서 수요량 파악
- 진학할 전문계 고교의 학과 선택하기	- 전문고의 진로별 계열, 학과 설계, 해당 교과 교사 수요 및 교과서 수요량 파악
- 내가 공부하고 싶은 정도 고르기(중졸, 고졸, 대졸, 석사, 박사 등)	- 학제 정비, 진학교육 및 비진학자의 직업교육의 수요 파악 및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
- 내가 선택하고 싶은 직업 분야(중분류를 통한 60개 정도)	-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 파악

<표 15> 진학계 고등학교 학습자 집단의 요구조사 '항목'의 예

조사할 항목(안)	조사할 이유, 필요성, 결과 활용
- 제시한 '진로집중과정' 중에서 1개 선택하기(인문, 사회, 경제, 국제, 이학, 공학, 보건의료, 음악, 미술디자인, 연극영화영상, 문예창작, 단체운동, 개인운동, 스포츠산업 등)	- 학생의 진로 선택과 책임 강화, 학교 교육과정 설계, 해당 교과 교사 수요 파악, 교과서 수요 파악,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과정의 수요 파악 및 개설 계획 마련
- 인문사회/과학기술 계열에서 파생한 집중과정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가장 깊이 있게(6학기, 고급수준) 공부해야 할 교과목 3개 선택하기	- 학생의 진로 선택과 책임 강화, 교과별 이수 계획 수립, 수준별 이동수업 시행 여부, 진로계획에 맞는 교과 교육과정 구성, 해당 교과 교사 교과서 시설의 수요 파악,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조사
- 인문사회/과학기술 계열에서 파생한 집중과정에서는 앞에서 선택한 교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교과목 중에서 보완적으로 혹은 두 번째로 많이(3-4학기 정도, 중급수준) 공부할 교과목 2개를, 예체능 계열에서는 해당 교과 영역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에서 3개를 선택하기	- 학생의 구체적인 진로 선택과 책임 강화, 교과별 이수 계획 수립, 수준별 이동수업 시행 여부, 진로계획에 맞는 교과 교육과정 구성, 해당 교과 교사 교과서 시설의 수요 파악,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조사
- 대학의 진학할 분야 1개 선택하기(문사철, 행정/사회, 경영/경제, 외국어/국제, 기초과학/수학, 공학, 생명/의약/보건, 체육/무용, 군경, 교육/사범/유아, 음악/공연예술, 미술/디자인, 연극영화/영상, 문예창작/문화콘텐츠, 미디어예술 등)	- 학생의 구체적인 진로 선택과 책임 강화, 대학교육과 연계된 고교 교육과정의 설계, 선수학습의 종류 수준에 대한 요구 파악
- 대학 진학시 외국 대학 유학 계획	- 해외 교육에 대한 수요 파악, IB 등 국제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 파악, 국내 교육과정의 국제화 수준 제고
- 특정 대학이나 모집단위에 진학하기 위해, 고교 수준 이상인 대학수준(UP)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혹은 잘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과목 1-3개 선택하기	- 학생의 구체적인 진로 선택과 책임 강화, 대학교육과 연계된 고교 교육과정의 설계, 선수학습의 종류 수준에 대한 요구 파악
- 교과(국어, 수학, 사회, 영어, 과학 등) 중 중학교 이하의 공부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 고르기	- 교양수준의 공부 중 결함이 있는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 중학교 이하 과목을 종합 정리할 기회를 주기 위함
- 생활외국어 중(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15개 정도)에서 공부하고 싶은 외국어 1개 선택하기	- 학교 교육과정 설계, 해당 교과 교사 수요 파악, 교과서 수요 파악, 세계화 다문화 시대에 중요한 것은 외국어 구사능력
- 배우고 싶은 직업기술 고르기	- 교양으로서 기술은 필수선택을 적용할 필요성이 높음
- 공부하고 싶은 체육활동(운동 종목) 고르기	- 교양으로서 학생맞춤형 운동은 필수선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배우고 싶은 예술활동(장르) 고르기	- 교양으로서 학생맞춤형 예술은 필수선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내가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봉사/진로 활동 1개 고르기	- 동아리/봉사/진로 활동 자원을 교내외에서 미리 조달하기 위함
- 내가 공부하고 싶은 정도 고르기(고졸, 대졸, 석사, 박사 등)	- 학제 정비, 진학교육 및 비진학자의 직업교육의 수요 파악 및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
- 내가 선택하고 싶은 직업 분야(소분류를 통한 100개 이상에서)	-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 파악, 진로 의식 및 결정과 준비 강화

<표 16> 직업계 고등학교 학습자 집단의 요구조사 '항목'의 예

조사할 항목(안)	조사할 이유, 필요성, 결과 활용
- 제시한 '과정(계열, 분야)' 중에서 집중해서 학습할 분야 1개 선택하기(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 해운, 가사 실업 등)	- 학생의 진로 선택과 책임 강화, 학교 교육과정 설계, 해당 교과 교사 수요 파악, 교과서 수요 파악,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분야의 수요 파악 및 개설 계획 마련, 전문고 학교수의 확대 및 축소
- 각 과정(계열, 분야)에서 제시한 학과들 중에서 1개 선택하기	- 학생의 진로 선택과 책임 강화, 교과별 이수 계획 수립, 진로계획에 맞는 교과 교육과정 구성, 해당 교과 교사 교과서 시설의 수요 파악, 전문고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조사, 학과 수나 종류의 확대 및 축소

- 직업 수행에 필요한 능력 취득의 충분조건으로서 고교 교육과정의 특성, 실험, 실습, 실기의 기회의 충분성	- 전문고 교육과정의 개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선, 진로계획에 맞는 교과 교육과정 구성, 실습의 확대 혹은 축소를 위한 조사
- 특정 산업,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면허증 중에서 취득할 것 선택하기, 혹은 특정 산업,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실습, 실기 중에서 취득할 것 선택하기	- 외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선, 진로계획에 맞는 교과 교육과정 구성, 실습의 확대 혹은 축소를 위한 조사, 실습보조 교사의 수요 파악, 실습을 위한 교내외 자원의 조달 계획 수립 등
- 학교 학습내용과 활동의 어려운/쉬운 정도	-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학습능력에 맞는 교과 내용 수준, 분량, 범위의 적정화
- 대학 진학 여부	- 전문고 교육에 대한 수요 파악, 학생의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의 구현, 전문고 교육의 실효성 제고, 일반고 전환 여부 등
- 대학 진학시 동계 진학 여부 혹은 대학의 진학할 분야 1개 선택하기(문사철, 행정/사회, 경영/경제, 외국어/국제, 기초과학/수학, 공학, 생명/의약/보건, 체육/무용, 군경, 교육/사범/유아, 음악/공연예술, 미술/디자인, 연극영화/영상, 문예창작/문화콘텐츠, 미디어예술 등)	- 학생의 구체적인 진로 선택과 책임 강화, 대학교육과 연계된 고교 교육과정의 설계, 선수학습의 종류 수준에 대한 요구 파악
- 대학 진학시 외국 대학 유학 계획	- 해외 교육에 대한 수요 파악, IB 등 국제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 파악, 국내 교육과정의 국제화 수준 제고
- 내가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진로/봉사 활동 1개 고르기	- 교내외 동아리/진로/봉사 활동 자원의 조달
- 내가 공부하고 싶은 정도 고르기(고졸, 대졸, 석사, 박사 등)	- 학제 정비, 진학교육 및 비진학자의 직업교육의 수요 파악 및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
- 내가 선택하고 싶은 직업 분야(소분류를 통한 100개 이상에서)	-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 파악, 진로 의식 및 결정과 준비 강화

교과교육에서도 어떤 내용이나 경험이 가장 절실한 것인지, 그것들은 언제 교육하는 것이 적기인지 등 교과교육의 계열성 확립에 필요한 조사를 종합적, 장기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두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다. 각 교과별 학생들의 발달 상황이나 성취 정도를 확인하는 연구를 종합적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것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개정기마다 일부 문항은 가감하면서 조사를 해두어야 장기간 변화추이를 볼 수도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서 장기적으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해야하는데 이런 데에는 재정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를 위한 한 목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문항 개발하는 비용의 일부만 돌려도 가능한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다. 과학적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교육과정기준 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역대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와 외국의 그것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만든 국가교육과정기준정보센터(NCIC)를 구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공통필수와 상이선택 교육과정, 학교급별과 집단별 교육과정, 구성영역별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 실현 상황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피드백의 한 살이를 점검해나가는 CCDR(Center for Curriculum Research

and Development)를 전국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 설치하고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연구 개발, 실행 모니터링, 평가 질관리를 기본 축으로 하되, 인프라 구축이나 분석 비용이나 장비가 많이 드는 패널 데이터 구축 및 그 연차별 분석 보고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별은 역량있는 연구소나 대학에 분담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3단설계로 해서 취학전, 초등, 중학, 진학계 고교, 직업계 고교, 영재아, 장애아, 교육취약계층(대안학교아, 학습중단아, 학습부진아, 다문화 가정 자녀, 탈북자 등) 등에 대한 교육과정기준의 연구 개발 질 관리를 분담하는 것이다. 또한 교과별 교육과정기준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체육으로 하고, 교과통합적인 것, 창체 등으로 나누어 연구 개발 질 관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산된 것을 종합 관리 조정하는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현장 교원에 의한 교원을 위한 기준 개발

이 문제는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인 총칙과 각칙(교육과정은 교육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므로 일정한 규칙이나 기준, 규범, 모델 등을 제안하는 것이므로 규범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총칙이나 각론보다 총칙이나 각칙이라고 함이 적절한 용어가 된다. 언젠가 이런 용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의사소통상 총칙과 각론을 계속 사용한다.)의 주요 사용자, 독자가 누구냐의 문제이다. 현재 총칙의 주독자, 주사용자는 교육과정 연구자, 각론개발자이고, 각론의 주독자, 주사용자는 각 교과의 교과서구성자이다. 즉 국가교육과정기준은 결국 교육과정이 구현되는 핵심 장소인 학교의 교육활동의 기준으로서 작동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활동의 기준으로서 작동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학교 교육활동의 핵심 주체인 학교장과 교사들이 주독자, 주사용자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장과 교원들은 국가교육과정기준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초·중·고등학교 법 제23조 1항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뿐 기획, 계획, 편성을 하지 못하고 오직 운영할 뿐이다. 학교와 교원들은 피동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구현 장소는 학교인데 정작 학교 교육활동의 질을 결정하는 주체들은 교육과정을 그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의 여건과 학교내 구성원(특히 학생들)의 특수한 요구에 바탕하여 구성하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학교장은 교육과정 총칙에 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게 된다. 학교장은 학교를 교육활동의 품질을 중심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적인, 대외적인, 비본질적인 것을 중심에 두고 경영하는 것이다. 특히 교장 임기가 4년 중임으로 바뀐 이후에 전연에서 역산하여 8년 이전에 교장에 된 이들은 초빙교장제 등을

활용하거나 임기를 조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2년 미만의 짧은 임기를 수행하여 8년 중임 조항에 걸리지 않게 한다. 결국 학교장들은 장기적인 학교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임 학교를 잠시 머물다 가는 장소로 여긴다. 교사들도 초등은 업무 부담의 차이로 해마다 학년을 옮기고, 일정기간마다 학교와 지역을 옮겨 다녀서 결과적으로 내 학교가 없고 학교의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ownership)이 없는 것은 결국 교육과정에 대한 주인의식이 부족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이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교육에 이해가 높고 반성적 실천(reflective practice) 경험이 있는 현장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간 특정 분야 학문적 주제를 전공한 교수들에 의한 교과교육과정기준 개발은 학교교육에서 ‘이론’에 치우치도록, 진도 나가기에 바쁘도록 만들었음을 각성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공계 진로의 교과교육과정기준을 개발할 때에는 경험있는 현장의 이공계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교과교육과정기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초중학교 과학기술교육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의 지속이 중요하므로 어려운 공식 등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험과 실습을 통해서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습득하도록 과학기술 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있어 현장에서의 실천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 참여한 각 교수들은 이론적으로 특정 분야나 주제의 중요성, 필수성, 타당성을 강조하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엄청난 분량이 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교과들의 용어만 다를 뿐 중복되는 내용도 적지 않게 된다. 학교교육이 이론으로, 진도빠기식으로, 시험문제풀이로 흐르도록 하는 것도, 각 교수가 자기 전공 분야를 가르쳐야 완결된 교과교육이 된다고 보는데 있다. 그것은 초중등교육에서 각 교과교육이 대학의 ‘식민’ 상태를 의미하며, 대학 개론서의 축약에 불과하게 만든다. 융합인재교육 교육에서는 그 이론과 경험을 통해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현장 교사가 주축이 되어 교과교육과정기준을 만들도록 인적 구성에 매우 유념해야 할 것이다.

원리적으로 말하면 대학에 가까울수록 대학교수들의 교육과정적 영향력은 커져야 하며, 대학과 멀어질수록 교사들의 그것은 커져야 한다.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 교수들의 영향력은 고교에서 해당분야를 공부하여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그쳐야 할 것이다. 특성화고를 비롯한 기술 분야의 경우 산업계의 영향력이 더 커져야 공허한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나머지는 모두 교사들에 의해 교과교육과정기준이 만들어지고,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현장 적용가능한 영향력있는 교과교육과정기준이 될 것이다.

- 개정·개발의 주체, R&D과정, 제작 과정, 개정 과정과 한살이, 어떤 형식과 내용

을 갖도록 할 것인가? 총칙 개발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교육과정기준위원회(교육과정 전모 잘 아는 전문성,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잘 아는 사람, 교육 개선 의지 뚜렷·굳건함, 교과이해관계 무관·초월, 사회 각계각층 대표들의 결과물 추진 과정 거치도록)를 구성하되 그 요건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표 17> 기준개발 참여자

구분	총칙		각칙	
	국가교육과정기준	학교교육과정기준	공통필수 교육과정기준	상이선택 교육과정기준
기준개발 참여자	연구자, 교원, 학부모, 학생, 일반 시민	교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인사	교원, 연구자, 일반시민, 학생	교원, 연구자, 대학/산업계 인사, 학생

각칙 개발에서 우수한 교단교사가 주축이 되도록 한다. 그간 국가교육과정기준을 만들 때 주사용자, 주독자를 분명히 명시하지 않고 만들어 온 것도 이런 쓰이지 않는 실효성 낮은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막연히 좋은 교육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은 정치적으로 공약된 그 무엇을 실현하려고 개정을 자주 한 것이다. 학교장은 교육과정에 대해 무지, 무관심, 무책임한 편이었고, 교사도 교육과정을 읽을 필요도 없이 공문에 의지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 온 셈이다.

공통필수 교육과정에서 보편성을 확보하는 속에서 학교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원의 교육과정 결정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가 될까? 상이선택 교육과정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속에서 학교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원의 교육과정 결정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

초중등교육법 제23조가 “학교장은 교원들과 합심하여 학교와 지역의 특수한 요구에 비추어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로 바뀐다면,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기 위한 모본은 학교 밖에 뚜렷한 기준이 하나 있어서 학교교육과정이 보편성과 다양성을 견지하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교육감은 지방자치, 선출직의 권한을 발휘해서 해당 시도의 전체 학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별도로 만들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해당 지역 학교들을 위한 장학자료를 만들며, 정작 학교장과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할 책임도 권한도 없다면, 국가교육과정기준이나, 시도 지침, 지원청의 장학자료는 무엇에 쓰이는 것일까? 형식 요건을 갖춘 문서를 위한 문서가 되고 마는 것이다. 물론 좋은 문서가 좋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좋은 문서의 안내 없이 좋은 교육활동을 실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결국 오늘날 학교교육과정은 많은 경우 형식 요건을 갖춘 문서에

불과하다. 문서대로 실천한다면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더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18>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의 주사용자 변화에 따른 장단점과 개선조치

주사용자 구분	현행(각론 개발자, 교육과정 연구자)	변화 방향(학교장)
장점	- 국가의 각종 정책적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 - 전국에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합의된 최상위의 교육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 총칙의 형식과 내용을 쉽게 정할 수 있다. - 보편성, 공통성을 반영하기 쉽다.	- 전국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의 특수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다. - 학교에서 실행될 수 있는 교육과정기준이 될 수 있다. 총칙이 구현되는 장소나 주사용자가 분명해진다. - 학교가 명실 공히 교육과정의 구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학교는 교육활동, 교육과정 중심으로 경영될 수 있다. - 학교장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학교교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 전문성, 책무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교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주인의식이 발달할 수 있다. -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장은 교사, 지역사회인사, 학부모, 학생들과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해진다. -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 - 사립학교의 독립성, 자율성을 강화시켜준다.
단점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3조 1항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권만 허용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 측면에서 피동적인 위치에 있다. - 학교가 참고할 기준이 국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제시되어 갈등과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 -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개발의 원의가 왜곡될 수 있다. - 총칙 취지 구현의 주책임자가 불분명하다. - 특정 정치적 견해나 특정인의 의견에 따라 총칙의 특색이 쉽게 좌우된다. - 지역과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 총칙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기 어렵다. - 학교교육과정의 편성과 실제 운영 사이에 괴리가 적지 않다.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3조 1항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허용하는 개정이 요구된다. - 학교장의 특수한 교육이념이나 목표가 국가의 그것과 충돌할 수 있다. - 학교장의 잘못된 교육이념이나 철학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학교장과 교사들의 교육이념과 목표가 다른 경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학교장과 교사들간에 교육과정 결정 권한의 배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독재적인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간섭이 커질 수 있다. - 총칙을 학교장친화형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부족하여, 그 형식과 내용을 질 높게 만들기 쉽지 않다. - 학교장의 교육과정에 관한 낮은 전문성으로 학교교육과정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달라서 전학, 복학 등으로 학습 결손이 생길 수 있다. -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학교교육과정의 특색이 자주 변경될 수 있다. - 학교장의 교체나 교원의 이동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학교의 교육이념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개선 조치	- 학교 교육활동이 교육과정 중심으로 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교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 전국 공통성과 학교 및 지역 특수성에 대한 적절한 안배가 사전에 필요하다. 상호 갈등의 여지를 사전에 줄이는 조치를 취한다.

	높인다. - 총칙의 형식과 내용을 현장 지향적이 되도록 한다.	- 학교장의 교육과정적 자율성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 요구된다. 자율성을 발휘할 부분을 명시한다. - 학교장친화형 총칙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기초연구를 강화한다. - 교원들의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연수를 실시한다. - 교원의 인사이동을 최소화하여 교육과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 학생들의 전학 휴학 후 복학 등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한다.
--	---	--

<표 19> 국가교육과정기준 각론의 주사용자 변화에 따른 장단점과 개선조치

주사용자 구분	현행(교과서 개발자)	변화 방향(교사)
장점	- 각론에 따라 일관된 교과서 개발이 가능하다. - 질 높은 교과서의 보급으로 전국에 일정 수준의 교육성과를 올릴 수 있다. - 교과서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 교과서에 의해 교사 수업이나 학생들의 학습에서 그 수준, 범위, 깊이, 분량을 쉽게 정해줄 수 있다.	- 각론이 구현되는 장소나 주사용자가 분명해진다. - 교사의 각론에 대한 이해나 해석 능력이 높아진다. - 교사가 각론 내용을 주체적으로 해석하여 학생과 학교,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반영한 교재를 자체 개발할 수 있다. - 교사가 교육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숙고를 가능하게 한다.) 교사가 반성적 실천인이 될 수 있다. - 교사의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주인의식이 높아질 수 있다. - 교과에 따라 교사친화형, 수업친화형의 각론의 형식과 내용의 적합성을 달리할 수 있다. -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에 맞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 교육의 주체로서 동료 교사, 지역사회인사, 학부모, 학생들과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해진다.
단점	- 각론이 구현되는 장소나 주사용자가 불분명하다. - 교사들이 각론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진다. 교육과정 문서가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 교사의 수업이 교과서, 교사용지도서, 참고서, 문제집 등에 의존한다. - 수업이 과도하게 교과서 중심, 교사의 설명 중심이 될 수 있다. - 교과서나 수업 내용이 학문적 체계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지식 전달의 수업이 되기 쉽다. - 교과서와 수업 내용이 진도마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해진다. - 교사의 입장에서 각론과 교과서 두 개의 수업지침(기준)이 있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 학생들의 학습량은 많아지고 경험은 빈약할 수 있다. - 각종 평가가 교과서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	- 각론을 교사친화형, 수업친화형으로 제작한 경향이 부족해서 도입 초기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 교사의 교육과정 결정권과 전국단위의 통일성이 충돌할 수 있다. 특히 이념지향적인 교과목의 경우 갈등이 야기되고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 교사의 역량에 따라 교재 구성, 수업, 교육의 질이 차이날 수 있다. 역량이 떨어지는 교사들의 교재와 수업의 질이 낮으면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동일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간에 수업 내용의 수준, 범위, 깊이, 분량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정하기 어렵다. - 평가 내용이나 교육성과에서 차이날 수 있다. - 전국단위의 통일성 유지나 교육의 질 관리가 쉽지 않다.
개선	- 각론을 학교 현장과 수업 친화적으로	- 각론을 교사친화형, 수업친화형으로 개발하기 위

조치	만든다. - 교사의 각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수를 실시한다. - 교과서 의존에서 교육과정기준 의존으로 바꾸어 나간다.	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 교사들이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의 정도에 대해 사전에 공지한다. 특히 이념지향적인 교과의 경우 전국적인 기준을 분명히 한다. - 교사들의 교육과정기준 개발 능력, 기준 해석 능력, 교과서 구성 능력 및 수업 기획력, 평가도구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 교사들간에 협동적 교재 개발과 협력적인 수업 기획을 위한 기회를 늘린다. - 교사들의 특색있는 교재나 수업을 다양성 차원에서 관용하는 교육문화를 확산시킨다.
----	---	--

현재 초중등교육법 23조는 다음과 같다.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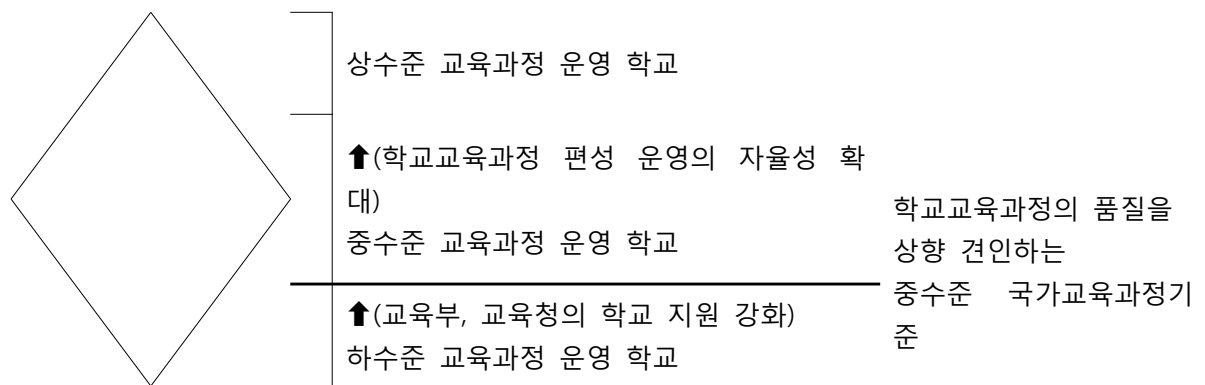
1항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그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사실상 편성하지만 교육부, 교육청에서 오는 기준을 보고 그것에 따라 편성 운영한다. 사실상 학교는 교육과정에 관한 한 매우 피동적인 위치에 있다. 교육청의 편성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각종 ‘감사’ 등에 걸리지 않고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자주성을 확보하고 있어 사실상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학교의 적극적 교육과정 편성 운영 활동은 사립초등학교나 자율형 사립고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사립초등학교가 경영 위기에 처하였을 때 학교들은 열린교육을 주창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적이 있다. 자율형 사립고들은 설립이념이나 교훈에 따라 자체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물론 대수능이나 국가의 교육과정 총칙을 준수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 이들 학교들은 국가교육과정기준 이상의 질 높은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즉 사립학교들에게 주어진 교육과정 편성에서 자율권은 학교교육과정의 품질을 높이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의 학교들을 아래와 같이 마름모로 표현할 때 중수준 교육과정 만들기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 기준 이상으로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게 함으로써, 품질이 매우 처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 교육청이 그 원인을 파악하고 특별 지원을 강화해서 중수준 이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육과정기준의 개정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가령 중학교에서 집중이수를 못하겠다고 하든가, 소규모학교에서 유초등 협동 운영이나 초중 협동 운영이 어려운 원인을 파악하여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그 문제점을 해소 주어야 학교가 질 높게 운영될 것이다.



[그림 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념도

누가 교육과정기준 개정의 주체가 될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간은 주로 연구자인 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교육보다는 학문적 수련으로서 교육과정을 간주하여 개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교수들의 하위 전공 영역에 따라 이를 매겨하여 포함시킴으로써 현장 수업은 진도를 마치기에도 벅찬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교과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총칙은 거시적이고 유기적인 종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면에서 연구자나 대학 교수가 더 적절할 수도 있다. 또한 진학계 고교에서 공부하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측면에서 진로별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에도 대학 교수가 더 적절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우수교원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교육단계(혹자는 그 예로 고졸이나 전문대 출신 교원이 적지 않은 취학전 단계를 말한다)에서도 대학교수가 주축이 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과 멀수록, 우수한 현장 교원이 많은 학교급의 각론들은 교사들에 의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표 20> 각 기관과 집단 특성에 따른 교육의 강조점

기관과 집단	교육의 강조점
취학전 교육기관	초보 교육, 사회적 육아의 확대 과정
초등학교	기초 교육, 생활과 학습에서 기초 확립
중학교	기본 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일차적, 의무무상교육의 완성
중도탈락자 집단	기초직업기술교육, 생업을 위한 배려, 의무무상화
장애인, 특수아 집단	기초교육과 기초직업기술교육, 의무무상화
영재집단(과고, 영재고)	교육의 고도화
진학계 고교(진로별 교육)	해당 진로집단의 높은 수준 교육 달성
	진로 아닌 분야의 보완적, 교양적 교육
직업계 고교(특성화고) 진로별 교육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기술의 과학화)
대학 교육과정	전문 직업 기술 교육
대학원 교육과정	전문 직업 기술 교육
성인 사회 교육	교양 교육

<표 21> 각 교육기관과 집단의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기준 개발 참여자 배분(안)

기관과 집단	교과교육과정기준 개발 참여자 (숫자는 팀별 인원)		교육의 강조점
	교수/연구자	학교 교원	
취학전 교육기관	교수4, 교사1	교사5	초보 교육, 사회적 육아의 확대 과정
초등학교	교수1, 교사1	교사8	기초 교육, 생활과 학습에서 기초 확립
중학교	교수2, 교사1	교사7	기본 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일차적, 의무무상교육의 완성
중도탈락자 집단	산업체 인사5	교사3, 교수2	기초직업기술교육, 생업을 위한 배려, 의무무상화
장애인, 특수아 집단	전문가4	교사6	기초교육과 기초직업기술교육, 의무무상화
영재집단(과고, 영재고)	대학교수6	교사4	교육의 고도화
일반고 진로별 교육	교사7	교수3	해당 진로집단의 높은 수준 교육 달성
	대학교수6	교사4	진로 아닌 분야의 보완적, 교양적 교육
특성화고 진로별 교육	산업체 인사5	교사3, 교수2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기술의 과학화)

4) 연차 개정

모든 학교급,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한꺼번에 하는 동시개정에 대한 대안으로, 학년군별, 학교급의 교육과정을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개정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얼마나 시차를 두고 할 것인지, 다른 하나는 어느 학교급부터 할 것인지를 말한다.

첫째, 이 문제는 개정 대상의 범위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개정 대상이 많다면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적다면 단일한 시점에서 시작하고 끝낼 수도 있다. 즉 학교급을 따로따로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연동해서 같이 개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

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단일 학교급, 단일 학교급과 연동되는 인근 학년, 여러 학교급, 전체 학교급으로 개정 대상이 나뉘어진다. 취학전 기관(유치원), 초등 저학년만 개정할 수도 있고, 초등학교만 개정할 수도, 고교의 교육과정만 개정할 수도 있다. 대체로 부분수정이 아니라 전면개정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단위 학교급(취학전, 초등, 중, 진학계 고교, 직업계 고교, 특수한 여건의 학교나 집단 등)과, 그 인근에 접촉되고 연계되는 측면(취학전과 초등 저학년, 중학교와 초등 고학년 및 고교 저학년, 고교와 중학교 고학년 및 대학 저학년 등), 좀더 크게는 취학전 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로 나눌 수도 있다.

둘째, 학교급간에 얼마나 시차를 두고 개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뒤에 논하는 순차 개정 문제와 관련된다. 대체로 여러 학교급간에는 1년의 시차를 두고, 하나의 학교급과 인근 학년은 1학기의 시차를 두고 진행해도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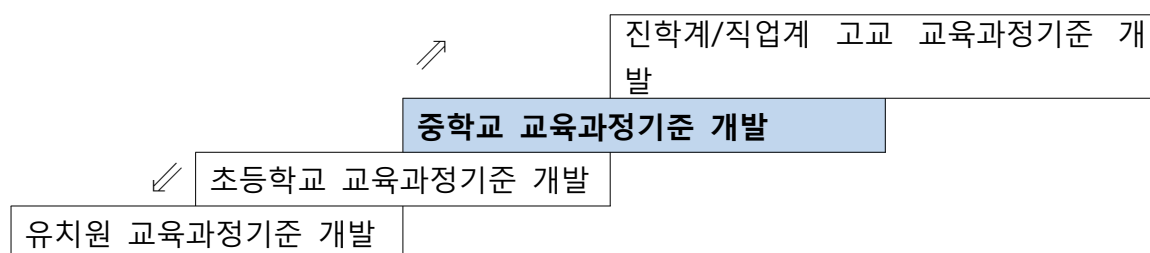
연차개정에서 얼마나 시차를 두고 개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개정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모든 학교급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한꺼번에 하거나 한 두 학기의 시차를 두고 개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취학전이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합의하기도 쉽고, 기초연구가 되어 있는데 반해, 중등학교 교육과정은 큰 틀에서 기초 연구를 해둔 경우가 많지 않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준비된 연구는 많지 않다.

셋째, 어느 학교급부터 개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흔히 생각하듯이, 취학전과 초등 저학년부터 차례대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동 중심이므로, 영유아의 발달에 기초하여 시작점을 잡기란 어렵다. 왜냐하면 유아들의 사회적 욕구를 100% 다 하는, 모두 취원하는 때를 시작점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유치원 마지막 학년 혹은 취학전 1년을 의무 무상 교육화하면 표준점, 시작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아직 취학전 기관은 교육과정 개정의 시작점, 출발점, 표준점으로 잡기에는 곤란하다.

역으로 초중등 교육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고교부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교는 학생들이 졸업 후 대학과 연결되거나, 산업체와 연결되므로 외부적 연결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다. 즉 대학과 산업체의 요구가 교육과정 개정의 초점이 된다. 고교부터 개정하는 것은 하향식(top-down)방식으로 달성해야할 수준을 놓고, 중학교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만약 그 수준이 높으면 세분화, 전문화를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그 수준이 낮으면 좀더 폭을 넓혀서 통합과 융합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중학교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중학교를 중심으로 먼저 하고, 이를 위로는 고교로, 아래로는 초등과 취학전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방법이 된다. 중학교는 학생들이 생활과 공부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때이고, 기본 교육의 마무리이고, 기본

교과를 중심으로 통합적 융합적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이며, 진로교육의 본격적인 시작 시기이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의 수준을 잡기도 편리하다. 중학교를 마치는 것은 의무교육의 마감이고, 민주시민교양교육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림 2] 학교급별 교육과정기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차적 개발

5) 순차 개정

이것은 공통필수와 상이선택 교육과정, 총칙과 각론, 특히 각론의 일시개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순서를 세워 차근차근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각종 교육과정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소요기간에 대해 논해보기로 한다. 최소한의 기간은 질을 담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이다. 교육과정기준은 먼저 공통필수와 상이선택으로 나뉜다. 각각은 총칙, 각론의 총칙, 각론의 각론으로 나뉜다. 적용은 결국 학교단위에서는 총칙이고, 교실(수업)단위에서는 각론의 각론이다. 총칙을 만드는데 최소 1년, 각론의 총칙을 만드는데 최소 1년, 각론의 각론을 만드는데 최소 1년이 걸린다고 하자. 그러면 초중학교와 같은 공통필수 교육과정기준을 먼저 만드는데 1년, 고교 이후 진로별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1년을 쓴다고 하자. 그리고 공통필수 교육과정기의 각론(교과군별 교육과정기준)을 만드는데 있어 최소한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예체능계로 나누어 각 1년을 쓴다고 하자.

상이선택 교육과정기 진로별 교육과정도 같은 주기를 겪는다. 다만 상이선택 교육과정기준, 즉 진로별 교육과정기준은 교과 밑에 다양한(무수한) 과목, 과정이나 학과별로 교과목들이 수준별·영역별로 엮이도록 개발해야 하니까 개발에 추가로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교육과정기준이 개발 고시된 후 적용을 위한 준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재의 개발 보급이고, 시설과 설비의 보완이다. 이를 위해서도 각 학년별로 1년은 족히 걸린다. 적용의 경우 첫째는 개발된 교육과정기준의 수정 보완을 위한 시험적용을 하고, 두 번째 해부터 본격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본격 적용을 얼마나 하는가의 문제이겠지만 가장 짧아도 교육과정기준의 적절성,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각종 교육과정기준 개발과 그 적용의 최소한의 총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다. 개발의 최소 주기는 4년이고, 적용의 최소 주기는 3년이라고 할 수 있다. 공통필수 교육과정기의 개정 및 적용의 한 살이는 좀 줄어들 수 있고, 상이선택 교육과정기의 그것들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표 22> 연차별 순차별 교육과정기준의 개발과 적용

	연차별 순차별 개발				연차별 순차별 적용			
	1 차 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
공 통 필 수 (유 초 중)	총칙	각론의 총 칙(1) 인문 사회계 교 과	각론의 각 론 (국 어 , 외국어, 사 회)	교재의 개발 시설의 보완 적용의 준비	시행 1차년 도 (시 험 적 용 , 수정 보완)	시행 2차 년도	시행 3차 년도 (효 과 검증)	-
		각론의 총 칙(2) 과학 기술계 교 과	각론의 각 론 (수 학 , 과학, 기 술)	교재의 개발 시설의 보완 적용의 준비	시행 1차년 도 (시 험 적 용 , 수정 보완)	시행 2차 년도	시행 3차 년도 (효 과 검증)	-
		각론의 총 칙(3) 예체 능계 교과	각론의 각 론 (예 술 , 체육, 창 체)	교재의 개발 시설의 보완 적용의 준비	시행 1차년 도 (시 험 적 용 , 수정 보완)	시행 2차 년도	시행 3차 년도 (효 과 검증)	-
상 이 선택 (고)	-	총칙	각론의 총 칙(1) 진학 계 과정	각론의 각론 (과정별 교 과목)	교재의 개발 시설의 보완 적용의 준비	시행 1차 년도 (시 험 적 용 , 수정 보완)	시행 2차 년도	시행 3차 년도 (효 과 검증)
			각론의 총 칙(2) 직업 계 중계열 과 학과	각론의 각론 (학과별 교 과목)	교재의 개발 시설의 보완 적용의 준비	시행 1차 년도 (시 험 적 용 , 수정 보완)	시행 2차 년도	시행 3차 년도 (효 과 검증)

6) 중주기 개정

교육과정기준을 전체적으로 전면개정을 할 때에는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기적인 연구를 축적하여 준비된 가운데 전면개정을 하는 것은 적어도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학생, 교원, 학부모, 일반인, 전문가의 교육과정적 요구를 종합 분석하고, 교육과정 운영 평가, 학생의 학업을 비롯한 교육적 성취를 종합 분석하여 수년간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교육과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수시 개정은 작은 구절을 바꾸는 것에 적용해야 한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은 이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여기에는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면 교과서도 전면 개편하고, 교육과정을 부분개정하면 교과서도 부분 수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과정 문서의 변화는 전면개정과 그 부분수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7.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분수정은 교육과정기준의 한 살이(cycle)를 다 거칠 필요는 없지만, 전면개정은 그 한 살이를 다 거친 후에 평가를 하고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사실상 연구자가 보기에 우리나라 교육과정기준 문서의 형식이나 내용은 아직 후진적이다. 일부 사람들은 교육과정기준이 잘 되어 있는데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앞서 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나라의 잘 된 문서를 보지 못한 판단일 수 있다. 현재 수시개정은 부분수정에 해당한다. 수시개정만 해서는 전체적인 형식이나 내용을 환골탈태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면개정은 자주 남발해서도, 준비없이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전면개정에는 엄청난 연구의 축적과 개정을 할 충분한 이유를 축적하고, 관련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치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개최하는 나라가 운동장과 경기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이, 개정 고시한 후에 제대로 운영, 적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표 23>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의 변화

	전면개정	부분수정
총칙	①	②
각칙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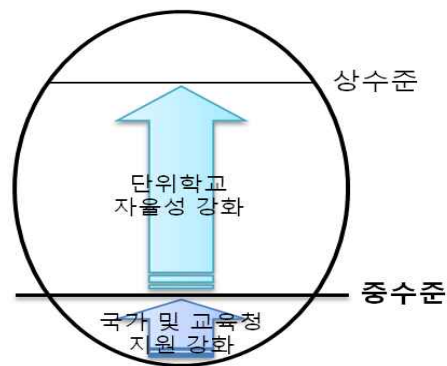
총칙이나 각론의 전체적인 구조를 크게 바꾸는 전면개정은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하고, 그 필요성, 타당성, 기대효과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고시문서의 연구-개발-실행-평가-개선의 한 살이를 거친 후 체계적인 평가와 개선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다. 전면개정은 장주기 개정을 하되, 그 사이의 부분수정은 최소한 1-2년의 시간을 두고 정기개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7) 중수준 개발

교육종합시정서로서 그리고 교육종합계획서로서 국가교육과정기준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높은 상수준은 달성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어느 학교나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달

성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낮은 성취를 보이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끌어올리는 ‘중’수준 기준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예는 이미 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간호교육을 4년제로 하면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인증하는 데에서나, 공학교육을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공학교육인증제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IB world school에서도 회원 학교에 대해 교육활동 기준을 엄정하게 제시 적용하고 있다(박하식, 2013).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기준도 현재 ‘가장 앞서가는 초등학교’의 교육활동의 모습이 미래 어느 시점에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교의 교육활동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기준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 하는 학교’의 교육활동이 교육과정기준으로서 작성되고 모든 학교가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교육과정기준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기준에서 어떤 항목은 5년 후를 지향하지만 어떤 항목은 30년 후를, 어떤 항목은 50년 후를 바라보면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3] 중수준 교육과정

예를 들면, 현재 초중등학교 과학기술교육의 정점에는 수능형의 선다형 문제풀이, 정답맞히기가 있다. 이것은 초중등학교 교육 전체의 성격을 좌우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과학기술 시간에 반드시 해보아야 할 관찰, 실험, 조작, 제작, 적용 등을 안 해도 되도록 만들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교육은 인문사회과학은 ‘이념’에 경도되어 있고, 과학기술교육이 공허한 ‘이론’으로 쏠리고 있다. 심지어 과학기술에서 실험과 실습을 하는 것이 더 손해나는 것처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과학기술자들은 결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과학은 사물과 자연의 이면에 있는 원리와 법칙을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은 과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의식주 생활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져오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현재 교육적 폐단을 광정(匡正)하여 교과교육 본래의 특성과 목적으로 되돌려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실험과 제작 등이 초중등학교 과학기술 교육에서 핵심이라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반드시 하는 수업이 되도록 유도해주어야 한다.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실험과 제작 등을 전혀 하지 않는 교육이라면 이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교육과정, 교과서에 특기해주고, 그것을 융합인재교육 교육으로 해야 한다면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설비 및 재료, 나아가 교원을 도울 시간제 교사(강사)를 지원 제공하여서 과학기술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주어야 할 것이다.

과학을 과학답게, 과학을 기술과 연결하여, 기술을 기술답게, 기술을 과학과 연결하여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교과 수업을 바꾸도록 교육과정기준을 만들어져 한다. 교육과정 개정을 하였는데 학교교육에 아무런 변화를 불러오지 못한다면 무익한 노력일 것이다. 적어도 교육이 열악하게 진행되는 학교들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주는 교육과정 개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략해왔던, 하지 않던 실험과 실습을 하도록 필수사항으로 표기해주고, 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실험과 실습없는 과학과 기술 수업으로부터 바꾸어서, 과학의 질문에 대한 답을 궁리하고 수행하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 기술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창의적 설계와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제작을 통해 문제해결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실험과 실습 없는 과학 기술 교육에서 실험과 실습이 있는 과학 기술 교육으로 환골탈태를 하고, 그것으로 학생들은 수행능력을 표현할 기회를 가지고 이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소질을 개발하고 진로를 발견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가장 게으르게 교과교육답지 않게 수업하는 교사들을 방치하는 교육과정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가령 그런 학교와 교사에게서 한 번도 과학을 과학답게, 기술을 기술답게 배워본 바가 없다면 과학기술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결여하는 것이다. 이런 질 낮은 학교와 교사 아래에서 학생들의 호기심은 죽어가고, 이공계로 진출할 수 있었던 인재들이 손쉬운 분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전혀 과학기술교육답지 않은 하위 30% 학교의 수업이 과학기술교육으로 도약하도록 유도하는 ‘중’수준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향후 개발 고시될 교육과정기준을 통해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교육환경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교사와 교과서만 있고, 실험과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및 재료와 자재 그리고 그것을 구입, 수리, 유지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강조하는 질 높은 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질 높은 교육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교육문제종합해결책으로서 교육과정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8) 교육활동(현실) 개선용 개정

국가교육과정기준은 성격상 교육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모든 학교들의 교육활동의 기본 방향과 방안을 규정하는 교육종합계획서이면서 교육활동의 계획, 실행, 평가를 둘러싼 적폐를 개선하는 교육종합시정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특히 국가의 20-30년 후의 사회상, 인간상(시민상), 교육상을 전망하면서 최근 2-3년 안에 무슨 연구를 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밝히는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상적인 지향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항목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도리어 현실에 안주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지침이 된다.

2009 개정 국가교육과정기준에서 현대사회와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예술을 음악과 미술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장르를 포섭하도록 하기 위해 ‘예술’이라는 교과명을 도입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 인사들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항의를 하지 교육부는 이를 후퇴시키는 조항을 마련해주었다. 초등학교를 벗어난 중학교와 심지어 고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도 이런 규제를 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예술이 연극, 영화, 영상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공연으로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음악과 미술로 한정된 것은 학교교육을 퇴행시킬 수 있고 발전적인 규정이 아니다.

초등학교	(10)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중학교	(5)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고교	⑤ 예술계열 고등학교 이외의 고등학교에서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 고 한 집중이수에 대한 규정들도 학교급으로 보면 중학교가 가장 적절한데, 정작 중학교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담임교사가 수업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초등학교나 과목당 단위수가 5단위인 고교는 집중이수의 대상이 아니어야 함에도 도리어 초등학교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5)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여건과 교과(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학기별로 집중 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집중이수의 대상 교과에서도 체육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으며, 단위수업시간인 40-50분을 넘어서는 수행활동이 필요한 예술은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기대어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 예술활동에 학생들이 깊이 참여할 기회를 도리어 막아버렸다.

“(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9) 개정의 종합 조정

개정을 위한 연구 개발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들 기관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또한 이를 총괄하는 기관에 권위와 책임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될 것이다. 또한 각 교과가 자기 교과의 지위와 비중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무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 교육과정 문서의 종적, 횡적 연계, 통일성(coherence)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시 개정은 자칫하면 몇몇 사람들의 편견이 담긴 간이 개정으로 이어지기 쉽다. 교육과정기준은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전체적인 교육활동이 일정한 비전을 지향하고, 교육목표를 협력하여 성취할 수 있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향(orientation)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개정의 준비(준비도, 기초 연구 축적도), 주체(참여자의 구성), 기관, 대상(학교급 총칙과 교과군 각론), 범위(전면개정, 부분수정), 주기(기간, 장중단기), 품질(상중하), 효력(폐단개선)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4> 교육과정기준 개정의 개선 방안

개선 방안	내용	개선하려는 문제
숙성(준비된) 개정	개정 대상과 범위에 대한 충분한 기초 연구가 축적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개정(개정을 위한 준비)	줄속 개정(수시개정의 결과로서 특정한 입장이 반영된 저 품질의 왜곡된 개정으로 새로운 문제를 낳아 재개정의 대상을 만드는 것)
학생요구반영 개정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장기적으로 조사 축적하여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함	학생요구를 모른 채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 문서
교육활동 개선용 개정	문서개정을 벗어나 질 낮은 교육활동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정(개정의 목적)	문서 개정(교육종합시정서로서 기능성 결함. 문서상 용어나 구절은 갖추고 있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상태) 학문중심 개정(개발의 주체가 대학 교수들이 되어 교육보다 그 학문적 수련을 강조하는 폐단)
중수준 개발	교육활동의 품질을 견인하는 기준을 제시함(개정된 문서의 효력)	저수준 개발(개정 결과 내용이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견인하기에는 그 품질이 낮은 것)
중주기 개정	수시개정에 의한 부분수정만 아니라, 교육과정기준의 구조적 전면개정을 위한 중장기계획하의 개정(개정의 주기)	수시 개정(교육과정기준의 부분수정은 가능하지만, 보다 중요한 큰 틀이나 내용을 광정하는 중기적 개정, 전면개정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
연차 개정	교육과정의 종적 측면에서 시차를 두고 하는 개정(개정 대상의 종적 측면)	동시 개정(교육과정의 종적 측면의 모든 대상(학교급, 학년군)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관행)
순차 개정	교육과정의 횡적 측면에서 시차를 두고 하는 개정(개정 대상의 횡적 측면)	일시 개정(교육과정의 횡적 측면의 모든 범위(총칙, 특히 각론)를 한꺼번에 개정하는 관행)
종합조정 개정	교육과정기준 관련 요소들간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개발 기관들의 성과를 종합하는 기구가 있는 개정(연구 개발의 핵심주체 수립)	분산 개발(연구 개발 기관이 서로 나뉘어져 있고, 이를 유기적으로 종합하는 기관이 없는 상태)

제II장.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의 ‘형식’ 개선안

일반적으로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은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한 교육과정을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하는가는 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 경험의 질’과 밀접하므로, ‘양질의 교육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의 구성 체제나 하위 내용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제공 및 안내로서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사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아 개선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론의 구성 체제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들로부터 시사점을 얻고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핀란드, 영국, 싱가포르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 문서의 구성 체제를 비교·분석하여 본다.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의 형식은 내용에 비교하면 그 자체로서 완전성을 떨 수 있다. 형식은 어느 정도 항구적인 모습을 갖출 필요도 있다.

1. 형식 개선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총칙은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밝히고 있듯이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학교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은 의도적인 제도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지원과 관계되는 교육행정 및 재정, 교원의 양성·수급·연구,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제도, 교육 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 기능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그러므로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은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단위 학교는 이 기준을 준수하면서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즉, 각 학교에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국가교육과정기준이 되는데, 이를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하는가는 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 경험의 질’과 밀접하므로, ‘양질의 교육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의 구성 체제나 그 내용 요소들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고시 문서는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활동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안내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국가·사회적 요구, 개인적 요구, 학문적 요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교육과정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 교육활동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좋은 ‘기준’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수업, 평가, 교과외의 활동, 그리고 교과서 개발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교육과정의 질은 일차적으로 교육과정 문서에 담긴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적, 교과편제와 이수체계, 교육내용의 선정·조직 방식, 수업방법,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제시하는 교육과정 문서의 전체적인 형식과 내용 요소와 그 제시 순서, 용어의 선택과 그 명료화 방법, 항목별 서술방법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박순경 외, 2002).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과정의 국제 비교를 비롯하여 교육과정 총칙이나 각론의 문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박순경 외, 2002; 이주연, 2005; 허경철 외, 2005; 김진숙, 2006; 이광우, 2006; 이병호 외, 2008; 이병호, 2009; 정영근 외, 2009; 김진숙 외, 2011; 임현정 외, 2011)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또한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 이외에 교육과정 해설서,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성취기준을 별도로 안내하는 문서 등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중복 제시하여 기준 문서의 활용성을 떨어뜨리는 소모적인 구조를 지적하고 교육과정 문서 자체의 가독성과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김진숙, 2006; 이광우, 2006; 이병호, 2009)도 있었다. 국가교육과정기준 관련 문서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정영근 외, 2009)를 보면, 총칙 문서는 학교의 연간 교육과정 계획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면서도 학교 현장에 유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다른 관련 문서들이 있어서 교육과정 고시 책자가 그다지 필요 없으며, 교육과정 총칙 내용이 학교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기준 문서 체제는 이전 교육과정들과 거의 변화가 없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영근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및 안내로서의 역할과 기능, 교육과정의 통일성과 다양성, 교육과정 요소 및 활동으로서의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서 구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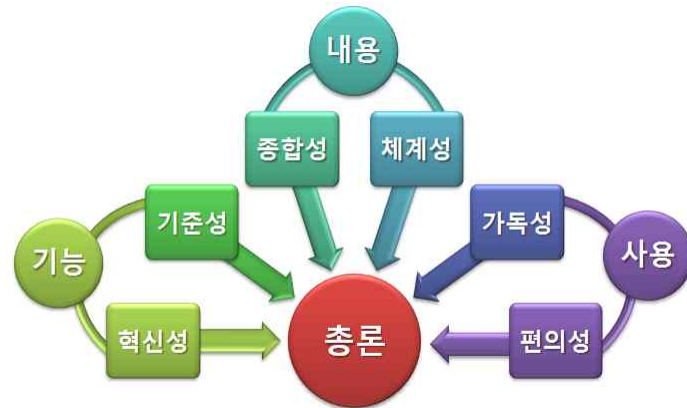
잘 만들어진 기준 문서는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독자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어 주고, 교육활동에 기준을 제공하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려줄 수 있고, 혼란을 제거하고 불확실한 점을 명료하게 해 줄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은 시대적, 교육정책적인 상황 변화도 염두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기준 문서가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적 체제를 가져야 하고 어떤 내용적 요소를 포함 또는 배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서 체제는 상대적으로 내용을 담는 그릇이고, 내용과 형식은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면은 있으나, 본 장에서는 교육과정 문서의 전체적인 형식 측면을 ‘구성 체제’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측면을 ‘구성 요소’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구성 체제’의 ‘형식’ 측면에 비중을 두어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는 어떤 구성 체제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가를 다른 나라 문서와의 비교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며, 향후 연구를 통해 형식에 담기는 ‘내용’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교육을 잘 하는 나라들과 교육과정 문서가 비교적 잘 구성되었다고 여겨지는 4개국(뉴질랜드, 핀란드, 영국, 싱가포르) 및 우리나라의 총칙 문서 구성 체제 및 외형적 특징을 상호비교하여 우리나라 총칙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와 국제비교연구이다. 비교할 준거를 먼저 설정한 비교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의 문서 구성 체제를 먼저 분석하고 거기서 추출되는 공통적 속성으로부터 공통적인 체제를 먼저 대영역으로 파악하고, 그 대영역을 구성하는 하위 체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총칙 문서의 구성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의 문제점

다른 나라 교육과정 총칙 문서로부터 개선의 시사점을 찾기 전에,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총칙 문서를 검토하여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칙이 담아 내야하는 ‘내용적 측면’, 총칙이 해야 하는 역할인 ‘기능적 측면’, 총칙의 독자를 고려한 ‘사용적 측면’의 세 가지 관점에서 총칙이 갖추어야 하는 특성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고, 이것을 우리나라 총칙 문서의 분석의 관점으로 삼았다. 총칙 문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급과 모든 각칙 영역 및 그 하위 항목들을 포괄하는 종합성(comprehensiveness)을 띠며, 이는 법적 성격을 지닌 고시문이므로 서술 전개상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결함이 없는 체계성을 띠어야 한다. 또한 총칙 문서는 이후에 연구 개발될 각칙이나 교과서 개발 및 학교의 실제적인 교육활동의 기준(standards)이 된다. 기준이면서 동시에 교육활동의 품질을 제고해주는 개선과 혁신의 특성도 띠게 된다. 이런 특성을 가진 문서는 독자나 사용자로 하여금 해독하기 쉽고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한다. 총칙이 가져야 할 특성을 정리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 국가교육과정기준(National Curriculum Standards) 총칙이 갖추어야 하는 특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는 총론과 각론이 별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2012년 12월에 고시된 35쪽 분량의 문서(2009 개정 교육과정)로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데, 세 개의 학교급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분량은 다소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론 문서는 크게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각 학교급의 교육목표와 편제 및 이수시간(단위),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문서의 구성 체제의 주요 특징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5>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구성 체제의 주요 특징 분석

쪽	구성 체제		구성 체제의 주요 내용 및 특징
	고시 및 부칙		•교육부장관의 고시문, 각 학교급별 별책에 대한 안내 제시, 이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학년별 시행일자 안내, 이 고시의 폐지나 개정 등의 조치 기한 안내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국가교육과정기준이 가지는 성격을 5가지로 제시
	차례		•이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차례
3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 이념과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4가지로 제시
4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을 9가지로 제시
7-9	II.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1) 초등학교 교육목표 (2) 편제와 시간 배당 ① 편제 ② 시간 배당 기준 (3)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10-12		2. 중학교	(1) 중학교 교육목표 (2) 편제와 시간 배당 ① 편제 ② 시간 배당 기준 (3)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13-24		3. 고등학교	(1) 고등학교 교육목표 (2)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① 편제 ② 단위 배당 기준 ③ 보통 교과 ④ 전문 교과 (3)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① 공통 지침 ②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③ 특수 목적 고등학교 ④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5-28		4. 학교급별 공통 사항	(1) 편성·운영 (2) 평가 활동
32-34	III.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1) 국가 수준 지원 사항 (2)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
34-35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특수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안내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론이 가진 문제점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총칙 문서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내용적 측면’에서 ‘종합성’과 ‘체계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일종의 결함과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총칙과 각칙을 이어주는 부분이 될 각칙에 대한 안내, 교육취약집단에 대한 지원 사항이나 고교의 진로별 교육,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 교과서 발행 형식에 대한 기준이나 대입시 등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 체제 및 질 관리를 위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앞 장에서 언급한 잦은 수시개정과 임의개정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비판된다. 또한 비교적 합의가 쉬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에 대해서는 진술하고 있지만 이렇게 길러진 학생들이 살아갈 사회, 만들어갈 사회, 교육이 지향해야 할 사회를 제대로 적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어떤 사회를 건설하려고 학생들을 교육하느냐는 교육 본질적 기능의 중요한 문제인데도 정작 교육과정 총칙에는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체계성에 있어서도 총칙과 각칙의 관계에서 각칙의 주요 사항에 대한 총칙과의 연결고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다. 소위 총칙과 각칙

사이의 괴리는 총칙 문서의 허술함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집중이수나 진로 집중과정처럼 새로 제안된 교육과정 개혁안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이은정, 2012). 집중이수가 필요하다면 교육과정 문서는 독자들에게 왜, 무엇을, 어떻게, 언제 등을 제대로 안내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새로운 정책의 실천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중학교까지 의무 공통 교육과정에 비해 고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진로별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체계가 매우 허술하며(홍후조 외, 2012), 진로에 대한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고등학교의 존립 이유에 대해 어떠한 평가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핀란드, 영국, 호주 등의 다른 나라에서는 중등후기 고교의 교육과정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과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이 교육법이나 시행령상에 산재되어 있고(권혜정·홍후조, 2013), 교육과정 문서가 이를 기술할지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아 항목의 결함의 가능성, 체계성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결국 총칙 문서 자체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내용 요소들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의 총체적인 교육활동을 안내하는 청사진으로 갖추어야 항목들이 빠져 있다는 것, 독자들에게 문서의 내용을 친절히 안내하지 못하고 별도의 해설서를 발간하고 있다는 것도 종합성·체계성 측면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현행 총칙 문서가 갖추지 못한 종합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칙의 해설서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 및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도 별도의 문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수준의 총칙과 시·도 교육청,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발간하는 관련 문서에는 중복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정영근 외, 2009).

교육과정기준의 통일성, 유기성, 균형성, 종합성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행하는 학교교육과정기준과 학교밖에서 이를 안내해주는 국가교육과정기준이면 충분할 것이다.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이나 교육지원청별로 장학자료를 만들어 주면 학교는 교육과정기준 작성에 필요한 풍부한 자료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지나치게 많은 기준으로 인해 중복되고 과도한 규정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공통의 기초 기본 교양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 이상의 보편성을 획득하고, 상이의 특수 심화 전문 직업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기준이면 충분할 것이다. 물론 학교급이나 교과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발휘할 자율성의 정도는 조금씩 다를 것이다. 가령 초등에 비해서는 중학교, 진학계 고교, 직업계 고교로 갈수록 자율성이 커지며, 국사에 비해서 체육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의 자율성이 클 수밖에 없다.

<표 26> 2007 개정 교육과정 총칙과 관련 문서 구성 체제

국가									지역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개 정	성 격	구 성 방 향		구 성			평 가		편 성		운 영				평 가		편 성		운 영				평 가			
		체 제	지 향	목 표	편 제	시 간	교 육 과 정	학 습	계 획	유 의 점	실 행	지 원				교 육 과 정	학 습	계 획	유 의 점	실 행	지 원				교 육 과 정	학 습
												인 적	물 적	규 정	장 학						인 적	물 적	규 정	장 학		
x	●	○	●	●	●	●	●	●	●	●	△	○	○	●	●	●	●	●	●	x	○	x	●	●	x	

주) ● : 반영 다(多), ○ : 반영 중(中), △ : 반영 소(少), x : 반영 무(無)를 의미함.

*출처: 정영근 외(2009: 19) <표 II-2-1>의 내용 중 2007 개정 교육과정, 국가, 지역 부분만 제시함.

둘째, 총칙이 해야 하는 역할, 효력 등의 ‘기능적 측면’에서 ‘혁신성’과 ‘기준성’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흔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문서는 학교수준에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달성할만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개정을 하나 마나 학교교육활동에 큰 변화가 없을 정도로 무력하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문서가 교육활동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더 나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함에도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질 높은 교육활동의 기준이 될 만한 것으로 채워져야 함에도 현장적합성, 실현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어느 학교에서나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지침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예술의 다양한 분야나 장르를 장려하기 위해서 교과목 명칭을 예술로 하였지만,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도리어 현재의 좁은 예술 교육활동을 정당화하는 표현으로, “예술은 음악과 미술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여 교육과정 문서가 갖추어야 할 교육의 질 향상 기능을 스스로 폐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셋째, 총칙의 독자를 고려한 교육과정 문서의 ‘사용적 측면’에서 문서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 문서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용한 형태로 만들어지지 못했고, 사용하는 독자 입장에서 그 가독성도 매우 떨어져서 교사들은 이를 읽고 활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별도로 해설서를 써서 다시 보급해야 할 정도로 일부 항목은 암호문처럼 기술되어 있고, 독자에게 친절한 안내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칙의 내용 제시 형태를 보아도, 각 영역별로 안내하고 있는 사항들을 항목 나열식의 문장기술과 표로만 작성된 흑백의 문서여서 가독성이 매우 떨어진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세 개의 학교급이 하나의 문서에 구성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리성과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가 가진 특성, 기능, 사용 측면을 체제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다음 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총칙 문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각국의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의 비교 분석

각기 학제가 다르고 다양한 국가·사회적, 역사·문화적, 환경적 특징을 지닌 국가들의 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별 교육과정 총칙 문서 체제를 비교·분석하여 그 강약 및 장단점을 알아내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개선하는데 있어 여러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분석 자료 및 분석의 관점

분석의 출발점이 되는 분석 자료의 선정은 비교적 우수한 교육과정 문서를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 핀란드,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체제 운영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 동양문화권 국가 중 중앙집권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싱가포르의 총 4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에 사용한 자료들은 국가교육과정기준 정보센터(NCIC)와 각국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교육과정 원문들이며, 다음 표와 같다.

<표 27> 본 연구의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 체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들

국가	교육과정 문서	발행연도
뉴질랜드	The New Zealand Curriculum	2007
	[별도 문서] The Years and Curriculum Levels	2007
핀란드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Basic Education	2004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Upper Secondary Schools	2003
영국	The National Curriculum: Handbook for primary teachers in England	1999
	The National Curriculum: Handbook for secondary teachers in England	2004
	[개정 문서]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2013
싱가포르	Nurturing Every Child	2006

각 문서들의 명칭과 내용 체계는 상이하지만 각국의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의 역할을 하는 문서들이다.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이 통권으로 제시되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한국과는 달리 핀란드와 영국의 경우에는 학교급에 따라 두 권으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핀란드와 영국은 분리된 두 권의 교육과정을 모두 살펴보고, 구성 체계에 차이가 없다면 본 논문에는 상위 학교급에 속하는 문서(표의 음영처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영국은 2014년 9월부터 전면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을 발표(2013년 9월)했으나, 본 연구에 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문서(표의 음영처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의 관점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교육과정 총칙 문서의 전체적인 구성의 틀, 즉 문서의 상·하위 구성 체제와 주요 특징으로 정하고, 4개국 모두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분량, 도식(사진), 색상, 가독성 등의 외형적 측면도 살펴보았다.

2) 각국의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의 분석 결과

(1) 뉴질랜드

뉴질랜드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기본 원칙과 내용을 담은 뉴질랜드 국가교육과정기준(The New Zealand Curriculum)을 발간하고, 이에 철저하게 바탕을 두되 각 단위학교가 필요, 우선순위, 가용자원을 감안하여 학교교육과정(The School Curriculum)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허경철, 2006).

현재 뉴질랜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07년 11월에 개정된 46쪽 분량의 문서(The New Zealand Curriculum)와 이 문서의 목차 중 하나에 대한 51쪽 분량의 별도 문서(The Years and Curriculum Levels)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뉴질랜드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이 교육과정 문서가 학부모, 교사, 이사회에게 1학년부터 13학년까지 학생의 교육 및 성취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어졌음을 소개하고 있다. 뉴질랜드 교육과정은 글로만 이루어진 딱딱한 문서가 아니라 중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도식화(info-graphics)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그려진 그림을 삽입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뉴질랜드 교육과정 총칙 문서의 구성 체제 및 주요 특징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8> 뉴질랜드 교육과정 총칙 구성 체제의 주요 특징 분석

쪽	구성 체제	구성 체제의 주요 내용 및 특징
3	Contents(내용 차례)	•이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차례
4	Foreword(서문)	•이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소개말 - 이전의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의 개발 이유와 과정, 이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것과 담고 있는 것 그리고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 감사의 말 등
6	Purpose and Scope(목적과 범위)	•이 교육과정 문서의 목적과 적용 범위, 문서의 기능에 대한 진술 - 적용 범위: 영어 중심 뉴질랜드 학교 - 주요 기능: 학생의 학습에 대한 지침을 세우고, 학교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검토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
7	Overview(개요)	•이 교육과정이 학교교육과정으로 구현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서의 체제를 학습의 방향(Directions for Learning)과 안내(Guidance)의 두 축으로 도식화하여 나타냄 - 학습의 방향(Directions for Learning): 비전, 가치, 핵심역량, 학습 영역, 성취 목표, 원칙 - 안내(Guidance): 목적과 범위, 효과적인 교수법, 학교교육과정: 설계와 검토
8	Vision(비전)	•학생들에 대한 비전(인간상)을 5가지로 제시
9	Principles(원칙)	•이 교육과정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바탕이 된 8가지 원칙에 대한 진술: 높은 기대, 와

		이탈기 조약, 문화의 다양성, 내적 가치로서 배움,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성, 미래 지향
10	Values(가치)	•학생들이 추구하도록 격려되어야 하는 가치들, 학생들이 학습경험을 통해 배워야 하는 가치들, 학생들이 학습경험을 통해 계발해야 하는 능력들에 대해 진술
12-13	Key Competencies (핵심역량)	•삶과 평생 교육을 위한 5가지 핵심역량에 대한 진술: 사고 능력, 언어·상징·텍스트 사용 능력, 자기 관리 능력, 타인과 관계 맺기, 참여와 기여
14	Official Language (공식 언어)	•영어(English)와 함께 뉴질랜드의 공식 언어인 마오리어(Te Reo Māori), 뉴질랜드 수화(New Zealand Sign Language)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
16-33	Learning Areas (학습 영역)	•8개 학습 영역(교과): 영어, 예술, 건강과 체육, 언어, 수학과 통계, 과학, 사회 과학, 기술 •8개 교과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게 되는 능력들을 도식화하여 제시 •각각의 교과를 학습하기 위해 교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언어적 차원의 도움들 •8개 교과의 목적, 학습의 이유, 교과의 구성과 하위 학습영역(strand)에 대해 설명
34-36	Effective Pedagogy (효과적 교수법)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교사의 행동을 6가지 측면에서 진술 •학생의 학습을 조직하기 위한 교사의 교과수업연구 과정을 도식화하여 제시 •E-Learning을 위한 교수법에 대해서도 추가 진술
37-42	The School Curriculum: Design and Review (학교교육과정: 설계 및 검토)	•이 교육과정이 학교교육과정으로 구현되는데 필요한 지침들을 다음의 항목들로 제시: 뉴질랜드 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의 관계, 원칙들, 가치, 핵심역량, 학습 영역, 성취 목표, 평가, 학습의 과정 •평가 -정보의 활용 영역을 주제별로 도식화하여 제시 -효과적인 학생 평가의 특성, 학교 프로그램 평가, 국가 자격을 위한 평가(11~13학년)에 대한 설명 제시 •학습 과정(Learning pathways) -유아, 1~6학년, 7~10학년, 11~13학년 시기의 학습 및 고등교육과 취업 후의 평생 학습에 대한 특징을 설명 •유아교육 - 본 교육과정 - 고등교육까지 핵심역량의 연계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까지의 연결을 도식화하여 제시
43	The Education Act and the Curriculum (교육법과 교육과정)	•교육법 - 국가교육지침 - 국가교육목표/교육정책성명서/국가교육과정기준성명서/행정지침 - 뉴질랜드 교육과정 - 학교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위계를 도식화하여 제시
44	Requirements for Boards of Trustees (이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교장과 직원을 포함한 이사회는 이 교육과정과 상위법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학생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
45	Years and Curriculum Levels (학년과 교육과정 단계)	•목차에는 있으나 이 교육과정 문서상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51쪽짜리 별도의 문서로 제시함(우리나라의 각칙/교과교육과정에 해당) - 1~13학년을 8개 단계로 나누어 8개 교과의 단계별 성취 목표를 제시
부록	Fold-out charts of achievement objectives by level(수준별 성취 목표의 접이식 차트)	•목차에는 있으나 이 교육과정 문서상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부록	Glossary and whakatauki(용어 사전)	•이 교육과정에 나온 마오리어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시

(2) 핀란드

핀란드는 초·중학교(Basic Education) 교육과정과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교육과정이 분리되어 있으며, 총칙과 각칙이 하나의 합본 형태로 이루어져 종합학교 교육과정은 301쪽,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261쪽 분량으로 구성된 문서를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 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그림을 넣어 가독성을 높인 반면, 핀란드 교육과정 문서에는 학제와 부록을 제외한 다른 도식은 없다. 핀란드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체제의 주요 특징에 대한 분석은 다음 표와 같다. 각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5장’은 각 교과목의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주요 내용(영역과 학습요소)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도달점 행동(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달점 행동은 진학을 위한 학업 성취 여부를 판정하는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 29> 핀란드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칙 구성 체제의 주요 특징 분석

쪽	구성 체제	구성 체제의 주요 내용 및 특징
3	핀란드 학제	•핀란드 학제가 도식화되어 제시되고 있음
4	이 책에 대한 정보들	•교육과정 개발 기간, 적용 시작 시기, 개발 책임자 등
5-6	차례	•이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차례
7-10	1. 교육과정	•일반 고등학교 교육의 교육과정 시스템과 관련한 법, 법령, 규정 등을 제시하고, 국가교육과정기준을 바탕으로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학생 개인의 학습 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할 것을 안내함 •이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목차 형식으로 제시
11-12	2. 일반 고등학교 교육의 역할 및 기본 가치	•일반 고등학교 교육의 역할과 기본 가치들에 대해 개인적 측면, 국가·사회적 측면, 세계적 측면에서 제시함
13-16	3. 교육의 시행	•국가교육과정기준이 기저에 두고 있는 학습의 개념, 학생 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환경과 방법의 제공, 교수·학습 방법, 교육과정이 만들고자 하는 학교 문화, 필수, 전공, 응용 과정 운영 및 수료 과정 안내
17-24	4. 학생 지도 및 지원	•가정과 학교간의 협력, 상담 및 지도의 역할 및 학생의 권리 •학생 복지 서비스, 학생 복지의 목적, 학생 복지를 위해 교육과정이 결정해야 하는 것들 •일정 기준에 따른 동등한 학업 성취를 보장하기 위한 학습에의 특별한 지원 사항, 언어나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25-222	5. 학습 목표와 교육의 핵심 내용	•교육 및 직업교육의 목적, 교과통합적 주제들에 대한 안내 •필수 과정, 전문화 과정의 목표와 핵심 내용 제시
223-232	6. 학생 학습 평가	•평가의 목적, 평가의 역할, 평가 관련 중등학교 법 제시 •각 과정(course) 평가의 기능, 평가 방법, 평가 결과에 대한 학생의 인정, 평가 결과 등급, 특수한 요구나 장애를 가진 학생들 평가시 주의사항, 학생에게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 안내, 과정(course) 평가와 관련한 고등학교법령을 제시하고 있음 •강의계획서 구성, 학생의 과정 선택, 교과과정의 구분(필수, 전공, 응용), 학년 진급을 위한 평가, 등급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령 제시 •전체 일반 고등학교 교과 완성(수료)하기 위한 이수 단위, 재평가 요청의 수용 및 평가 결과 수정 안내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받게 되는 자격 및 자격증이 담고 있는 정보들을 안내함
233	부록 1	•종합학교와 고등학교 단계까지의 수준별 언어교육의 기회(수준별 학급, 학습시간 및 코스)를 그림으로 안내
234	부록 2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언어숙달정도를 레벨화하여, 해당 단계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
252	부록 3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 편제에 대한 정부의 법령
259-261	부록 4	•일반 고등학교의 이민 가정 학생을 위한 핀란드어 수업용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권고안

(3) 영국

영국(England)은 모든 개별교과의 교육과정이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 목적, 가치를 별도로 명시하여 제시하는 문서가 있는데, 이것이 영국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총칙에 해당한다(박선화 외, 2007). 영국의 국가교육과정기준은 학교급을 고려하여 Key stages 1 and 2(201쪽 분량), Key Stages 3 and 4(82쪽 분량)의 두 종류로 나뉘어 있는데,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총칙에도 각칙에 관한 언급을 하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교과교육과정과 학습프로그램 문서가 따로 존재한다.

영국은 단위학교 중심 교육과정 체제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는 영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학교교육과정과 새로 도입한 국가교육과정기준을 교사가 견주어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육목표 측면에서, 학교급 측면에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 측면에서, 교과외 여타의 교육 측면에서 학교교육과정과 국가교육과정기준을 대조해 줌으로써 교사가 학교교육과정과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역할과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임현정 외, 2011). 또한 교육과정 문서의 명칭을 ‘Curriculum Handbook for teachers’로 하여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의 제1사용자를 교사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도식과 여러 색상을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인 편이다. 영국 중등교육과정(Key Stages 3 and 4) 문서의 구성 체제의 주요 특징에 대한 분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0> 영국 중등교육과정 총칙 구성 체제의 주요 특징 분석

쪽	구성 체제		구성 체제의 주요 내용 및 특징
3-4	서문		• 이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말 - 이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것과 사용 방향, 교육과정 개정의 이유, stage 4 교육과정의 특징, 교육과정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소개 등
5	이 책에 대하여		• 이 책의 적용 대상 학년, 발간 목적, 독자에 대한 안내
6-7	차례		• 이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차례
9-13	학교교육과정 과 국가교육과정 기준	가치, 목적, 그리고 목표	• 학교교육과정의 토대가 되는 가치와 목표 • 학교교육과정의 목적(2가지) • 국가교육과정기준 구성 틀(frameworks)의 설계 방향 및 국가교육과정기준의 4가지 주요 목표
14-23		Key stage 3 & 4에 대하여	•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적용 단계 - Key stage 1-4를 연령과 학년으로 제시하고, 각 교과를 어느 단계에 학습하게 되는지를 도식화하여 나타냄 - 국가교육과정기준의 핵심교과(core subjects)와 비핵심교과(non-core subjects), 이 외의 범교과를 구분하여 안내 •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구조 - 학습 프로그램의 성취 목표 및 평가에 의한 진급의 기준, 졸업 및 진급 자격과 연계 • 기타 요구 사항 - 종교 교육, 직업 교육, 성교육, 직업 연계 학습 • 국가교육과정기준 전반에 걸친 학습 - 정신·도덕·사회·문화적 발달, 개인·사회·건강교육, 6가지 핵심 기능, 5가지

			사고 기능, 경제 능력, 기업가 능력, 지속가능발전교육
26-27		이 책의 구성과 디자인	•이 교육과정 책자의 구성에 대해 그림과 함께 안내
29-40		일반 교수 요건	•모든 학생들에게 효과적 학습 기회의 제공 - 교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세 가지 원칙 -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학생들 지원, 장애 학생 지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 지원 •교육과정을 통해 익혀야 하는 언어 사용 기능 •교육과정을 통해 익혀야 하는 정보통신기술 •건강과 안전
41-127	국가교육과정 기준의 학습 프로그램	Key stage 3 학습 프로그램	•각 교과목의 도입 부분에 각 교과목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각 교과목별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제시함 - 영어, 수학, 과학, 디자인과 기술, 정보통신기술교육, 역사, 지리, 현대 외국어, 예술과 디자인, 음악, 체육, 시민교육
128-137		Key stage 3 지침	•범교과 교육에 대한 안내 - 종교 교육, 직업 교육, 개인·사회·건강 교육
138-197		Key stage 4 학습 프로그램	•각 교과목의 도입 부분에 각 교과목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각 교과목별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제시함 - 영어, 수학, 과학, 정보통신기술 교육, 체육, 시민교육
199-219		Key stage 4 지침	•범교과 교육에 대한 안내 - 자격 분야, 디자인과 기술, 종교 교육, 직업 교육, 직업 연계 학습, 개인·사회·건강 교육
220-222	국가 포럼에서 진술한 교육과 사회의 가치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 교육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개인, 관계, 사회, 환경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함
223	감사의 말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학생명, 학교명, 기관명을 나타내고 감사의 말을 전함
224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의 목적		•뒤표지에 이 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음

(4) 싱가포르

싱가포르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하나의 문서로 통합(44쪽 분량)되어 있으면서도 학교급별로 제목의 글자 색과 그림 색에 차이를 두어 구분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제도와 편제를 도식화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싱가포르 교육과정은 문서 내에 싱가포르 교육의 지향점과 강점을 강조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철저한 수준별(시험성적별) 교육의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공용어인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영어 교육이 교육과정에 강조되어 반영되고 있으며, 변화된 교육정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싱가포르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체제의 주요 특징에 대한 분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 싱가포르 교육과정 총칙 구성 체제의 주요 특징 분석

쪽	구성 체제		구성 체제의 주요 내용 및 특징
2-8	개요		•교육부장관 명의로 싱가포르 교육의 목적, 싱가포르 교육의 강점, 싱가포르 교육의 특성(세 가지 측면), 교사 지원에 대한 의지 등을 소개
9-11	초등교육	초등학교 교육과정	•초등교육 첫 쪽에 'FAST FACTS'로 4가지 사항 안내: 6년제, 무상, 국가시험, 공동교육활동과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 참여 권장 •초등교육의 구성(4년+2년), 목표, 교육과정의 구성과목을 기능별로 도식화

		여 제시	
11-15	초등교육에 대한 변경 사항	•변화되는 초등교육의 핵심 정책 5가지를 소개하고, 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지 안내: 초등 1, 2학년의 학급당 학생수 제한, 2부제 운영, 능력별 학급편성 제도 변화, 학교의 재정 지원 신청, 모국어 교육과정(중국어교육 모듈을 도식화하여 제시)	
15-16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중등교육으로의 진학과 학교 선택을 위한 시험, 사립학교·자율학교·특목고의 학생선발 재량권에 대한 안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안내	
17-19	중등학교 과정	•중등교육 첫 쪽에 'FAST FACTS'로 4가지 사항 안내: 4-5년제, 학비, 국가시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야 하는 활동 •중등교육의 다양한 코스에 대한 안내, 코스들과 국가시험을 함께 도식화하여 Pathway로 제시	
20	통합적 활동	•전인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한 통합적 활동들	
20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CIP) & 봉사학습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과 일을 도우며 배우는 학습	
20	학교 졸업 증명서	•모든 학생들은 활동을 평가받고 졸업 자격을 증명해야 하며 교육부로부터 학교졸업증명서를 받아야 함을 안내	
21	중등교육	Special/Express Course 교육과정	•Special/Express Course 교육과정 구성 과목을 기능별로 도식화하여 제시
22-23	기타 중등교육 프로그램	•중등교육의 기타 프로그램 7가지를 소개: 통합 프로그램, 다문화 프로그램과 특별지원장학금, 말레이어 프로그램, 말레이어/중국어 특별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 미술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23-26	Special/Express Course의 변경 사항	•변화되는 Special/Express Course의 핵심 정책 7가지를 소개하고, 각각에 대해 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지 안내	
27-28	Normal Course 교육과정	•Normal(Academic)과 Normal(Technical) Course의 교육과정 구성 과목을 기능별로 도식화하여 제시	
29-30	Normal Course의 변경 사항	•변화되는 Normal 과정의 핵심 정책 2가지를 소개하고, 각각에 대해 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지 안내	
31-32	중등교육에서 후기중등교육으로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을 위한 학교 종류를 소개하고 지원 자격을 안내, 더 많은 정보를 위한 사이트 안내	
33-39	대학예비 교육	새로운 2006 GCE 'A' Level 교육과정의 구조	•대학예비교육의 첫 쪽에 'FAST FACTS'로 4가지 사항 안내: 2-3년제, 학비, 국가시험, 대학 입학에 위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야 하는 활동 •GCE 'A' Level 교육과정의 구성과목을 기능별로 도식화하여 제시, 수준별 학습을 위한 과목 선택 안내
40-41	(후기중 등교육)	대학예비교육부터 대학교육으로	•GCE 'A' Level과 Polytechnic 졸업자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안내와 대학 사이트 안내
42-43	색인	•주요 용어 색인을 알파벳순으로 제시	
44	유용한 웹사이트	•교육부, 학교 정보 서비스, 학교 입학, 시험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이트 소개	
부록	Education Landscape		

3) 각국의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의 종합 비교 및 시사점

이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외국 사례들을 종합 비교하여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각국 교육과정의 장점과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목차 측면의 구성 체제 및 외형, 그리고 목차가 담고 있는 하위 구성 체제를 종합 비교하고, 다음 장에서 논의될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의 구성 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먼저 문서의 목차 측면에서 구성 체제와 외형을 비교해보자. 뉴질랜드, 핀란드,

영국, 싱가포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를 종합 비교한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총칙과 비교하여 구성 체제의 외형적 측면에서 특이성을 갖는 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32> 뉴질랜드, 핀란드, 영국, 싱가포르, 한국의 교육과정 총칙의 외적 구성 체제 비교

국가	서문	문서 개요	학제 제시	학교 급간 연계	언어 교육 강조	법령 제시	용어 사전	부록	분권 여부	각칙 통합 여부	분량 (쪽)	도식 (사진)	색상	가독성
뉴질랜드	○	○	○	○	○	○	○	○	통권+ 부록	×	46+ 51	○	컬러	우수
핀란드	△	○	○	×	○	○	×	○	초중/ 고	○	301/ 261	△	흑백	보통
영국	○	○	○	△	△	×	×	○	초/ 중고	○	192/ 224	○	컬러	우수
싱가포르	○	○	△	○	○	×	○	○	통권	×	44	○	컬러	우수
한국	×	×	×	×	×	×	×	×	통권	×	35	×	흑백	미흡

주) ○ : 있음, △ : 일부 있음, × : 없음을 의미함.

우리나라를 제외한 4개국은 모두 교육과정 문서의 개요를 안내하고 있었으며, 뉴질랜드, 영국, 싱가포르 교육과정 문서에는 교육부장관 명의로 교육과정 문서를 개관해주는 서문이 존재한다. 핀란드 교육과정에는 교육과정 개발 책임자나 개발 시기, 적용대상자 등의 정보가 안내되어 있다. 뉴질랜드와 핀란드 문서에는 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학제를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영국과 싱가포르는 능력에 따른 다양한 과정을 학교급별로 안내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교육과정 총칙 문서에는 학습과 진로 측면에서 학교급간 연계가 잘 안내되어 있다. 4개국 모두 다언어교육과 이민자 자녀의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교육과정내에서 다문화 사회의 언어교육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핀란드 문서에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법규를 제시·안내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문서는 용어나 색인 사전을 부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각칙의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국가별 교육과정 문서의 분량은 상이했지만, 핀란드와 영국 문서는 전반적으로 교과가 상세히 안내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4개국 모두 교육과정 내에 도식이나 사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 영국, 싱가포르 교육과정 문서는 글자 유형과 색상이 다양하고 도식과 사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가독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 총칙 문서는 4개국과 비교했을 때, 모든 학교급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분량이 적고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 적지 않다. 즉,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종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해설서를 추가 발행할 정도로 가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다음으로 문서의 보다 구체적인 장에 해당하는 하위 구성 체제의 특징을 통해 우

리나라 총칙 개선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학생들이 학습과 경험을 통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능력들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하고 있다. 뉴질랜드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교사의 행동과 교과 수업 연구 과정, 새로운 교수법을 안내하고 있는데 교사를 교육과정의 제1사용자로 본다면 이는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뉴질랜드와 영국의 문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학교교육과정으로 구현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잘 안내하고 있다. 핀란드 교육과정은 학습 환경과 방법, 가정과 학교간의 협력, 학생 복지 서비스, 학습 특별 지원과 같은 교육복지측면에서의 학생 지도 및 지원에 대한 안내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교과외에도 교과통합적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과정 문서에는 모든 교과목에 걸친 공통적인 일반 교수 요건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과 안전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 학교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Key stage 4의 지침 사항에서는 자격 분야, 직업 교육, 직업 연계 학습과 같이 최종단계의 교육에 알맞게 진로·직업 교육과 관련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싱가포르 교육과정 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급별로 변화된 교육정책들을 정책 시행의 이유와 함께 교육과정 문서 내에 안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 학교급별 및 마지막 페이지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교육과정 문서의 하위 구성 체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단위) 등의 기준과 그 편성·운영에 관한 유의점 중심의 문서 구성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변경 사항을 비롯하여 학교교육과정 지원 사항에 관한 것도 상당 부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문서가 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있지만 문서 사용자를 교사, 학부모, 학생, 그 외 교육관련자로 생각한다면, 위에서 분석한 4개국의 교육과정 문서는 우리의 총칙과 비교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종합적이고 가독성 높게 안내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4.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의 형식 개선

위와 같은 교육과정 총칙의 국제비교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문서 구성 체제의 개선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먼저 4개국 및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체제를 유사 성격에 따라 재분류해보면 아래와 표와 같이 3대 핵심 영역(크기는 단원에 해당)과 2개의 부수 영역(크기는 장에 해당)으로 나타난다. 즉 각국의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총칙 문서는 ‘도입, 기본 방향, 각칙 구성의 틀, 실행 지침과 지원, 부록’으로 대영역이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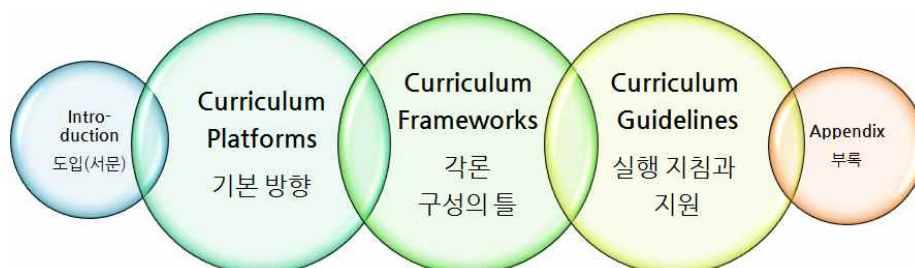
<표 33> 5개국 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 비교를 통해 추출된 구성 체제의 대영역

뉴질랜드	핀란드	영국	싱가포르	한국	구성 체제의
------	-----	----	------	----	--------

					대영역
·차례 ·서문 ·교육과정 문서의 목적과 범위 ·문서의 개요	·학제 ·이 책에 대한 정보 들 ·차례	·서문 ·이 책에 대하여 ·차례	·개요 - 교육부장관의 서 문 - 싱가포르 교육의 강점 - 교사 지원에 대 한 의지	·고시 및 부칙 ·차례 ·교육과정의 성격	⇒ 도입
·비전 ·철학 ·원칙 ·가치 ·핵심 역량	·교육과정 ·일반 고등학교 교 육의 역할 및 기 본 가치들 ·교육의 시행 - 학습의 개념 - 학습 환경과 방 법 - 학교 운영 문화 - 과정(course)의 구조	·학교교육과정과 국 가교육과정기준 - 가치, 목적, 그리 고 목표 - Key stage 3 & 4에 대하여	·개요(교육부장관의 서문에 다음사항 이 포함되어 있 음) - 싱가포르 교육의 목적 - 싱가포르 교육의 특성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추구하는 인간상 -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 기본 방향
·학습 영역 ·학년과 교육과정 단계	·학습 목표와 교육 의 핵심 내용 - 교육의 일반 목 적 - 교과통합적 주제 들 - 19개 교과 ·학생 학습 평가	·국가교육과정기준 의 학습 프로그램 - 모든 교과목을 위한 공통 구조와 설계 - Key stage 3 학 습 프로그램 - Key stage 4 학 습 프로그램	·각 학교급의 교육 과정 - 체제, 목표, 구성 과목 - 중등교육의 다양 한 코스, 통합적 활동,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 - 학교 졸업 증명 서 - 중등교육의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각 학교급별의 교육 목표, 편제 와 시간 배당, 편 성·운영의 중점 - 학교급별 공통 사항	⇒ 각칙 구성의 틀
·공식 언어 ·효과적 교수법 ·학교교육과정: 설 계 및 검토 ·교육법과 교육과정 ·이사회에 대한 요 구사항	·학생 지도 및 지원 - 가정과 학교간의 협력 - 상담 및 지침 제 공 - 학생 복지 서비 스 - 학습 특별 지원 - 언어와 타문화집 단에 대한 교육	·국가교육과정기준 의 학습 프로그램 - 일반 교수 요건 - Key stage 3 지 침 - Key stage 4 지 침	·각 과정에 대한 정 책의 변경 사항 ·다음 단계로의 진 급을 위한 지침들	·학교 교육과정 지 원 - 국가 수준 지원 사항 - 교육청 수준 지 원 사항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실행과 지원 지침
·수준별 성취목표의 접이식 차트 ·용어 사전	·교육과 편제에 대 한 법령 ·교육부 권고안	·교육과 지역사회의 가치를 위한 국가 포럼의 문서 ·승인	·색인 ·유용한 웹사이트	.	⇒ 부록

그 결과, 뉴질랜드, 핀란드, 영국,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은 각각의 특성을 지닌 구성 체제들을 담고 있지만, 제외시켜야만 하는 구성 체제 없이 모두가 공통된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의 축 측면에서만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칙이 크게 ‘도입’,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지원’의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입’의 경우 교육과정의 개요나 목적을 전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도입과는 그 내용과 제시 형식이 다르다. 반면, 외국의 교육과정에서는 ‘도입(서문)’, ‘기본 방향’, ‘각칙 구성의 틀’, ‘실행 지침과 지원’, ‘부록’의 5개 구성의 축(대영역)이 나타난다. 이

5개 대영역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갖추고자 하는 유기적인 관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 국가교육과정기준(National Curriculum Standards) 문서 구성 체제의 5개 영역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 구성 체제의 대영역을 [그림 5]와 같은 5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구성 체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대영역인 ‘도입’ 부분에는 고시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부장관 명의의 서문, 현재 부칙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 문서 개관, 문서의 활용에 관한 안내가 제시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연구개발진 등의 실명을 실어 이들의 교육과정 문서 개발에 책임감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것은 정책 실명제의 일환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교과서에도 저자만 아니라 편집진 및 검토 의견진, 검인정 심사진의 명단을 실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교육과정기준 문서는 낱낱의 교과서보다 그 중요성이 더 크므로, 이의 제·개정과 관련된 인사들을 실명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대영역인 ‘기본 방향’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비전을 통해 교육 이념과 교육의 목적을 진술하고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회상이나 인간상의 청사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지향하는 목표와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을 안내한다. 또한 학제와 함께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특징, 진로의 특징 등을 간략히 도식화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교육의 방향을 가시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싱가포르 등에서와 같이 본 교육과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교육활동이 무엇인지를 적시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의 효과를 확실히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을 단원으로 보면 이 단원은 장기적이고 일반적인 방향과 해당 교육과정기의 특징을 드러내는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될 수 있다.

세 번째 대영역인 ‘각칙 구성의 틀’은 각 학교급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가장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보통 이 부분은 각칙의 구성, 즉 교과와 교과외 활동을 학교급별, 학년(군)별로 종합적·체계적·계열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교육 대상의 발달상 특징과 이를 고려한 교육과

정의 방향, 그 학교급의 교육목표와 그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능·소양,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변화한 교육 정책을 안내하는 편성·운영의 중점, 평가에 대한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총칙과 각칙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칙의 총칙’에 해당하는 사항에 주의하며, 특히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고교교육에서 진학계든 직업계든 진로별 교육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단원으로 보면 이 단원은 유, 초, 중, 진학교, 직업고, 특수학교 등 학교급별로 6개의 장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대영역인 ‘실행 및 지원 지침’ 역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을 충분히 담고 있어야 한다. 특히 새로 시행되는 사항의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안내하여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한살이(life cycle)를 잘 드러내어 개정, 현장 구현, 평가 및 개선의 절차와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의 고질병이라 일컬어지는 총칙과 전체 각칙의 일시개정, 모든 학년군과 교과군의 각칙을 동시개정하는 폐단을 넘어 학년군별로 연차적으로, 교과군별로 순차적으로 총칙과 각칙의 연계를 맺으면서 실효성 있는 개정이 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단원으로 보면 이 단원은 교육과정 편성(계획)·운영·평가상의 유의점, 교육취약집단의 지원 사항,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지자체·학교구·학교관리자 등의 지원 사항, 그리고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 및 개정(개선) 지침의 4개의 장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대영역인 ‘부록’에는 교육과정에 나오는 용어 해설을 실어 교육과정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가령 현재 문서에도 ‘기초’라는 표현을 초등학교에서나 고교에서도 공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비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교급별 수학연한, 학교급별 교육목적, 등교 및 수업일수, 학기, 학년진급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담겨 있으므로, 법규 및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과정 관련 사항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교육법과 함께 교육과정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전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새로이 변화된 부분을 추가적인 해설서나 보도자료가 아니라 총칙 문서에 넣어 한눈에 파악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적어도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는 교사의 자율성, 전문성,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는 문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는 관련 문서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중복·반복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기본적·종합적인 지침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국외 4개국 교육과정 문서로부터 얻은 시사점과 위의 제안 사항들을 바탕으로 총칙의 문서 구성 체제 개선안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제시한 [그림 5]의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이 갖추어야 하는 ‘내용적·

기능적·사용적 측면'의 특성들이 갖추어진 문서로의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표 34> 현행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문서의 구성 체제 비교

현행 총칙 구성 체제	총칙의 대영역	문서 구성 체제 개선(안)	체제 개선의 취지 및 효과
·고시 및 부칙 ·차례 ·교육과정의 성격	⇒ 도입 ⇒	·서문(현행 고시문 포함) ·이 책에 관하여(법적 근거, 총칙의 기능, 시행시기/현행 부칙) ·연구개발진, 협의진, 심의진 명단	·교육과정 총칙의 성격과 기능의 명료성 제고 ·총칙의 종합성, 체계성, 유기적 통일성 도모 ·개정 관련자의 책무성 제고 등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 기본 방향 ⇒	I. 교육의 비전과 이 교육과정의 특징 (2개의 장) 1. 교육의 비전[우리나라 교육 이념, 지향하는 사회상과 기르고자하는 인간상, 소망하는 교육상, 교육목적, 교육과정의 목표; 도식화], 학제(도식화). 2. 이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개선할 교육활동), 총칙의 각칙에 대한 지도성(교과서, 교수학습, 교육평가 정책의 연계; 도식화), 각칙의 점진적 분화와 계열화(도식화)	·지향하는 사회상 등을 통해 공교육의 방향을 분명히 드러내어 교육의 혼란상 제거 ·개선할 교육활동을 적시하여 교육과정 개정의 효력 및 기준의 혁신성 제고 ·교육과정 총칙과 각칙의 괴리 현상 제거하여 체계성 제고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의 일관성, 모든 학교급 교육과정의 종합성 제고 등
II.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 각 학교급별로 교육 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편성·운영의 중점을 다룸 4. 학교급별 공통 사항	⇒ 각칙 구성의 틀 ⇒	II. 학교별 교육과정의 개요(6개의 장, 아래는 각 장별 절의 내용) 1. 학교별[유·초·중·진학교·직업고·특수학교] 학습자 특성 및 교육목표 2.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의 방향 3.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표, 각 교과에서 개선할 적폐들, 교과 특성에 따른 각칙의 형식 4. 편성·운영·평가의 중점(교재,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의 중점, 총칙 및 다른 교과와 연계 등)	·유·초·중·고(진학/직업)·특수학교가 각각 하나의 장으로 작성되거나, 학교급별 별도의 문서로 분리하여 가독성 제고, 사용자 편리성 도모 ·총칙의 철학을 학교급과 각칙에 침투시켜 일관된 교육활동 도모 ·총칙과 연계, 다른 각칙과 연계를 통한 괴리 현상 제거 및 통일성, 종합성, 체계성 제고 ·교과통합주제(창의성·사회협동성·진로 등), 건강과 체력·교양 등의 신장 방안 제시 등을 통한 융합 인재 양성에 기여 등
III.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국가 수준 지원 사항 -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실행 지침과 지원 ⇒	III.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지원 지침(4개의 장) 1. 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평가상의 유의점 2. 교육취약집단(예체능계/직업계/다문화가정/귀국학생/장애우/학습부진학생/학습중단학생 등)의 지원 사항 3.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지자체·협장학교 및 학교관리자의 지원 사항, 특히 달라져야 할 학교경영, 학급 경영 사항(주체별 역할을 '표'로 표현) 4. 이 교육과정 총칙 문서의 질 관리 및 개선 지침(개정 절차, 일정, 참여집단 등을 도식화)	·교육과정 개정의 실효성 제고 ·교육활동의 실질적 개선 효과 제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실시 ·교육내적 복지의 실효성 증진 ·교육과정 개정의 체계성, 실효성 제고 등
·	⇒ 부록 ⇒	·용어 정리 ·교육 관련법	·해설서 추가 작성을 불필요하게 하여 교육과정 문서의 가독성,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는 교육과정 사용자 중심의 문서 구성 체계를 갖추어 독자들(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관련자)이 읽기 쉽고 사용이 용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더구나 교육과정기준 문서는 현재의 교육활동의 불확실함, 애매함, 혼란, 누락, 비약 등을 살피 이를 개선하는 기준으로 작성되고 기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의 ‘가독성’과 사용의 ‘편의성’이 고려되어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고, 문서 한 권으로도 학교 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문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책자 형식의 발간에만 머물러있던 것에서 벗어나 오늘날에는 hwp나 pdf 형식으로 업로드, 다운로드하여 문서를 사용하는 환경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문서 전체적으로 흑백 문서가 아닌 도식이나 그림, 사진을 넣고 컬러화하고, 글자 유형에도 변화를 주면, 가독성도 높아지고 문서의 분량을 늘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보고 싶고 읽고 싶은 교육과정 문서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더 나은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

1) 1단계 작업: 교육과정 한 살이 관련 제도적 항목 매거하기

- 교육과정 연구 및 실천 분야 전체를 보여주려고 항목들을 매거하려는 것임 .
- 가장 제도적인 데서 가장 구체적인 교실 수준까지.....교육과정 실천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열거함.
- 특히 법적, 제도적으로 구비해야 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것들을 항목으로 나열하고,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나열함.
- 제도적 배경으로는 무엇이 필요한가? 법, 교육행정기관, 교원, 학생수용방식, 수업, 교과서, 각종 평가 등
- 교육과정을 둘러싼 질문에서 6하원칙에 따라,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장소, 시간에 따라
- 교육과정의 변화단계에 따라, 교육과정 제·개정(개발), 편성, 운영, 평가 개선 등 한 살이에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매거하는 것임.
- 교육과정의 결정과 운영 주체, 관련 집단에 따라, 존립수준(세계, 국가, 지방, 학교 등)에 따라
- 교육과정의 구성영역(총칙, 각칙)에 따라 관련 요소에 따라
- 연구의 범위, 주제 소재들이 여기에 있음.
- 여기다 혹 무엇을 더 하고 무엇을 뺄 가를 고려해주십시오. 차례, 순서 조정, 항목의 분류, 유목 조정, 통합, 삭제, 추가 등이 요청됨.
- 현재 90여 항목임, 100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

2) 2단계 작업: 각 항목의 위치 재조정, 위계/포함관계 설정

- 이론이든 실제든 공교육의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정체(자유민주주의, 공화정, 자유시장경제 등) 아래, 각종 법과 제도 아래, 시(수학기간)공간(교육이 이루어지는 마당) 아래, 자격 있는 교사제도(정원 등) 아래, 재정과 시설 뒷받침 아래 움직인다고 파악함.
- 현재 교육과정은 만들어 둔 문서일 뿐, 교육활동의 질 관리, 각칙의 관리, 각종 교육폐단의 시정 등의 측면에서 무력한 편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과 결과 중심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나아감(졸업, 진급 요건 설정, 성취기준 등).
- 먼저 규범적으로 각 항목이 어디에 배치되면 좋을까를 생각하여 잠정적으로 배치하였음.
- 현재 영역으로는 공교육의 목적과 교육에 대한 권리, 국가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와 절차 및 운영, 세계 속의 우리 교육, 대한민국 교육의 비전, 국가교육과정기준에 대한 각 주체의 권한과 책임, 개정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교과교육의 편성과 구성 및 운영 방향, 창의적 체험활동, 취학전 교육기, 의무교육기(초등학교, 중학교), 진로별 교육기(진학계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교, 편성/운영/평가상의 유의점,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시설 설비 등의 항목이 보임.
- 총칙은 5개의 대영역으로 나누어 배치할 예정임(서론introduction, 기본방향 platforms, 각칙구성의 틀frameworks, 교육과정 질 관리/실행과 지원 지침 guidelines)
- 위 5개 대영역을 다시 중영역, 소영역으로 나눌 예정임.
- 결국 이는 교육과정기준 총칙 안의 작업과 그 밖의 상위 환경(각종 법)과 후속되는 하위 환경(각칙의 총칙, 각칙의 각칙)을 구분하는 작업이 될 것임.

	교육과정 관련 항목	재조정된 위치							항목의 안정성,성 구체	현재 위치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중·고 교육법 시행령	총칙	각 칙의 총칙	학교 교육 과정 문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중·고 교육법 시행령	총칙	각 칙의 총칙	학교 교육 과정 문서
헌법 사항	국민의 교육권과 의무	0														
	교육할 제도적 마당(기회/학교 등) 보장에 대해/ 가정/학교/기업/사회기관/가상공간 등/ 공-사교육	0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교육 특성에 따른 학 습권의 보장	0														
교육 기본 법 사항	교육기관(학교)의 명칭/ 학교급의 구분(의무 교육의 일관교육 고려)	0														
	우리나라의 교육이념, 교육목표	0														
	의무교육, 무상교육의 규정	0														
	학교급별 교육목표	0														
	학교급별 수학연한	0														
	속진과 유급의 규정	0														
	학기/분기의 규정	0														
	등교일수와 수업일수의 규정	0														
초·중·등 교 육법 사항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성격과 법적 지위, 기능	0														
	국가교육과정기준 개정 및 질 관리를 위한 기구의 법적 지위 및 권한			0												
	국가교육과정기준 개정 및 질 관리를 위한 체제, 일반적 절차 및 방법(참여집단, 유효 기간 등)			0												
	국가교육과정기준위원회 설치 및 운영			0												
	국가교육과정기준심의회 설치 및 운영			0												
	(여러 기관 등)국가교육과정기준 기준에 대				0											

	해 의견 제시 권한																	
	국가교육과정기준 개정 관련 단체와 개인의 명단 제시(심의진, 자문진, 연구개발진, 의견 제안진)				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발원 등 정부기관의 교육과정기준 연구 및 개발 기능의 명료화				0													
총칙 (기본 방향)	국가교육과정기준에서 기르려는 인간상					0												
	국가교육과정기준에서 지향하는 사회상					0												
	개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중점					0												
	총칙의 각칙의 총칙에 대한 리더십 및 그 수 용 방안 제시					0												
	공통필수 및 상이선택 교육과정 (성격, 목표, 계열, 과정, 편제, 활동, 교수학 습방법, 평가 등)					0												
	학교급간 교육과정 연계성, 계열성 확보를 위한 노 력 중점																	
	학교급별 졸업을 위한 필수(권장) 요건 규정					0												
	학년군별 일간, 주당 수업시수의 최소와 최 대					0												
	직업고 등에서 학습과 노동의 비율, 고교의 학기별 이수단위수 등					0												
	각종 교육활동의 질을 끌어올리는 ‘중’수준 교육과정 만들기																	
	우리 교육과정이 세계수준으로 발전하기 위 한 노력 중점, 특히 동아시아의 공영을 위한 교류 노력					0												
	세계통용 교육과정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국 가수준 규정					0												
	학교수준에서 국제공인 교육과정 도입 및 실행에 관 한 사항					0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고등교육법	중·고교법 시행령	총칙	각칙의 총칙	학교교육과정 정문										

								서										
총칙 (기본 방향? 지원 방향?)	방 영 사	대통령/교육부장관의 교육과정적 권한과 책임			0		0											
		교육감/교육장의 교육과정적 권한과 책임			0		0											
		지자체의 교육과정적 권한과 책임			0													
		학교장의 교육과정적 권한과 책임					0											
		교사의 교육과정적 권한과 책임					0											
		학부모의 교육과정적 권한과 책임					0											
		학생의 교육과정적 권한과 책임					0											
총칙 (각칙 성의 틀)	구 틀)	교과의 종류, 지위, 비중, 기능 규정, 교육의 비전과 관련된 교과교육의 목적					0											
		교과의 폐습(잘못된 관행) 개선에 대한 규정					0											
		교과군의 규정 및 근거?					0											
		교과의 미분화, 통합, 분화, 진로별 교과					0	0										
		교과(과목)의 기본적 운영 조건(시수, 학급당학생수 허용수준 최대·최소), 교과(과목)의 교수학습의 효율성 제고					0	0										
		교과(과목)의 학생에 의한 성공적 이수 조건 또는 교과의 성공적 이수를 위한 학생 요인						0										
		교과(과목)의 교사에 의한 성공적 수행 조건 또는 교과의 성공적 이수를 위한 교사 요인						0										
		교과통합적 주제(창의성, 협동성, 역량, 진로 등)의 교과에서 실현					0											
		계기교육의 운영					0											
		국제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의 규정					0											
창의적 체험활동의 총칙 개발					0													
총칙 (각 칙 구)	취학전	취학전 학교의 교육과정 개요 1. 학습자 특성 및 교육목표 2.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의 방향 3.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표					0											

성 의 틀)		4. 편성·운영·평가의 중점(교재, 교수학습 및 교 육평가의 중점, 총칙 및 다른 교과와 연계 등) 5. 학교 개설 프로그램이 갖출 요건																
	의 무 교 육 기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요 1. 학습자 특성 및 교육목표 2.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의 방향 3.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표 4. 편성·운영·평가의 중점(교재, 교수학습 및 교 육평가의 중점, 총칙 및 다른 교과와 연계 등) 5. 학교 개설 프로그램이 갖출 요건				0												
		중학교의 교육과정 개요 1. 학습자 특성 및 교육목표 2.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의 방향 3.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표 4. 편성·운영·평가의 중점(교재, 교수학습 및 교 육평가의 중점, 총칙 및 다른 교과와 연계 등) 5. 학교 개설 과목이 갖출 요건				0												
	진 로 별 교 육 기	진학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요 1. 학습자 특성 및 교육목표 2.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의 방향, 진로 집중과정 등 3.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표, 학기별 이수단위 4. 편성·운영·평가의 중점(교재, 교수학습 및 교 육평가의 중점, 총칙 및 다른 교과와 연계 등) 5. 학교 개설 과목이 갖출 요건 6.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역내 학교간 협력 사항				0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요 1. 학습자 특성 및 교육목표 2.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의 방향, 학과별 교육과 정 등 3.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표, 학기별 이수단위 4. 편성·운영·평가의 중점(교재, 교수학습 및 교 육평가의 중점, 총칙 및 다른 교과와 연계 등) 5. 직업체험, 실습, 인턴십 교육의 규정 6. 학교 개설 과목이 갖출 요건 7.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역내 학교간 협력 사항				0												

	특수 및 평생교육기	특수학교(장애아, 방통중고 등 교육취약계층수용학교)의 교육과정 개요 1. 학습자 특성 및 교육목표 2.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의 방향 3.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표 4. 편성·운영·평가의 중점(교재,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의 중점, 총칙 및 다른 교과와 연계 등) 5. 학교 개설 과목이 갖출 요건 6.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특수아동 보조 교사의 자격 요건 및 사항					0											
			현법	교육기본법	초·중·고등교육법	중·고등교육시행령	총칙	각칙의총칙	학교교육과정문서									
총칙 (운영 지원 항)	및사	이 교육과정의 편성상의 유의점(그간 편성상 편법, 적폐의 개선 사항, 학습권 보장, 균형과 초점)					0											
		학생의 타고난 발달, 소질, 적성 존중					0											
		학생의 길러진 장점 수준, 능력, 장애극복 정도, 후천적 성장과 발달 존중					0											
		학생의 학업 및 직업 진로 존중(진로의 융통성, 진로 변경에 따른 조치)					0											
		개인별 교육과정 설계 모듈																
총칙 (운영 지원 항)	및사	교과서 발행제(국·검·인정)					0											
		교과서의 지급(학교용/학년용/학급용/개인용) 및 대여 방식(무·유료)					0											
		교과서 사용 유효기간					0											
		교과서 외의 교재, 학습준비물의 확보					0											
		교과서 재사용에 대한 규정(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매우 허술하게 진행 중)					0											
총칙 (운영 및		학업중단자의 직업교육 및 고용가능성 확보를 위한 학습권 보장 노력					0											

지원 항)	사	교육취약집단(예체능계/직업계/다문화가정/귀국학생/ 장애우/영재아/학습부진학생/학습중단학생/폭력학 생 등)의 지원 사항 - 지원 사항을 세분화 1. 교육부 단위 지원사항 2. 지역 교육청 단위 지원사항 3. 학교 단위 지원사항 4. 학급 단위 지원사항 5. 학부모 단위 지원사항					0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지자체·협장학교 및 학교관리자의 지원 사항, 특 히 달라져야 할 학교 경영, 학급 경영 사항(주체 별 역할을 '표'로 표현)					0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역내 학교구의 형성과 운영					0											
		벽오지/분교에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 중점					0											
		대안학교 등에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					0											
총칙 (운영 지원 항)	및 사																	
		이 교육과정의 운영상의 유의점(운영상 편법, 적폐 의 개선 사항, 명실상부, 편성과 운영의 불일치)					0											
		사립학교의 교육과정적 자율 권한과 책임					0											
		학교급별 교육과정 구성 안내 - 절차, 모델 등 제시																
		정규 교육과정의 몰입도(집중도) 제고 노력					0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0											
		정규 교육과정과 학교 내 돌봄교실 설치 및 운영					0											
		정규 교육과정과 주말 및 방학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정규 교육과정과 사교육 및 학원 수강과 교육과정					0											
총칙 (운영 지원 항)	및 사																	
		교사의 자격(능력, 전문성), 종류와 교육과 정 운영					0											
		자국 교사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위한 임시 교사 자격부여(일본은 초중에도 실시하고 있 음)					0											

	- 영어에 들어와있는 '영어원어민 교사'의 자격에 관한 내용도 포함																	
	교원의 성장과 발달(동기유발기제, 직급다층화, 승진체계 다변화, 교원 학습의 지원)						0											
	담임 교사의 교육과정적 권한과 책임, 교원의 지속적 연수 및 자기 연찬에 관한 안내						0											
	교과 교사의 교육과정적 권한과 책임						0											
	교사의 근무여건(학생수, 이론 설명 수업에서 일당·주당 수업시수)						0											
	계약직 강사의 자격(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및 종류						0											
총칙 (운영 지원 항)	및 사 평가 사 항	학교의 시설과 설비(체육관, 운동장, 실험실습 실기실 등, 조명, 냉난방, 환기 등)					0											
		학교급별 교과교실의 확보					0											
		학년군별 통학 여건 고려와 기숙사 시설					0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지원과 활용					0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0											
		이 교육과정의 평가상의 유의점(평가와 질 관리상 편법, 적폐의 개선 사항)					0											
		이 교육과정에 따른 내신 성적 산출, 학생 학업 성취의 평가					0											
		학생 개개인의 평가 관리 체계를 통한 진로 설계 방안																
		대학입시와 연계, 고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					0											
		교원 수행의 평가(교사의 교육과정적 책임)					0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					0											
		이 교육과정의 평가와 개선					0											
		국가 공인 교육과정 인증/수료 기준																
총칙 (서론)	고시문																	
	개정까지 경과문(참여진)																	

	각종 차례																	
	고시 문서의 법적 기반																	
	시행 시기																	
	학제 등 배경 이해를 위한 도식																	
총칙 (부록)																		
	교육과정 문서의 용어 정리					0												
	교육과정 문서 항목과 관련 법규의 관계 드러냄 - 교육법을 교육과정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석					0												
	개정 교육과정 총칙에서 신·구 비교					0												

5. 형식 개선을 향한 요약과 결론

교육과정 개정은 좀 더 나은 교육활동을 위한 노력이고 과정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교육과정 문서 개선에도 과감한 혁신과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들로부터 시사점을 얻고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핀란드, 영국, 싱가포르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의 구성 체제를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4개국의 교육과정 총칙 문서들은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공히 구성 체제의 기본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문서 구성의 축(대영역)이 ‘도입, 기본 방향, 각칙 구성의 틀, 실행 지침과 지원, 부록’의 5가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을 개선하기 위한 관점을 ‘내용적 측면’에서는 ‘종합성·체계성’으로, ‘기능적 측면’에서는 ‘기준성·혁신성’으로, ‘사용적 측면’에서는 ‘가독성·편의성’으로 보고, 모든 학교급과 각칙들을 체계적으로 아울러, 교육활동에 기준을 제시하고 낮은 교육의 질을 높이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고, 보고 싶고 읽고 싶은 교육과정 문서로의 변화를 전제하여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의 구성 체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4개국의 교육과정 문서를 비교·분석하고 총칙의 개선안을 구안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 연구로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현행 우리나라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대한 모든 사항은 고시 문서로 규정되고 있으며, 기준 문서에 지침이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않다. 또한 총칙의 각 지침이 어떤 근거로 제시되었는지가 명료하지 않다. 이

러한 상황은 국가교육과정기준의 해석과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성격 및 학교급별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국가나 교육청의 역할과 같은 요소들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하여 교육과정 총칙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즉 법규와 고시문과의 뚜렷한 역할분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 총칙의 고시 문서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침 및 안내를 상세히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해설서나 관련 문서들의 주요 기능은 학교 현장 교사들의 교육과정 활동을 안내하고 지원하는데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교육과정과 해설서의 내용을 분리하지 말고 교육과정 총칙 고시 문서와 해설서를 통합한 교육과정 총칙을 구안하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칙과 시·도 교육청 및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발간하는 관련 문서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문서 역시 가능한 한 고시 문서와 통합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가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교육과정 총칙에 모든 학교급이 통합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여 학교급별 또는 공통교육과정(초·중학교)과 선택교육과정(고등학교) 등으로 분리하여 학교 유형에 따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학전 교육도 ‘누리과정’으로 국가교육과정기준이 개발된 상황에서 누리과정도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에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만약 총칙 문서가 종합적으로 많은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면 분권을 고려하여 경제성과 사용상의 편리성을 갖추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통권이나 분권의 어떠한 경우이든 학교급간 연계성을 갖추고 분화·통합·연계의 계열을 문서상에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과정 ‘총칙’의 존재 이유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공통으로 지향하는 가치의 ‘각칙’에 대한 지도력의 발휘, 교육과정 실행에서 국가 교육정책의 실효성 획득, 교육과정의 충실한 실행 등에서 찾는다면(소경희, 2000; 홍후조, 2006; 김진숙 외, 2011에서 재인용), 교육과정기준 총칙 문서 내에 교과 편제만이 아니라 각 교과의 목적, 성취 목표, 학습의 이유, 교수·학습 방법 등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규정해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핀란드, 영국 교육과정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다섯째, 최근 들어 총칙은 수시로 개정되어 도리어 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과, 각칙들을 여러 기관에서 분산 연구 개발하여 그 통일성도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향후 총칙 문서에는 총칙 문서의 질 관리 및 개정의 절차와 일정 및

참여집단 등을 명시하여 수시·일시·동시·분산 개정에서 오는 혼란을 막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할 것이다. 이미 학교급별 연차개정이나 교과군별 순차개정에 대한 대안들도 제안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의 기본 질문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교육상황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이다. 따라서 문서 구성 체제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현행 교육과정 즉, 국가교육과정기준, 학교, 계열, 전공, 교과, 과목, 단위 등의 여러 수준에서 유지할 것과 삭제·폐지, 축소·약화, 확대·강화, 추가·신설의 형태로 개선할 것(홍후조, 2006)을 찾아 교육과정기준 문서의 내용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복잡하고 혼란스런 교육 상황에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분명한 ‘기준’을 잡아주는 결과물로 도출되어 교육활동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

제3장.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의 ‘내용’ 개선 방안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의 형식이 어느 정도 완결성을 띤다면 그 내용은 완결성을 띠기 어렵다. 내용은 사회, 교육, 교육목적, 학습자, 교과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육과정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연구자에 따라서도 그 내용 변화의 초점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본 장은 부분적인 언급일 수밖에 없는 본원적 한계를 가진다.

1. 국가교육과정기준 개선의 방향

1) 사회적 측면

-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 확장에 기여
-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세계 인류애의 확산
- 통일을 향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강화
- 지구촌과 동아시아에서 어부지리 처지를 벗어나 협력·협동하는 시민 양성
- 공동체에 대한 헌신, 예의, 교양, 책임의식을 가진 시민 양성

2) 학습자 측면

- 평생학습의 기초를 닦아주고, 진로를 밝혀주는 교육과정기준
- 학습과 생활의 기초로서 문해력(literacy), 수리력(numeracy)을 넘어 탐구력(inquiry)을 강조하는 교육과정기준
- 교육 내외에서 창의성과 진로, 사회협동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기준
- 민주시민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기준

-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자신감, 흥미, 호기심 등)과 건강과 생명을 강조하는 교육과정기준
- 교육취약집단의 핵심요구가 충족되는 교육과정기준

3) 교육 측면

- 다른 교육정책의 중심과 기준으로서의 교육과정기준
- 학교급별 핵심특성이 존중되고 충족되는 교육과정기준
- 학교급별 교원의 자율성, 전문성, 책무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기준
- 교육활동의 기준이자 종합교육계획서로서 교육과정기준
- 학교교육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중’수준 교육과정기준
- 교육현장, 교과교육의 적폐를 시정하는 교육과정기준
- 수업에서 교과서보다 각종 시험보다 우선시되는 교육과정기준
- 허례적인 형식보다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중시하는 교육과정기준
-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만한 교육과정기준 등

2. 국가교육과정기준 핵심 기준 구현의 기본 입장(key principles)

어떤 원칙이 제 구실하는 국가 교육과정 핵심기준을 만들고, 학교와 교원이 교육과정 실질적인 주체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잠정적인 대답은 아래와 같다.

- ▶ 이 교육과정기준은 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평가의 기본 방향 제시하는 핵심 기준일 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은 지역, 학교,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이 교육과정기준은 학습자의 적성, 능력, 진로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교육과정 기준을 통해 학생들은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활동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평생학습자의 기본소양(학습동기, 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력)을 갖추도록 지도해

야 한다.

- ▶ 이 교육과정기준은 교육기회 보장을 책임지고 학습 결과와 그 질을 책임지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바라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간, 학교간 협력 강조하고,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성취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 ▶ 이 교육과정기준은 교과를 통한 핵심 지식 이해, 통합적 프로그램을 통한 실생활에 쓰이는 능력, 특별활동을 통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습득할 기회를 균형있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 이 교육과정기준은 학습자의 다양한 차이를 보정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의 성, 종교, 언어, 가정형편, 거주지, 인종, 국적에 차별없이 의무교육기의 기본교육을 누구나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3. 국가교육과정기준을 통해 달성할 핵심 가치와 태도(key values and attitudes)

- ▶ 공통성: 모든 학습자가 처한 성, 지역, 계층, 언어, 국적 등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책임지고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기초, 기본, 공통, 교양적 가치(정직성, 인내심, 의지, 성실성, 공정성/객관성, 신뢰성, 타인의 가치와 존엄성 존중, 공감과 배려)
- ▶ 다양성: 모든 학습자의 어떠한 차이, 그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타고난 적성(흥미, 관심, 소질 등)과 나아갈 학업 및 직업 진로에 따라 집단별로 알맞은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되는 다양하고 상이하며 독특한 가치
- ▶ 창의성: 새롭고 유용한 발상, 발견, 발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의 획득
- ▶ 민주성: 자유, 평등, 인권, 풍요를 위한 권리와 의무 책임의 균형 및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차이의 존중, 법질서와 도덕의 존중, 인류애(사해동포주의) 등
- ▶ 자율성: 지방, 지역사회, 학교, 학급 등의 특색에 맞는 자유로운 결정 권한의 발휘를 통한 독특성, 정체성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 ▶ 친환경성: 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태도, 환경보전과 가꾸는 생활
- ▶ 효율성: 한정된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해 높은 교육성과를 달성함으로써 획득되는 가치

4. 배워야 할 핵심 교과 또는 학습영역(key learning areas)

- ▶ 한국어, 외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술
- ▶ 예술(미술과 디자인, 음악 공연예술, 연극 영화 영상, 문화 콘텐츠 등으로 장르를 다양화)
- ▶ 체육과 건강

이들 기본 교과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기에 적용하되, 그 이하 초등 저학년과 취학전 교육과정은 이보다 더 통합된 미분화된 상태로 처방하고, 고교 교육과정은 진로별로 처방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교과교육과정기준으로써, 주로 교과서로 혹은 수업으로써 구현될 것들을 구분하고, 나아가 교사주도적인 교과와 학생주도적인 교과로 나누어서 비중을 달리한다. 교과의 재구조화 필요(비중 약화, 분량 축소)에 따른 핵심역량의 강화(비중 강화, 분량 확대), 고교 진로별 교육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만 아니라 모든 교과가 동등하게 제구실하도록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5. 달성할 핵심 역량(key competencies)

(1) 학습영역, 특별활동 등 학교교육 전체를 통해 달성해야할 모든 역량을 망라하거나, (2) 교과나 특별활동에 의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영역들이 잘 못하거나 전혀 무관심한 부분에 한정하여 역량을 정의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기준을 통해 생활력, 사회적 역량, 할 수 있는 능력, 체화된 역량, 현장에서 발현되는 암묵지, 전략과 기술 등을 개발한다. 그 목적은 통합적 실무적 능력을 익혀서 유능하고 경쟁력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재량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기른다고 할 때 재량활동은 이름, 형식이고 그 내용과 결과는 다른 것이다. 이처럼 영역의 명칭(통합 교육과정, 통합활동)과 그 영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통합적 역량)은 분리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각 영역의 형식과 내용의 분리인데, 그 명칭을 무엇으로 함이 적절할까? 학습영역(교과의 통합적 특성을 지칭)-통합활동-특별활동 ; 학습영역-특별활동(통합 활동을 포함) ; 지식-역량-가치와 태도

길러야할 역량을 정하고, 이에 맞는 cross-curricular theme을 정하고, 어떤 프로그램 혹은 integrated programs/activities를 통해서, integrated goals을 달성하도록 한다.

핵심역량의 개념 정의는? 핵심역량은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모든 것인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인가? 여기에는 이해된 지식이나 가치나 태도 부분을 분리해서 보아야 하는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각각의 구인(교과, 통합, 특활을

모두 포괄하거나,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할 역량만 고려할 경우에 따라 달라질 것)은 무엇인가? 잠정적으로 다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 ▶ **자아관련** : 자기관리력(건강/체력/의지/감정/시간), 자기존중감, 예술적 심미성, 진로개척능력(자활, 선택과 준비)
- ▶ **학습관련** : 문해력, 수리력, 정보처리능력, 자기주도적 협동적 학습력, 문제해결력/탐구력(비판력과 창의력, 논리적 사고력과 경험적 실증력, 추리력, 분석력과 종합력)
- ▶ **타인관련**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협동, 타인 존중과 배려, 관용, 공감)
- ▶ **사회관련** : 직업수행능력(지식과 기술, 태도, 자격과 면허), 기획력, 실행력(실천력), 교섭력, 조직화능력, 민주시민소양(권리 참여 의무, 다양한 가치 수용, 지속가능한 발전, 성찰적 사고와 행동), 세계시민소양(다문화 적응력)

핵심역량의 다른 영역과 관계는 무엇인가? 다른 영역으로 되는 것/절반되는 것(핵심역량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것)/전혀 안 되는 것(핵심역량이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핵심역량이 교과와 구분된 영역 혹은 목표라면 누가 담당하나?

핵심역량이 차지하는 프로그램의 지위나 비중은?

얼마나 기간, 얼마나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학년군, 학교급에 따른 차별적 접근은? 초등 저학년 미분화된 교과교육 형태로 등장 ; 초등 고학년, 중학교의 교과/특활을 보완하는 독립적 프로그램 및 활동 영역으로 존재할 필요 ; 고교에서 진로에 따른 학습을 종합하는 독립적 프로그램 및 활동 영역으로 존재할 필요.

그 결과 산출물은? 가시적 결과물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인턴십 참여 경험 기록 등

그 결과 평가는? PISA형 역량검사의 개발은 가능한가?

6. 중수준의 국가교육과정기준에 들어갈 항목들

- ▶ 방향: 크게 기준, 틀, 지침이 들어가도록, 기본 원칙과 원리를 구조적●종합적으로 제시
- ▶ 현행 교육과정기준의 비판적 이해와 보다 나은 것의 창의적 개발
- ▶ 항목: 망라성, 배타성, 법령에 들어갈 사항, 고시에 들어갈 사항으로 구분하되 일단 망라성있게 포괄함.
- ▶ 학교명, 적정 수업(수학)연한, 수업연한이 더 적게 혹은 많이 필요한 경우(속진, 유급), 학년도 규정과 학기(분기) 규정, 학년별●교과별 시간배당, 주당 수업시간, 단위수업시간의 규정 여부
- ▶ 교육받은 인간상, 지향해야할 사회상, 소망하는 바람직한 교육상을 아울러 제시, 미래지향성, 교육활동중심성, 학생경험중심성, 늘 항상적으로 강조되는 가치, 덕목, 비전, 교육목표의 중요성, 거둬 중요하지만 잘 달성되지 않는 항목(진로, 창의성, 협동성 등), 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학생들 안에 만들어주는 것이어서, 비전 꿈, 성취 과정은 어렵다.
- ▶ 단계별 교육목표, 교육중점
- ▶ 구현되어야할 최소학업성취기준(교육과정 측면의 교육복지 수준 제시) 문해력, 수리력, 수영과 인명구조훈련, 예술/체육/기술/외국어 필수선택 학습기회, 진로교육(직업기술, 직업교육 등), 진로별 학습기회 제공받기
- ▶ 초등학교 고학년의 기본교과 종수, 중학교의 신설 분화될 선택과목, 진학계 고교 기본 과정 종수, 직업계 고교 계열 및 학과 종수
- ▶ 필수 선택교과목의 예시(예술, 체육, 기술, 외국어)
- ▶ 각 교과목의 주요 발전 방향과 정책 제시(집중이수, 진로집중과정, 외국어교육정책, 국어와 한문 정책, 사회과 정비 방향, 수학의 난도 적정화 방안, 과학과 정비 방안, 기술과의 첨단화·다양화 방안, 예술과의 선택 방안, 체육과의 필수 선택 방안 등)
- ▶ 학생의 성장과 발달, 학습의 본령
- ▶ 학생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원들이 유념해야할 사항
- ▶ 학생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꾸며야 할 교육환경들
- ▶ 학교 및 학습 집단의 적정 크기(특수지의 경우, 특수아가 포함된 경우)
- ▶ 각 주체들의 교육과정 구현과 관련된 과제들
- ▶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교내 교재와 시설, 외부 자원 조달 및 지원 방안
- ▶ 교과서(발행제), 지도서, 필수교구, 교과 교실 등
- ▶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인적 자원(교원/준교원 양성 및 수급 배치 등) 수급 방안, 제2외국어를 확장하기 위한 결혼이민자 등의 교

수자격 부여, 직업기술을 배우기 위한 능력·열정·정성을 지닌 이들의 교단 영입 등

- ▶ 학생 학습평가, 교사 수업평가, 학교관리자/교육청 등 교육과정 제공자 평가
- ▶ 교육과정기준의 평가, 개선 방안(총칙과 각칙의 협업을 통한 교과교육과정기준 개선, 교과군별 연차별, 학년군별 순차별)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먼저 국가교육과정총칙의 큰 그림(big picture)을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행복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바람직한 인간, 사회를 지향할 필요 --> 새로운 교육 요구 --> 새로운 교육과정 요구 모든 사람을 위한 공통 교육과정과 각 집단을 위한 상이(진로별) 교육과정						역점	개선 방향			
교육과정 교육부 기준 설계	교육과정 핵심 기준 설계	지향하는 사회상	성숙한 자유민주사회, 동아시아 통일강국, 성장하는 복지사회, 협동과 배려사회, 과학기술 발전과 생태친화사회, 선진문화국가 극복할 것: 종북좌파와 및 반대한민국, 절망과 자멸의 우울한 사회분위기, 패배주의, 상업없는 공허한 사상과 이론					-알, 살, 함의 일체화 -개인과 공동체의 연결 -평생학습자 형성 -공동성과 상이성의 점진적 변화 -공교육의 공공성 협동성 추구	인간상, 교육상, 사회상의 균형적 추구 추구할 가치의 규명 핵심역량을 추구할 가치와 연결하고 교육목표와 연결할 필요성		
		기르려는 인간상	건강한 자기존중감을 형성하여, 인격적 협동적 창의적 문제해결력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성숙한 민주시민 협동하고 기여하는 사람, 창조적인 문제해결력을 지닌 사람, 자주적 성실한 생활인, 평생학습인, 건강한 사람, 꿈과 희망의 사람 등 극복할 것: 절망인, 파괴인, 의존인, 패배의식에 절은 사람, 공허한 무기력인 등								
		소망하는 교육상	자율성과 전문적인 책무성 높은 교사, 인지 정의 심동 사회성이 균형 잡힌 교사와 학생, 성실히 배우고 창의적인 학생, 질 높은 수업과 안전한 학교생활, 협동과 배려가 있는 교육 극복할 것: 비교와 경쟁시키는 학교, 노력하지 않는 교사와 학생, 무기력하고 일상적인 수업, 불안한 학교, 과소 과대 규모 학교								
		지향하는 가치	공정성(차별없음), 자기주도성과 협동성, 기초성과 수월성(각자의 잠재력 최대한 실현) 극복할 것: 비교 경쟁, 차별, 분열, 학습부진 누적이거나 학업 중단에 대한 무관심, 무작정 공부와 대학진학, 과열된 진학률, 책상물림, 저수준 성취, 직업기술능력의 부재, 절망과 패배감, 중독과 자살								
		기본 목표와 통합 역량	① 자아관련 : 자기관리력(건강/체력/의지/감정/시간), 자기존중감, 예술적 심미성, 진로계획능력(자활, 선택과 준비) ② 학습관련 : 문해력, 탐구력, 수리력, 정보처리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비판력과 창의력, 논리적 사고력과 경험적 실증력, 추리력, 분석력과 종합력), 자기주도학습력, 협동학습력 등 ③ 집단관련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협동, 타인 존중과 배려, 관용, 공감), 직업수행능력(지식과 기술, 태도, 자격과 면허, 기획력, 실행력(실천력), 교섭력, 조직화능력 등) ④ 공동체관련 : 자유민주시민소양(권리 참여 의무, 다양한 가치 수용, 지속가능한 발전, 성찰적 사고와 행동, 통일국가의 꿈포기), 세계시민소양(다문화 적응력,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헌신)							-행복한 개인, 건강한 사회	
	교육과정 학교 설계	단 계	기 초		기 본		심 화		-지식(K>S>A)의 습득과 활용 -주요성취기준 제시 및 확인 -교과간 연계(중복 해소) -교과의 학년단 계열성 추구 -효율적 학습, 불필요한 학습요소 제거 -자기주도적 학습(학습에 대한 필요성, 책임감 형성) -인지적, 성찰적 삶을 위한 교육 -교양인의 교육으로부터 전문직업인의 교육으로 점진 이행, 초등 저학년 미분화된 교과교육 형태로 등장 : 초등 고학년, 중학교의 교과/특활을 보완하는 독립적 프로그램 및 활동 영역으로 존재할 필요 ; 고교에서 진로에 따른 학습을 종합하는 독립적 프로그램 및 활동 영역으로 존재할 필요.	적정화 방안 (적절성 연계성 계열성 집중성 균형성)	
			자라는 기쁨 / 진로인식		자신과 타인 존중 / 진로탐색		사회적 역할 인식 / 진로선택				
		학 년	3~5세	1~3	4~6	7~9	10~12				
		교과	종류	언어 사회 탐구 건강 표현	국어 영어 산수 슬기로운 생활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	생활국어 생활영어, 생활외국어 생활사회 생활수학 생활과학 생활기술 체육과 보건 음악과 공연예술 미술과 디자인	생활국어 생활외국어(필수선택) 개인과 사회(도덕과 종교) 생활수학 생활과학 생활기술 기술(필수선택) 체육과 보건(필수선택) 예술(필수선택)	(교양) 기본학력 정비, 시민교양교육 (진학계 과정): 인문, 사회, 경성, 국제 이학, 공학(lab), 공학(field), IT, 보건의료, 미술디자인, 음악, 연극영화영상, 개인운동, 단체운동, 스포츠산업 (직업계 산업 분야): 공업, 상업, IT, 농생명, 수산해운, 가사실업 (심화과목군/UP) 교과수준을 넘어서는 학업과 직업전문자격			
			중심	-유·초연계 -기초학습능력 배양 -호기심과 동기 유발 -적응력 -head start 발동	-기초학습능력 배양 -상하위 5%집단 특별 배려 -건강한 자의식, 수명 완성 -호기심과 학습 동기 유지 -협동하는 법 -진로 인식	-기본학습능력 배양 -상하위 5% 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 -분기 및 학기 집중 이수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자아정체감/자기존중감, 협동, 배려, 관용 -진로 탐색	-고교 공통, 대계열(진학계/직업계) 공통, 중계열 공통(직업계 5개, 진학계 4개), 과정(직업계는 학과) 공통의 균형 -적성 능력 진로에 따른 선택과 집중 -사회적 책임감 형성 -진로 선택과 준비				
교육과정 학교 평가	통합 역량	창의성, 진로, 협동성 생활력, 사회적 역량, 할 수 있는 능력, 체화된 역량, 현장에서 발휘되는 암묵지, 전라과 기술 등의 개발 가시적 결과물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인턴십 참여 경험 기록 등					능력(S>A>K)(실천력) 경제적/민주적 삶				
	특활	개인의 선호(취미/개발활동/동아리활동)와 사회적 도움(봉사활동, 진로활동)을 통한 경험과 태도 형성					태도(A>S>K)				
	교육과정 학교 평가	창의적 계획과 실천 지원	지역의 여건(특성, 요구)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성화, 다양한 층진 지원 학교간 지역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위한 적극적 역할, 학습권 보장의 기회 확충과 학습 보장 보장의 학습 환경 구축					교육과정의 실행의 지원	자율성 전문성 책무성		
교육과정 학교 평가	창의적 계획과 실천 실행	학교 교사의 전문성에 의거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증진, 학년군, 교과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의 적정화 교사의 교육력과 학생의 학습력을 증진시키는 교육과정, 실제로 의미있는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교사와 학생의 어울림, 협동과 배려를 통한 학생이 수용되는 분위기					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주제	향상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학생평가와 질 관리	기초학력책임지도제 기초학력진단평가(초1) 보정교육 내실화	기초학력책임지도제(초3), 기본학력책임지도제(보통학속 강화) 기초학력성취도평가(초6), 기본학력성취도평가(중3) PISA형 역량검사		진로개발책임지도제, 진로별대입시(고3) PISA형 역량검사 각종 국가공인자격과 면허시험		-적기 진단, 개입과 지원 -주요 성취기준 개발 -교육의 성과 관리	어디까지, 왜, 책임져야 하는방안			
교육과정 학교 평가	교육과정 평가와 질 관리	현장에서 성취와 부조화, 계획(구조와 내용), 운영, 성과 단계의 평가, 학교교육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교육과정, 교육과정기준의 점진적 개정에 유의 학습단계별(공통필수, 상이선택), 학교급별, 구성영역별(총칙과 각칙), 대상별(기준과 교과서 등) 평가					- 교육과정 평가 대상, 영역, 방법, 준거, 절차, 피드백의 정연 - 수업과 학생 경험의 질 향상 기여	더 나은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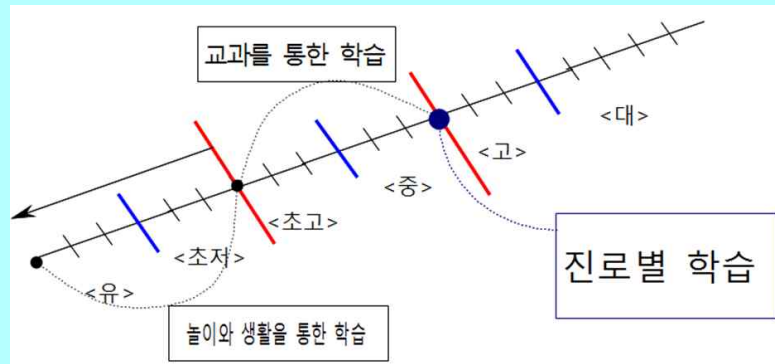
7.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과 각칙의 핵심기능 개선의 과제

- ▶ 그간 총칙이나 각칙은 그 주사용자(독자)가 불분명하였다. 그래서 뚜렷이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실행하라는 것인지가 불분명했다. 교육과정기준이 교육활동의 기준이라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주인인 학교관리자와 교사들을 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 ▶ 교육과정은 복잡다단한 교육활동의 기준을 제시해 알맞은 학습기회를 열어주는 규범적인 일이므로, 총‘론’을 거친 후에는 총‘칙’으로, 각‘론’을 거친 후에는 각‘칙’으로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온갖 것을 형식적으로 구색맞추기 식으로 늘어놓는 문서는 아니어야 할 것이다.
- ▶ 교육과정 문서는 기준을 담는 것이고, 그것은 규칙으로서 총칙과 각칙이라고 이름붙여야 하듯이 부령으로 ‘국가교육과정기준에관한규정’을 신설할 필요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고시는 미약한 편이다.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이 ‘교과용도서에관한 규정’보다 상위의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교육과정기준 중심의 교육활동이 펼쳐질 수 있는 방안을 법적인 측면에서 강구해야 한다. 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국·검·인정 교과서를 학교 수업에 사용토록 하여 교과서는 교육과정기준보다 수업에서 확고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하가 전도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 총칙: 교육과정 총론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왔다. 그만큼 현장에는 지침이나 안내가 되지 못했다. 학교장이 지역이나 학교 실정 및 학생의 요구 등에 비추어 창의적으로 학교를 경영하여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모본(母本)으로 기능(학교 교육활동 경영의 모본), 담임교사의 학생지도나 학급경영의 참고서로서 우선적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교육정책(교원 수급, 학생 수용, 시설과 설비, 교과서, 각종 교육평가정책 등)의 수립과 집행의 참고서 등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각칙: 현장 교사가 좋은 수업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에는 각칙이 교과서 구성에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그것이 수업의 중심이 되어 왔다. 교과서 중심 수업이 아니라 교육과정기준 중심의 수업이 되려면 각칙이 교사의 수업의 창의적 구안에 도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각칙을 보고 교사가 수업을 유도해낼 수 있으면 좋은 각칙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각칙은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좋은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본(母本)으로 기능(수업의 모본, 교과외 활동의 모본)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고 교과서 제작이나 평가의 안내 역할을 도외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선순위이다. 즉 각칙은 우선적으로 수업의 모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참고서 구성, 평가 도구의 제작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과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참고서 등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총칙은 학교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종합계획서로서 교육

종합시정서로서, 학교 경영 및 학급 경영을 위한 종합계획서로서 그 시정서로서 총칙의 개발, 수업종합계획서이자 수업종합시정서로서 각칙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 형식과 내용에서 학교에서 교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설명서 기능을 가지도록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 ▶ 총칙의 독자들: 학교장, 교원,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자, 교육과정학자, 교육학자, 학생, 학부모, 시민 등(학교장이 주된 독자가 되어야 함)
- ▶ 각칙의 독자들: 교사,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자, 교육과정학자, 교육학자, 시민 등(교사가 주된 독자가 되어야 함)
- ▶ 그렇다고 국가수준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도 없고, 그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국가수준은 국가 이상의 것에 대한 보편성과 다양성, 총체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면 될 것이고, 학교수준은 지방 및 지역사회의 특색과 학교의 특색을 반영하여 구체성과 교육활동을 위한 온전한 준비가 되는 완성도 높은 온전성, 학교 교원의 교육자로서 전문성과 자율성이 발휘되도록 여지가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자율성은 중요하며 그것은 학교급이나 교과 교육에서의 달성해야 할 기능에 달려 있다. 상대적으로 진학 및 직업 교육을 위해 학생 집단에 따라 알맞은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는 그 자율성이, 모든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균등한 책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클 수밖에 없다. 탈이념(탈가치지향)성이 강한 수학, 과학, 기술, 체육 등은 이념(가치지향)성이 강한 국어, 외국어, 사회, 예술보다 자율성이 클 수밖에 없다. 교과에 비해 교과외활동이 자율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만큼 국가수준에서 규정할만한 것에는 차이를 두어야 적정성(적도집권의 원리)이 달성될 것이다.
- ▶ 학교급간 단절보다 일관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 활동 기준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초등 저학년까지는 놀이와 활동을 중심으로 기초생활습관 형성 및 집단 내의 행동거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기초능력만 성취하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에서는 삶에 기본을 이루는 기본 교과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익히도록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교육은 국민생활교육의 기초를 이룬다.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사회의 자유로운 시민성이 형성되도록 하는데, 모든 교육의 생활적 기본, 학업적 기본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시기 학업을 위한 교과는 모두 ‘생활’이 붙는 생활국어, 생활외국어, 생활사회, 생활수학, 생활기술, 생활체육, 생활예술이 되는 인간 삶의 기본과 활력을 주는 쓰이는 공부, 살아있는 공부가 되도록 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고교는 졸업 후 다양한 대학의 전공이나 사회의 다양한 직업 세계로 진출하는 만큼 진로별로 다양한 학습기회를 주는 진로별 학습기이다. 대계열(진학계, 직업계), 중계열(진학계의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체육; 직업계의 농생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생활과학 등), 소계열(진학계의 진로집중과정, 직업계의 학과)에 따라 진로별, 하위영역별, 수준별로 교과목의 전개(展開)와 그것들의 조합이 필요하다. 특히 총칙은 진로별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일관교육의 한 근거로서 학습자 성장의 연속성과 시기별 학습의 특성

<표 34> 학교급의 구분과 교육 주요요소들의 일관성

학제(학년군)	유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	고	대	대학원 등
교육목표	책임형 공통교육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확대				맞춤형 선택교육을 통한 개인적 자본의 형성과 확대		
의무교육 여부	의무무상 교육				소수 무상교육, 유상교육		
교육 특성	공통 기초·기본·교양·진학 책임교육				상이 심화·특수·전문·전문 분야 맞춤교육		
진로	진로 인식, 탐색 및 정향(定向)				진로 결정 및 준비		
교과 특성 (교육특성)	미분화 통합 (놀이, 생활, 교육)		교과 분화 (교육과 학습)		과목 분화 및 진로별 선택과 집중 (학습과 교육, 직업 훈련)		
교원양성 및 운용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교육대학		사범대학		해당 대학원	

*출처 : 홍후조, 민부자(2012). 의무교육에서 학교, 교원, 교육과정 제도간 불일치의 문제와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19(1), 211-235.

- ▶ 다음으로, 학생 지도 원리는 학생 발달 단계의 문제이고, 발달 단계는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급의 교육과 관계된다. 본 연구와 관련지어 보면, 고등학교는 중학교와도 학교 운영 원리나 교육의 초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이 최적의 효과와 효율을 거두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실의 형태나 그 운영(제공) 형태도 달라야 할 것이다. 학교급별 특성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포함하며, 이것은 곧 교육과정 운영 원리를 담고 있고, 이에 따라 교사들의 업무 양식도 달라진다. 이를 정리하면 위 표와 같다. 중학교 교육은 학교교육의 전체상 아래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유·초·중·고등교육 전체를 제시하였다. 한 연구(홍후조 외, 2013)에 따르면 중학교는 교과교실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고등학교의 그것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 교육과정의 발달 단계, 이에 따른 교사의 업무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고, 교육적 필요에 따라 교과교실이 적절히 제공될 때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교급별 교육목적이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보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냐, 집단별로 다른 진로별 교육을 제

공하는 것이냐에 따라 시설인 교과교실은 달라야 한다. 또한 교과를 가르치고 배우는 형태를 얼마나 분화, 세분화, 전문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배려를 고려하면서 진행되는 것이다.

<표 35> 학교급별 교육특성을 고려한 일관교육의 설계

	취학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의 목적	보호와 양육	기초 교육	기본 교육	진학 및 직업 교육	전문 직업교육
교육과정 (교과발달)	미분화	통합 및 분화	기본 교과 중심 + 분화된 선택과목	세분화 (진로별 진학 과정과 직업 학과)	전문화
수업의 특징	놀이와 활동	활동, 경험	개념, 원리	이론과 실제	강의, 실험/실습/실기
교수자의 주역할	보호자로서 담임	담임과 일부 교과전담	담임=교과담임	교과담임 > 담임	강좌별 전담교수 및 연구
학생	유아기 보호	아동기 담임에 의한 기초 생활 지도	청소년 전기 담임의 생활 지도와 교과담임의 수업지도	청소년후기 (준성인기) 교과담임의 수업지도	청소년후기 (성인기) 교수의 강의, 지도교수제
교실공간	반별 교실 공동활동공간 교사공동공간	학급 교실과 특별교실 교실내 교사공간 학년별 교무실	학급교실 특별교실 수준별 수업 교실 학년별 교무실 교과별 교무실 학급교실과 사물함	교과교실 교과별 교무실 진로지도실 학생용 별도 공간(사물함)	이론 강의실과 실험실, 세미나실, 연구실

[참고] 일관교육을 저해하는 교육기본제도간 불합치성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 교육제도간 불합치, 즉 6-3-3의 학제, 6-6의 교원 양성과 운용, 9-3의 의무교육과 교육과정 사이의 단절과 상충(mismatch)이 심각하다. 이것은 학교급간 단절을 초래하여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일관교육을 어렵게 한다.

<표 36> 학교·교원·교육과정 제도와 의무교육의 불일치

학교 제도	교원 양성 운용 제도	교육과정 제도	의무교육 제도
고등학교 3년	중등교원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중학교 교육과정	초·중학교 9년
초등학교 6년	초등교원	초등학교 교육과정	

위 표에서 보듯, 각 교육요소들 간의 불일치는 국가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학습자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도, 또한 교과 특성 적절하게 반영하는 데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기본교육제도 간의 불일치 속에서 의무교육의 내실화, 기초 기본 교육의 충실화, 책임지도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홍후조와 민부자(2012)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목표, 교육 특성, 교과 특성, 의무교육제, 교사 양성 등 다양한 교육의 요소들은 학제와 상당 부분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교육 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교육 내적 측면, 즉, 의무교육기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일관교육을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출생아수의 급감에 따른 학교와 학급의 소규모화, 이에 따른 교육의 영세화를 악화시키는 가운데 학교간 협력적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나 학교교육활동을 주도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들의 자격제도는 학교급을 넘나들며 협력으로 일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하나는 학교간 연계이다.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의 통합적 협동적 운영을 하되 취학전과 초등 저학년은 마을의 작은 기초학교(6년)에 다니도록 하고,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은 좀더 넓은 지역에서 학생들을 통학시켜서 기본학교(6년)에 다니게 한다. 고교는 기숙사를 갖추고 통학(학생수용, 학교선택)의 범위를 자유롭게 넓힌다. 특히 육지와 연결된 학교는 시도, 시군구 경계지역을 넘나들며 가장 근접한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하고, 육지로 연결된 기본학교는 적정 규모를 이루도록 한다.

다른 하나는 국가교육과정기준의 학교 정착과 창의적이고 질 높은 운영을 위하여 교원(특히 학교장)의 한 학교 근무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및 교사의 수업표준시수 제정 도입을 전제로 하여, 취학전 3년의 누리과정과 초등 저학년의 3년을, 초등 고학년 3년과 중학교 3년을 넘나들이 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원 자격제도의 신설 도입이 필요하다. 이것이 일관교육과 학교급간 통합(협력) 운영학교 실현의 핵심이다.

3-5세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현 교사자격증 1	교사자격증 2	교사자격증 3	교사자격증 4	교사자격증 5
신설 교사자격증 6				
		현 교사자격증 7		
		신설 교사자격증 8		
		현 교사 자격증 9		

[그림 7] 일관교육의 기초로서 교사의 분리 및 통합 양성을 위한 개념도

- ▶ 총칙 중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급별 교육과정, 대안학교(방통중고) 교육과정 등 특수한 여건 학교, 교육취약집단별, 교과군 융합인재교육(STEAM, LASS), 교과 통합적 주제 등을 위한 별도의 준(準)총칙 혹은 가교(架橋)총칙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 즉 이것들은 각칙과 유사하지만 주요 핵심 내용이나 지침이 총칙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준총칙 혹은 가교 총칙이라고 할 수 있다. 가교 총칙의 개발은 실효성 높은 총칙과 각칙이 되기 위한 방안이다. 각 부분의 성격과 목표, 각칙을 통한 현장에서 실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실현가능성을 먼저 입증하고, 그 중에 핵심사항을 총칙에 반영함으로써 총칙을 실효성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 ▶ 교과통합적 주제(창의성, 협동성, 진로)를 종적으로 여러 학교급, 횡적으로 여러 교과들을 관통해서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교과를넘어 교과를 통해서 달성할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것들도 가교 총칙으로 개발해 보고, 그 실효성이 입증될 때 총칙에 일부 항목으로 반영한다. 가교 총칙의 개발은 총칙을 실효성,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 ▶ ‘교육취약집단의 교육과정기준’에 대한 언급 및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학습부진아, 학업중단아, 영재아,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학습 장애, 발달 장애 및 기타 장애가 있는 학생들, 다문화가정 학생 등)의 학습권(가장 절실한 요구)을 보장하도록 하는 지침을 포함하여 각 집단에게 필요한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가교 총칙의 개발에 유의해야 한다.

8.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 개선의 몇 가지 방향과 방안

1) 국가교육과정기준 관련 교육법 및 총칙의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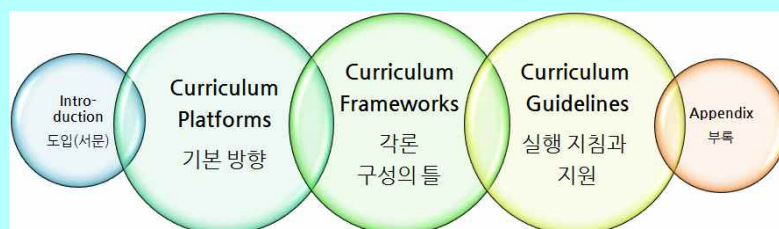
국가교육과정기준 총칙의 개정을 큰 개정과 작은 개정을 나누어 안내하고, 학년 군별 연차별 개정과 교과군별 순차적 개정의 방향을 강조하며, 총칙은 교과교육과정기준과 관련성에 유의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23조의 1~3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학교와 교원의 교육과정적 자율성과 전문성 및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원에게 적절한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격려해야 한다.

- ① 교육부장관은 국가와 세계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교육활동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재구성 및 학교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지원한다.
- ③ 학교장은 국가교육과정기준을 바탕으로 학생과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교육과정기준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④ 교사는 국가수준 교과교육과정기준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하여 교과교육과정기준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학교교육과정기준을 위한 학교 외부의 중요한(좋은, 우수한) 하나의 국가교육과정기준의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이나 교육지원청의 장학 자료 등은 학교교육과정의 개발상 중복과 혼란을 초래하므로 폐지한다. 공통교육과정의 보편성, 상이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 교육과정기준이 있을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과정기준은 현장밀착형으로 개발하여, 교육종합계획서, 교육폐단을 개선하는 교육종합시정서가 되려면 ‘국가교육과정기준 사용설명서’ 형식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기존 국가교육과정기준의 형식과 내용을 대폭 탈피하여 21세기형의 형식(introduction-platforms-frameworks-guidelines-appendix)과 내용으로 체계적이고 친절하게 현장친화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독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이해를 돕는 infographic, design model, big picture 등을 사용한다.



[그림 8]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 구성 체제의 5개 영역(임유나·홍후조, 2014)

2) 학교급에 따른 총칙의 개선 방안

교육과정기준에 학교급의 핵심특성과 기능 그에 따른 교육 및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해 명시한다. 학교그별 혹은 학년군의 특성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상 특성에서 그들의 계속적 성장, 발달, 고양을 위해서 학교가 무엇을 해 줄 것이냐로 귀결된다. 학생들은 여전히 장기전망보다 눈앞의 문제나 재미에 매몰되기 쉽다.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유익한 것을 모두 학생들이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하여도 학생들의 요구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교가 주려는 것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정도, 비중의 문제이고 이것은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주도권은 학생들에게 가는 것이고, 선택과 재량의 폭도 학생들 쪽이 더 넓어진다. 결국 학생들의 요구는 각종 조사나 소통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선택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학교급의 핵심특성과 기능에 따라 학교장의 학교교육과정기준 작성의 자율성을 달리 부여해야할 것이다. 대체로 학교급으로 보면 초등학교 < 중학교 < 취학전 학교 < 진학계 고교 < 직업계 고교 순으로 자율성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초중학교 학생들도 자신의 발달단계에 맞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으로 문명발달적으로 반드시 타당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성인사회에서 주

어지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학교교육은 공교육으로 공공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취학전 연령별(3-5세) 누리교육과정기준도 총칙에 통합하여 고시한다. 취학전 아동의 행복한 성장, 놀이와 활동, 동심(童心)의 자유로운 발휘를 존중하는 교육과정기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집단에서 행동거지에 대한 기초적 자세를 분명히 가르친다. 소학에서 말하는 바를 제대로 가르친다. 다만 적기에 영재교육이 주어지지 않으면 소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에 따라 특별한 영재성이 드러나는 아이들에게는 그에 맞는 적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외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출생아수 급감과 학교의 소규모화, 학교교육의 영세화에 적극 대처한다. 취학전과 초등 저학년을 아울러 지도할 수 있는 넘나들이 교사의 자격 도입이 필요하다. 아동의 접근성이 수월하도록 취학아동수가 매우 적은 농산어촌 지역에는 소규모 마을 학교를 도입한다. 단 섬 지역은 제외된다. 이런 학교는 취학전과 초등 저학년(초등 1-2/3학년)을 위한 거주지에서 접근성이 높은 ‘기초’학교가 될 필요가 있다. 농산어촌의 폐교를 재정비하여 6년제(취학전-초등 3학년), 9년제(취학전-초등 6학년), 12년제(취학전-중학교) 학교를 설치할 수 있어야 적정규모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가령 적정규모로 할 때 육지로 연결된 학교들의 경우 기초학교(6년)는 30명 이상, 기본학교(6년)는 60명 이상, 공통학교(12년)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기초학교 설치 운영 필요성에 따른 누리교육과정기준과 초등저학년의 교육과정기준의 통합과 연계가 요청된다. 기초학교의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은 생활국어, 생활영어, 생활산수, 생활체육, 생활예술 등으로 교과를 생활 중심으로 중핵화한다.

방과후학교, 돌봄교육의 확대에 따른 초등학교 수업시수의 증대 방안을 제시한다. 이 경우 반드시 초등교사의 법정수업시수를 제시한 후 실시하는 것이 교사들의 반발을 줄이고 교육의 질 보장에서 중요하다. 또한 소규모학교에서는 중학교 교사의 초등 고학년 교과전담수업 지원을 요구한다. 이것도 중등교사의 초등 교과 지원을 가능하도록 교사자격제도나 법적 정비를 먼저 꾀한다.

중학교까지 모든 교과목은 생활을 붙일 수 있도록 삶과 일에 있어서 가장 기초 기본 공통적인 내용으로 구성한다. 예를 들어 초등 저학년의 ‘생활영어’ 도입, 초등 저학년의 사회와 과학 등을 광범하게 통합한 ‘생활과’ 도입, 초등 고학년의 생활외국어 도입, 중학교의 생활수학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특히 ‘생활’수학의 경우 전체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9할,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8할, 고교를 마칠 때까지 진로별 수학교육을 통해 7할의 학생들이 완전학습을 성취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수학, 수학에 흥미를 지소시키는 수학에 유의한다.

진학계 고교의 고교 전체(문이과) 통합의 1학년, 계열 공통의 2학년, 진로별 공통의 3학년으로 하여 하위과목별(영역별), 수준별, 체계적으로 분화한다. 고교는 학업 및 직업 진로별로 학생을 수용(통학거리가 먼 경우 기숙사를 갖추)할 수 있으므로, 진로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고교에서 진로별 학습은 그 교육과정 편성, 수업, 평

가(대입시)에서 일관되는 원칙이 된다.

진학계 고교에서는 교과별 과목을 체계적(하위과목별, 수준별, 진로별)으로 먼저 분화하고, 이를 다시 ‘조합’하여 진로별 교육과정을 인문사회계는 인문, 사회, 국제, 경상으로, 자연과학계는 자연, 공학1, 공학2, IT, 보건의료로, 예술은 음악, 미술디자인, 연극영화영상, 체육은 개인운동, 단체운동, 스포츠산업으로 분화한다. 진로별 교육과정은 3년치가 아니라 1-2학기분으로 주변의 다른 과정과 확연히 구별되는 최소한의 과목수와 단위수로만 구성한다. 결국 학생들이 과정을 1-3개까지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계 고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채택한다. NCS가 개발되지 않은 과목은 이에 준하는 과목별 직업용 교육과정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직업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서는 직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설과 설비 및 자재를 조달하는데 유의하도록 강조한다.

3) 총칙의 교과(각칙) 관련 개선 방안

공통필수에서 상이선택으로의 점진적 변화: 모두에게 같은 기초 기본 교양과 각 집단에게 다른 심화 특수 전문 직업의 점진적 변화에 유의한다. 공통필수 교육과정과 상이선택 교육과정 사이에 외국어, 기술, 예술, 체육 등 한 학생이 모두 다 잘 배우기 어려운 것은 필수선택으로 한다. 특히 의무교육을 마칠 시점의 일반교양인으로서 성취기준을 분명히 하여,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생활에 유용하고 유익한 교과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애국심과 인류애가 높은 협동적, 인격적,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높은 능력 있고 행복한 대한민국 시민을 기르는데 기여하는 교과교육을 지향한다.

교과의 분화와 마무리 및 계속교육: 공통필수가 아닌 필수선택과 상이선택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교과 및 분야의 전성기가 얼마나 일찍 도래하는가를 고려하여 통합하거나 체계적(하위과목별, 수준별, 진로별)으로 분화한다. 분화된 과목들은 필수선택하거나 진로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어느 교과라도 시민의 교양교육용 마무리 교육과 전공 및 직업기술을 위한 직업적 전문성을 떠도록 교과를 구성한다.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계열성: 취학전에서 초등 저학년까지는 놀이와 활동을 미분화되고 통합 학습을 위한 통합교과, 고학년에서 중학교까지는 기본 교과(생활외국어, 예술, 체육, 기술에서 ‘필수선택제’도입), 고교는 진로별 교육과정을 강조한다.

교과교육을 둘러싼 교원의 자율성(재구성권한)의 차별화: 교과특성에 따른 교사의 교과교육과정기준 작성의 자율성(교육과정 재구성 권한)의 확대를 보장한다. 공통교과 < 상이교과, 이념교과 < 탈이념교과, 이론교과 < 실제교과에서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한다. 이것은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연결짓는다.

기본교과의 교육목적별 구분: 기본교과는 교육목적에 따라 국어, 외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술, 예술, 체육의 8개로 한다. 국어는 한국어로 의사소통과 사고력을 높

이는데, 외국어는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사회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형성과 확대에, 수학은 수와 양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과학은 사물과 자연의 구조와 운동 원리를 탐구하는데, 기술은 인간 사람의 식의주 생활에 유용한 기술을 탐구하는데, 예술은 심미적 상상력과 창의력의 표현과 수용에, 체육은 건강 안전을 위한 운동 습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총칙에서 교과교육과정기준에 대한 언급: 총칙에서는 교과교육과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비중있고 분명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1) 교과의 명칭(종수), 통합과 체계적 분화, 기능, 지위, 비중에 대한 언급, 2) 교과 스스로 풀지 못하는 적폐의 시정안, 3) 교과 특성에 알맞은 교과교육과정기준의 형식 제안(예, 이론교과는 목표와 내용 및 서술형평가를, 실제교과는 목표와 방법 및 시설 설비, 수행평가를 기준에서 강조함)을 통해 총칙과 각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공유된 연계’를 지향한다.

교과의 통합과 연계: 각 교과는 교과내 창의성과 진로를 강조하고, 협동적 학습법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시민교육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각 교과는 실생활, 직업생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부분, 교과의 전후(상하) 관계, 교과의 이웃교과의 연계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의 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국어과: 모국어로 사고하고 의사소통력을 증진하는 국어에서 현대한자어를 수용하고 모든 교과의 교과서에 주요용어를 현대한자어로 병기한다. 검정체제하에서 대폭 늘어난 문학작품은 수를 줄이고 엄선한다. 고교에서는 진로별 국어를 지향하여 교육과정-수업-평가(대입시)에서 진로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외국어과: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증진하는 외국어는 학생에게 최초 노출시기 및 교육 시작 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긴다(영어는 K학년부터, 생활외국어는 4학년부터). 의사소통 중심의 생활외국어를 지향한다. 외국어교육 정책의 분명한 수립과 집행이 요구된다(영어만 제대로 할 것인지? 영어를 못하면 다른 외국어 하나를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인지? 영어와 다른 하나의 외국어를 제대로 하도록 할 것인지?). 영어 등은 분기를 단위로 하는 단계별 교육과정을 무학년제식 운영을 한다. 재이수는 분기보다 짧은 기간에 마치도록 한다. 고교에서는 진로별 외국어교육을 지향한다. 모든 교과의 교과서에 주요용어를 영어로 병기한다.

사회과: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신뢰, 협동, 합의)의 형성과 강화에 기여하는 사회과는 초등 4학년 이후에 도입한다. 이전에는 과학, 기술 등과 통합하여 생활로 한다. 분기별 혹은 학기별로 하위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이수하도록 교과를 구성한다. 역사, 지리(고교에서 문이과 통합형으로 지구환경과학과 통합), 정치와 법, 경제와 경영, 문화와 윤리 등으로 하위분야를 통합하는 것이 생활사회로서 기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다. 일반사회로 마무리하되, 고교는 진로별 사회를 지향한다. 국사교육은 정체성교육에 충실하고 세계사와 교류적 개방사를 지향한다.

수학과: 와 양적 관계를 탐구하는 수학과는 생활수학을 지향(확률과 통계로 마무리

리)한다. 난도를 대폭 낮추어 접근성, 친근성이 높은 완전학습의 수학을 지향한다. 생활교양인으로서 불편하지 않을 수학을 가르친다. 수학교육에 의한 사교육과 선행 교육 필요성, 학습 스트레스를 제거한다. 예술, 체육, 인문 등의 진로를 가진 학생들은 중학교 수준으로 수학을 마치도록 한다. 고교에서는 진로별 수학교육을 지향한다.

과학과: 물질과 자연의 원리와 법칙 탐구하는 능력 증진하는 과학은 초등 4학년 이후 도입한다. 그 이전에는 사회, 기술과 통합하여 생활에서 가르친다. 과학은 기술, 사회와 더불어 탐구력 향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하도록 구성한다. 분기별 하위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이수한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하위분야를 과감하게 통합한다. 지구환경과학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지리와 통합하여 제시하되, 3대 분야에 비해 그 비중을 축소한다. STEAM에 따라 관찰 실험 실습 실기를 제대로 하는 과학을 지향한다. 반드시 해야 할 관찰과 실험의 종류를 엄선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이 경우 단위수업시간의 제한(40분~50분)에 구애받지 않는다.

기술과: 의식주 문제해결능력을 증진하는 기술은 초등 4학년 이후에 도입한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술의 종류를 엄선하고 월 단위로 혹은 분기 단위로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실기, 실습으로 가르친다. 국가직무능력(NCS)의 중학교 이하판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학교부터 필수선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교에서는 진로별 학습을 강조한다. 특히 현대와 미래사회의 기초가 되는 디지털기술을 소비자로서 활용교육이 아닌 생산적 기술로 가르친다. 1인 1직업기술을 졸업인증으로 한다. 작업메뉴얼식 핸드북을 보급하고, 시설과 설비 및 자재 보급을 지원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에 유의한다.

예술과: 심미적 상상력과 창의적 표현과 수용의 예술은 취학전부터 도입하되, 예술은 전성기가 비교적 일찍 도래하므로 초등 고학년부터 하위분야를 필수선택으로 배우고, 중학교 이후에는 1인 1예술을 지향한다. 고교는 진로별 예술교육을 지향한다. 학년군별 학교비치용 교과서로 개발 보급하고 대신, 미술은 장르별, 주제별 도록과 화첩으로, 악기와 악보를 대대적으로 보급한다.

체육과: 건강, 안전, 보건의 증진에 기여하는 체육은 취학전부터 도입하되, 초등에서 수영(25미터 이상)을 필수로, 중학에서 인명구조사 자격(응급처치훈련) 취득을 필수로 한다. 고교에서 개인맞춤형 1인 1운동으로 마무리하도록 한다. 전문적으로 체육을 공부할 학생들을 위하여 초등 고학년부터 필수선택으로 학습할 기회를 마련한다. 학년군별 학교비치용 교과서 개발 보급하고 대신 운동기구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종목별 코치를 고용한다.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초등에서 수영과 중학에서 인명구조훈련을 가르치자

체육 교육과정과 수업을 대대적으로 고쳐서 가장 먼저 배울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초등학교 체육에서 수영배우기와 중학교 체육에서 응급처치(인명구조훈련)이다.

수많은 운동 중에서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운동은 수영이다.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누구나 20미터 이상을 수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학교도 다른 운동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수영을 가르쳐야 하고, 부모들도 자녀들을 학원으로 내몰기 전에 수영부터 배우도록 조치해야 한다. 15세 이상은 모두 바다에 뛰어들어도 수영을 할 줄 안다고 가정했을 때 조난선에서 대피대책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수영장을 갖추는 것을 부유층 개인의 전유물로 여긴다. 오해다! 일제시대에도 소학교에 수영장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수영을 가르쳤다. 가난한 우리는 해방 후 수영장을 배우기에 바빴다. 지금이라도 4대강과 각 지천을 활용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대중용 수영장을 많이 만들고 여름방학 중에 일제히 캠프를 열어 수영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수영부터 가르쳐서 각종 수상사고에서 어린 학생들이 더 이상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응급처치훈련, 재난대피훈련, 인명구조훈련을 포함하여 생명을 지키고 구하하도록 철저히 훈련시켜야 한다. 독일에서는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학생들로 하여금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초중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연간 44시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교육과정기준과 무관하여 전달되지 않는다. 치아가 빠졌을 때, 뱀에 물렸을 때, 뼈가 부러졌을 때, 화재에서 빠져나올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홍수, 태풍, 한파, 전염병 등 각종 사고에 직면하여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평상시에 가르쳐 익숙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이다. 다른 많은 운동은 그 다음에 배워도 늦지 않다.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체육교육을 수영과 인명구조훈련을 우선하는 쪽으로 대대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 개인과 학교 학년 학급 공동체의 구체적 요구에 대응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점차 높이도록 한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학년군별 특색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구성한다. 초등 저학년은 공동체에서 생활자세 위주로, 초등 고학년은 동아리활동, 중학교는 진로 탐색과 동아리활동, 고교는 진로 결정 및 준비,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위주로 구성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따르면 공통과정은 최소 57%(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 최대 66%(예술·체육 중점 모형)이고, 자율과정을 이루는 요소들 중에서 중점이 되는 활동이 최소 15%(진로탐색 중점 모형, 동아리활동 중점 모형, 예술·체육 중점 모형), 최대 23%(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를 차지하고 있다.

교과	문제점	개선 방향(공통)	취학전 - 초등저(기초)	초등고 - 중(기본)	고교 이 후(진로별 심화)
국어	현대한자어 외면 작품의 엄선 필요	모든 과목의 주요 용어 현대한 자어 병기 필요			
외국 어	영어일변도 제2외국어 외면 교사 문제	모든 과목의 주요 용어 영어 병기 필요 무학년제, 단계별 영어 제2외국어 확대 필요 생활영어, 생활영어+생활외국 어, 잘 하는 하나의 외국어 중 선택 필요			
사회	지나친 분화 이념 편향 문제	통합 필요 정치, 경제, 문화윤리, 지리, 역 사 중핵 설정 필요			
수학	너무 어려움 미적분 비중 큼	재미있고 쉬운 수학 생활교양인의 수학 확률과 통계 비중 강화 무학년제, 단계별			
과학	지구환경과학 비중 큼	지리와 지구과학 통합 필요			
기술	가정가사 비중 큼	중요한 핵심 기술 포함 필요 월별 분기별 핵심기술			
예술	음악 미술 위주	다양한 장르 포함 필요 월별 분기별 핵심예술			
체육	중요한 수영, 응급처 치 외면	1인 1 맞춤형 운동 필요 월별 분기별 핵심운동			
특 활	학교급별 차이적음	무학년제 학생중심으로 점진적 확대 필 요			

4) 평가 및 이수사항 제시의 개선 방안

교과의 핵심기능과 특성에 알맞은 교육평가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선다형 위주 시험은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한다. EBS 연계수능을 폐지하고, 교육과정기준을 성취기준형으로 개발되면 이를 대체하도록 한다. 또한 교과서를 엄선하여 이를 대체하는 것을 기본으로 대안(서술형, 수행평가, 형성평가, 내신의 강조, 진로별 대입시)을 제시한다. 교육적 폐해(지나친 경쟁과 스트레스 유발, 협동 저해)가 큰 석차와 상대평가적 등급은 즉각 폐지한다.

각 학교급 및 교과에서 기초 기본 교양 교육으로 달성할, 의무교육을 마치는 학생들의 중학교졸업시까지 달성할 최소한의 성취기준(졸업인증)을 강조한다. 예컨대, 체육에서는 초등 졸업시까지 수영을, 중학 졸업시까지 응급처치(인명구조훈련)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도록 독려한다. 그 이전에라도 고교 이하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여 점차 모든 국민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예술의 한 가지(1인 1악기 연주), 1인 1직업기술(앱 개발기술), 1인 1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생활수학의 완습(수학의 난도와 부담을 낮춤) 등을 제시한다.

교육의 성과를 확인하고 교육의 과정을 개선하는데 평가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입시의 경우 하급학교의 교육 전반을 좌우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은 시험이 끝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험에 대비해 공부하고,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여기는 학생도 적지 않다. 사실상 수업도 시험이 지탱해주고 있는 면이 많다. 시험을 강화해 수업을 지탱해 줄 것을 호소하는 교사들도 있다.

절대평가에서 출제, 채점, 성적표기의 일관성 확보 : 학생 학업성취평가에는 일상적인 내신산출을 위한 교내평가와 각종 모의고사형 교외시험, 학업성취도평가, 고입 선발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이 있다. 5.31이후 수행평가와 절대기준평가를 강조해왔다. 수준별 수업에 알맞은 차별화된 평가를 다각도로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다. 중요한 시험이 선택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서술형이나 수행평가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절대평가는 성취기준을 시도단위나 국가단위로 해야 하지만 교사들은 가르친 대로 평가하는 평가권을 요구하고 있다. **좋기는 하지만 절대평가는 출제는 기준을 따를 수 있지만 서술형이나 수행형의 경우 채점이나 성적표기를 일관되게 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교실과 학교수준, 지역수준, 국가수준을 넘어 절대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수업, 학습, 과제수행 및 시험을 출제, 채점, 관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실과 학교 교사 수준으로는 어렵다. 절대평가는 개별 교사의 평가권이라기보다 해당 학년이나 교과와 교사의 공통의 평가권이며 도리어 일정 비중 이상으로 학교외부평가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과 내일의 나라는 학생의 자기발전평가를 강조하지만, 각종 시험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잘 하는 상대적 평가를 강조하여 경쟁적 성격이 강하여 간혹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선다형 문항의 축소 약화와 서술형 수행형 평가의 확대 강화 : 선다형, 선택형 문항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서술형, 논술형, 수행형과 같은 문항을 늘리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서술형의 경우 어릴 때부터 차츰 단어, 구, 문장, 문단,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의 에세이를 쓰는 것으로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자기표현력과 논리적 실증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이다. 평가에서는 출제, 채점, 성적표기에서 결국 성적표기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평가결과 성적표기는 초등학교는 장점 중심의 문장형이어서 부진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90점 이상을 맞은 것처럼 과장되고 있으며, 중학교는 점수와 석차, 고교는 5수치(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자수, 9등급)를, 중등에서 예체능 과목의 경우 우수 보통 미흡의 3평어제를 취하고 있다. 일견 체계화되어 있는 듯해도 고칠 점이 많다. 초등 고학년의 국어 수학 등의 경우는 정확한 평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문해력과 수리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중학교와 고교의 석차나 석차등급의 경우 학생간 불필요한 비교와 경쟁을 유발하고,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는 약하므로 속히 폐지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신 초등의 국어 수학, 중학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고교의 진로 집중과

정별 핵심교과 등은 4수치(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자수)만 표기하도록 하고, 그 결과 활용(표준점수, 석차, 등급, 백분위, 평어 등의 산출)은 사용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교과교육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평가의 도구나 성적표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할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평가권을 확대하되, 임의평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 진로, 학습자집단, 학교특성 등을 고려한 학교단위평정제를 확립하여 공시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 표는 이것을 체계화한 것인데, 이는 수준별 수업, 집중이수, 진로 집중과정, 진로별 대입시(대입시의 타당화, 모집단위별 특성화, 고교-대학 연계의 대입시)의 본격적인 실행을 전제로 한다. 특히 고교에서 진로별로 교육과정, 수업, 학습, 과제수행을 접할 수 있을 때 적용되는 내신산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7> 학교급에 따른 교과 영역의 성적 결과 표기 방식

학교급 교과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국어	3평어(특성기술)	4수치(특성기술)		진로별 선택 핵심교과: 4수치(특성기술) 보완교과: 4수치(특성기술) 교양교과: 3평어(특성기술)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 학 교단위평정제를 실시하여 병기함.
영어	3평어(특성기술)	4수치(특성기술)		
	-		제2외: 3평어(특성기술)	
수학	3평어(특성기술)	4수치(특성기술)		
사회	특성기술	3평어(특성기술)	4수치(특성기술)	
과학		3평어(특성기술)	4수치(특성기술)	
기술		3평어(특성기술)		
체육	특성기술		3평어(특성기술) 해당 진로자의 경우 4수치(특성기술)	
예술			3평어(특성기술) 해당 진로자의 경우 4수치(특성기술)	
자율과목	-		3평어(특성기술)	

- ▶ 특성기술: 해당교과의 학습과정 및 결과 성취 정도, 장단점, 강약점, 지덕체 부분을 종합 평가, 태도, 흥미 등을 문장으로 기술하여 드러냄. 모든 평어와 수치의 보완자료로 필요함. 초등의 장점위주 문장기술(일명 종알종알)의 과대평가를 벗어나는 초기 단계 시도임.
- ▶ 3평어: 우수, 보통, 미흡 정도를 표시함. 일부에서는 통과 낙제로 쓸 수도 있을 것임.
- ▶ 4수치: 학생개인의 원점수, 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이수자수를 적음. 단 영어, 수학의 경우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수준을 표기함. 석차와 석차 등급을 삭제하여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 ▶ 학교단위평정제: 3평어, 4수치 등에 더하여 학교특색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장부(해외 대학 진학생용 등)를 작성하는 것임. 교과(교과의 분량=수준×범위), 진로, 학생집단, 학교

여건 특성을 고려한 학교내 성적관리지침을 교칙으로 마련하고 **공시한** 대로 평가한 결과 기술함. 가령 최우수, 우수, 보통, 미달(A, B, C, D, F)로 할 수도 있음.

국가수준의 학력관리로서 학업성취도평가 : 국가수준에서 기초학력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일부 학년만 표집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전교조를 중심으로 일제고사라고 폄하하며 학생들의 시험거부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를 정보공시차원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 이를 교사와 학교관리자의 능력이나 실적과 연계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평가결과에 따라 기초미달자를 없애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어 줄어들이는 하지만, **기초 수준의 학생들에 대한 보정학습이 없어** 학년과 학교급을 올라갈수록 학습부진아는 점증한다. 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에도 서술형, 수행형 문항을 포함하여 교사들이 방학을 이용해 채점하고 이를 수업개선에 반영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평가결과를 교과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에 피드백하는 제도나 절차는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늘 시험치고 성적 알려주면 방학에 들어가는 형태를 띤다. 그야말로 평가를 위한 평가만 반복되고 있고, 교육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평가에 머물고 있다. 최소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 미달과 기초 수준이 높은 교과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적정화와 수업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치를만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입학사정관제 :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비중이 큰 언어, 수리, 외국어는 과잉 통합되어 있어 진로에 따른 분화가 필요하고, 비중이 적은 탐구영역은 과잉 분화되어 있어 적절한 수준의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외국어 언어 부담은 동일하면서 수학과 탐구영역은 어려워 수험부담이 과중하여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진입장벽을 턱없이 높여놓고 국가와 기업은 이공계로 오라고 강조한다. 대수능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을 쫓아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교에서 진로 집중과정을 도입하면 이에 따라 진로에서 핵심되는 교과목을 모집단위별 시험과목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로별 대수능을 만들면 그나마 치를만한 시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교별 대신, 전국단위 수능, 대학별 고사 등 모든 대입시는 고교와 대학 학습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고교와 대학 교육 모두에 도움이 된다. 대학의 모집단위별로 꼭 필요한 선수학습과목을 확인하는 시험일 때 대입시는 보다 타당한 시험이 될 수 있다.



[그림 9]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출처: 홍후조 외, 2008)

입학사정관제 입시의 경우 학생의 교과 성적 이외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경력을 반영하고 있어 고교교육의 성격과 방향을 바꾸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학간 서열을 완화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만 전형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와, 사교육의 장기화, 종합화, 개별화, 고액화 유발 위험성을 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입시는 전반적으로 타당화되어야 하고, 고교 대학간 학업의 연계를 취해야 하며, 선발용을 넘어 교육용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하며, 준비에서 사교육에 덜 기대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모집단위별로 특성화되는 입시는 고교 학습과 연계되며, 그 관리는 대학입학업무의 분권화를 요청하고 있다.

학생평가에서 교원평가와 기관평가로의 확장 : 학생평가를 넘어 교원평가, 기관평가, 교육과정 수업 평가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법제화가 시급하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는 만족도와 같은 간단한 평가를 받고, 교원들 상호간에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학교교실은 공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학교관리자와 학부모 및 동료 교사들에게 개방되어도 되는 공간이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교육 혹은 교원 만족도평가는 지금보다 더 간단해야 한다.** 분기별로 ‘교장선생님께서 내년에도 우리학교에 계시면 좋겠습니까?’ ‘동생이 있다면 0선생님께서 답임을 맡으시면 좋겠습니까?’ ‘동생도 0선생님한테 00과를 배우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매우 그렇다.’와 ‘전혀 아니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좋은 학교, 좋은 교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학교와 교원인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이는 교사의 수업모니터링은 학교관리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다만 이를 계기로 수업과 학생지도의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교사와 학교관리자의 협력이 더욱 요청되는 부분이다. 교원평가는 수업과 학생지도 개선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교육청 등의 기관평가는 부문별로 일정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부담을 더는 방법이다.

요약컨대, 실제로 시험이 학교현장을 좌우하고 있다. 그것도 선다형시험, 지필고사에서 정답맞히기가 주종이다. 초등학교부터 서술형이나 수행형 평가는 객관성 확보, 순위경쟁에 밀려나 있다. 단어, 구, 문장, 문단,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의 서술형, 논술형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 또한 지필고사를 넘어 실험 실습 실기의 수행평가 확대나, 총괄평가를 넘어 교수학습과정에 피드백되는 진단평가와 형성평가는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 교사가 하는 일이 잡다하고 과중한 데서도 강요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기초학력진단평가나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미달자를 없애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수준 학생들의 보정학습이 충실하지 못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기초미달자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절대평가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출제 채점 결과표기의 일관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관찰하기는 쉽지 않다. 내신성적 산출에서 교과특성이나 그 목적에 맞게 결과

표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석차나 석차 9등급이 있어 학교교육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 초등의 국어 수학, 중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고교의 진로별 핵심교과의 성적표기에서는 4수치(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자수) 표기방식을, 나머지 교과는 학습자의 특성의 기술이나 우수 보통 미흡의 3평어로 제안되고 있지만, 고교에서는 학교단위의 특성(교과, 학생집단, 진로, 학교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단위평정제의 보완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입시가 치를만한 것으로 타당하게 만들어지고, 모집단위별 특성화로 고교-대학 학습연계가 이루어져서, 유의미한 경쟁과 선발을 유발하자는 방향에 대한 제안은 나왔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고교 진로 집중과정의 구현과 대학에서 입시관리의 모집단위별 분권화는 진전이 느리다. 최근 확산되는 입학사정관제의 확대는 신뢰도와 공정성의 확보와 사교육의 장기화 개별화 고액화 종합화를 제어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학생평가뿐만 아니라 교원, 학교, 교육청 등 기관평가도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의 공시와 이를 근거로 각종 상벌이 주어지는 것에 피평가자들은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개선은 다양한 평가를 통해 제도화되어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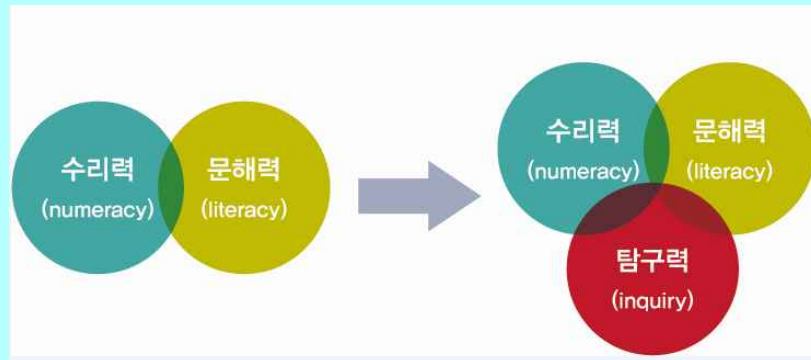
<참고문헌>

- 교육부(2013.12.1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교육부(2013.12.3.). PISA 2012 평가결과 보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5.2.25.). 교육과정 개정에 현장교원 직접 참여-「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보도자료.
- 김경자, 온정덕(2011). 이해중심 교육과정. 교육아카데미.
- 박영숙, 제롬 글렌, 테드 고든, 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2012), 유엔 미래보고서 2030, 교보문고.
- 이찬승 외(2013). 공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칼럼. 교육을바꾸는사람들 홈페이지 칼럼 모음.
- 홍후조, 하화주(2013, 미출간원고). 우리나라 고교에서의 진로집중과정 구현 방안 탐구.
- 홍후조·강익수·백경선·성열관(2008). 교육과정 적정화 및 필수 교과 조정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년 교육과정 선진화 위탁과제 답신 보고.
- Bellanca, James & Brandt, Ron(Eds.)(2010). 21st Century Skills: Rethinking how students learn. Bloomington, IN: Solution Tree Press.
- OECD(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Retrieved Dec 18, 2011, from <http://www.oecd.org/dataoecd/47/61/35070367.pdf>

- Priestley, Mark & Biesta, Gert(Eds.)(2013). Reinventing the Curriculum: New Trends in Curriculum Policy and Practice. Bloomsbury Academic.
- Snow, C. P./ Collini, Stefan(INT)(2012/1959). The Two Cultu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illing, Bernie & Fadel, Charles(2009). 21st Century Skills: Learning for life in our tim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World Bank(2005), Expanding Opportunities and Building Competencies for Young People: A New Agenda for Secondary Education, 세계은행 국제협력팀(역), 세계화와 중등교육의 새로운 아젠다, 한국교육개발원.

[참고자료 1] 3R's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의 LIN

모든 학생(시민, 사람)의 기초(기본)적인 수준의 문해력(literacy), 수리력(numeracy)을 학습과 생활의 가장 중요한 도구적 기초를 갖추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사회 초기의 학습과 생활의 기초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일생을 두고 어문을 사용한다. 또한 일생을 두고 공리를 한다. 초기에는 읽고 쓰고 셈하기를 중요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성인이 되면 상대적으로 수리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전문가들의 80%는 수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문성,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오늘날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 세계화사회에서는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구성이나 비중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즉 H. Spencer 이후 과학기술의 시대는 사고하는 힘, 관찰 실험 실기 제작하는 수행력을 의미하는 탐구력(inquiry)이 점차 중요해진다. 모든 사람은 궁금함,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탐구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민주사회협동성(democracy), 예술성(artisty), 건강함(healthiness) 등도 중요하다.



[그림 1] 3R's에서 LIN으로 변화

literacy 문제는 다음 몇 가지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문제이지만 주어진 텍스트에서 이해 분석 비판 능력을 의미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언어적 반응은 모국어와 외국어로 나타난다. 문해력은 수용과 표현의 대상에 따라 더 폭넓게(심지어 모든 것에 문해력을 붙일 수 있음, 예를 들어 예술적 문해력, 과학적 문해력 등) 규정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핵심은 어문(語文)를 둘러싼 것이다. 특히 세계화 사회에서는 외국어를 둘러싼 문해력이 점차 중요해진다.

현재 문해력과 관련된 우리나라 언문정책은 매우 어정쩡한 상태이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들에 결단력있게 대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언어교육의 도입 시기와 성취기준에 대한 것이다. 1) 국어를 언제까지 읽고 쓰게 할 것이냐? 글쓰기, 논술의 성취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단어와 구, 문장, 문단, 서론-본론-결론, 기승전결의 논술 등과 관련한 뚜렷한 성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선다형 시험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2) 살아있는, 실제로 사용되는 글자로서 현대한자어를 도입한다. 초등 고학년 이상 교과서의 주요용어에 현대한자어와 영어를 병기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각 교과별로 중요한 단어 100개

정도는 계속적으로 반복 노출시킴으로써 배울 수 있도록 한다. 3) 외국어를 중시하는 정책에서 모든 학생에게 영어 1가지, 영어와 제2외국어를 포함해서 1가지, 영어를 주(主)로 하고 제2외국어를 부(副)로 하는 2가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학생집단의 특성에 따라 그 선택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4) 제2외국어를 몇 가지로 늘릴 것이냐? 가령 언중(言衆)의 크기가 전세계적으로 1억명이 넘는 언어는 모두 제2외국어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외국어 선택에 따른 대입시에서 유불리를 어떻게 조정하여 왜곡되지 않은 적절한 선택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냐? 5) 영어와 제2외국어의 첫 도입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생활영어는 K학년부터, 생활외국어(제2외국어)는 초등 4학년부터 배우기 시작할 수 있다. 6) 한문은 가르치지 않고 대신 현대한자어를 초등 고학년부터 각 교과에 주요용어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서는 교과용도서 집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수리력(numeracy)은 그간 과대평가되어 왔다. 학술적으로나 직업적 혹은 인간 삶에서 지나치게 과장되어 왔다. 다음 몇 가지에서 재조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탐구의 결과는 언어와 도형, 수식, 동영상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많다. 수와 기호를 배우는 것은 기초, 기본 학습에서 매우 핵심적이다. 그러나 이런 수식의 학습은 산업사회에 비해 학습도구로서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편이고, 성인이 될수록 이를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든다. 전문가의 80% 정도는 탐구 결과를 표현할 때 더 이상 수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 수학의 난도를 낮추어 초등 7할, 중학 5할, 고교 3할의 학생들이 완전하습하던 것을 어떻게 9할, 8할, 7할로 높일 것이냐? 2) 중학교까지 생활수학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3) 산업사회의 ‘미적분’과 달리 정보화사회의 살아있는 수학, 사용되는 수학으로서 ‘확률과 통계’로 마무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탐구력(inquiry)은 인간이 가진 궁금증과 호기심을 체계적으로 풀어나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질문은 중요하다. 우리교육은 오랫동안 지식 습득과 전달을 강조하고 이를 지필고사로 확인하는 데에 머무는 것은 지나치게 L과 N에 치우쳐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우리교육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소위 우리교육의 국영수 중심은 생활과 교육에서 문해력과 수리력만 강조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과학, 기술, 사회 등에 대한 탐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뉴턴 이후 영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강국이 된 것은 교육에서 탐구력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Hands-on learning, 활동중심, 참여중심, 협동적 창의적 문제해결력, KSA로서 핵심역량을 발전시키는 기반은 탐구력에 있다.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힘, 할 줄 아는 능력, 절차적 지식 등이 곧 탐구력이다. 탐구하는 방법, 실험 실습하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 조사하는 방법, 시험하는 방법, 검증하는 방법, 학습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지식의 전달과 습득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획득(창안)하는 방법을 강조한다. 지식의 폭증 속에서 이를 다루는 방법이며,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능동적 지식 획득의 방법 등이 탐구력과 관련된다. 인간의 모든 궁리를 탐구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탐구력은 인간 삶의 기본적인 능력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상당기간

동안 연구하였던 사고력 신장의 교육 방법은 곧 탐구력에 관한 것이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강조하는 융합인재교육(STEAM)은 탐구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PISA나 TIMSS 등은 탐구력을 강조한다.

교육에서 탐구력을 강조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 1) 과학에서 실제로 관찰 실험으로 익혀야 할 법칙이나 원리의 종류는 무엇인가? 수많은 과학의 관찰과 실험 중에서 주로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교까지 반드시 실험 관찰을 실시해 볼 것은 무엇이며, 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것은 과학의 학문적 체계보다 우선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단위수업시간(40분, 45분, 50분)에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실제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어야 한다. 2) 인류의 의식주 생활을 개선시켜 온 기술적 유산은 무엇이며, 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기술에서 실제 실기(설계, 제작, 분해와 조립 등)로서 해봄으로써 익혀야 할 핵심기술은 무엇인가? 특히 산업사회의 기술을 넘어 정보화사회의 필수적인 기술은 무엇인가? 3) 인간, 공동체 사회, 그들의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조사 탐구하는 능력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4) 학생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창의적 발상, 발명, 발견의 기법은 무엇인가? 가령 SCAMPER나 TRIZ, ARIZ는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교과내에 통합하여 도입, 전제, 정리 혹은 과제 부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탐구를 논란이 되는 ‘국사’교육에 사회(역사)탐구를 적용해보면 아래와 같다. 가령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한국사를 통사적으로 배웠다면 고교에서는 이를 넘어 주제사로 할 수 있다. 즉 세계사시대, 동아시아에서 중일이 각축하는 시대에 고교 국사교육의 초점은 획기적으로 바뀐다. 19세기 이전에는 동아시아의 발전 속에서, 20세기 이후에는 세계사의 발전 속에서 우리 겨레의 여정을 종합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깊이 있게 다루도록 조치한다. 고교생들은 한국사 전체에 대한 종합적 이해 위에 새로운 역사 건설을 위한 전망을 가지는, 애국심을 가진 개방적 세계시민으로서 자라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초중학교에서 통사(通史)를 공부했으므로, 고교의 국사교육은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핵심주제(big ideas)에 초점을 맞춘다. 즉, 고교 역사교육에서는 우리가 결정적 시기에 정세오판을 하거나 분열하여 대비하지 못한 것을 종합 반성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역사에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풍성하게 다루어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역사교육시간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국사에만 골몰하거나 전교조가 하는 일부 계기교육처럼 반정부운동을 부추킬 것인가? 가령 왜 발해와 신라는 동족으로 하나 되지 못했을까? 왜 삼국시대에 비해 통일 신라와 고려는 영토가 더 좁아졌을까? 임란과 호란 전에 우리는 대외정세를 어떻게 파악했고 어떤 준비를 했던가? 어쩌다 우리는 간도를 잃었을까? 19세기말, 해방정국에서 우리는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가? 지금 우리는 이어도를 중국으로부터,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붕괴될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 통일을 이루는 사상적·제도적 기반과 그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등 학생들이 세계화시대에 우리 자신과 겨레를 추스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사교육의 마지막 단원은 우리가 역사를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종 성과를 종합 정리하도록 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끝나는 일부 검정교과서는 학생들이 이를 배워서 국내 정세에는 천 개의 눈과 입을 가지고 내분에 앞장설 수 있게 할지는 몰라도, 국제정세, 국제전략, 외교군사 전략에는 대응할만한 역량을 길러주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대외관계 등에서 고교생들이 장차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지에 대해 역사적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통해 종합 반성 전망 토론 정리 발표하도록 하자. 특히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그 이르는 과정과 통일 후 민족 번영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전망을 가지도록 가르치자. 왜 어떤 나라는 선진국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어떤 나라는 분열되며, 가난과 독재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역사공부에서 대담과 교훈을 얻을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LIN이 기본교과를 포함하는 가에 대한 입장 여부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모든 교과를 학습하는데 나아가 모든 문명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초, 도구, 바탕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문제이다. 교과와 대응시켜서도 안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문해력은 국어와 외국어 중심, 수리력은 수학 중심, 탐구력은 과학 기술 사회 중심이 되고, 기본 교과 중 체육 예술만 제외되는 면이 있다. 예술과 체육으로 탐구력을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무리가 따른다. 이런 점에서 LIN을 강조하는 것은 국영수 중심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밝는 면이 있다.

초등 고학년부터 교과별 주요 용어에 대해 간편 약자로 된 ‘현대’한자어, 영어 등을 병기하여 외국어 어휘에 대한 노출빈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제안한다. 한자문화권 국가 중에서 우리는 너무 늦게 한자를 배우고, 적게 그것도 복잡한 고어체를 배우고 있다. 초등 고학년부터 교과서에 현대한자어로 병기하는 방식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표 1> 동아시아국가들의 한자교육 현황

국가명	사용인구수(만명)	한자수	배우는 시기	형태
한국	4895	1800	중고교 한문교육용	고어 번자
북한	2472	3000	인민학교~대학교 교육용	고어 번자
대만	2330	4500	소학교~고급중학교 교육용	고어 번자
일본	1억2725	2136	소학교~중학교 상용한자	현대간편자
중국	13억4958	3500	소학교~중학교 상용한자	현대간체자

초등 고학년(3/4-6학년)에서 생활외국어(제2외국어) 15종 이상 도입한다. 현재의 중학교의 생활외국어의 종수 확대 방안(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몽골, 우즈벡 등의 결혼이민자,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언어의 공인)을 강구하고, 원어민 교사 및 온라인(인강) 학습에 의한 생활외국어 ‘필수선택’화 방안을 마련한다. 모든 교과를 ‘교사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고 할 때 이 경우 교사의 범위를 확장해야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만약 제2외국어가 더 많이 확대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근거로 선정할 수 있다. 그 기준은, 1) 해당 언어의 사용인구(특히 1억명 이상), 2)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군(群)의 국제적 위상, 3) 한국과의 교류 정도(한국에 국제결혼이민자가 많은 나라의 언어), 4) 언어가 가지는 역사·문화적 위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22개의 언어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언어의 크기에 따라 1억명 이상을 생활외국어에 포함할 1순위로 하면 7가지, 1억명 미만~5천만명 이상을 2순위로 하면 4가지, 그밖의 언어를 3순위로 하면 11가지로 하여 총 22가지는 아래와 같다.

<표 2> 우리나라의 제2외국어에서 누락된 세계의 주요 언어 22가지

구분	우선순위	언어	사용국가 (지역)	사용인구	비고 선정사유 및 중요도
유럽	1	포르투갈어 (葡語)	브라질, 포르투갈, 앙골라, 카보베르데, 기니비사우, 모잠비크, 상투메 프린시페, 적도 기니, 모리셔스, 세네갈	2억 6천만	토르데시야스 조약에 따른 서경 48도 우측에 위치한 아메리카-아프리카 국가(과거 포르투갈령)에서 많은 인구가 광범위하게 사용하므로 선정함
	2	이탈리어 (伊太利語)	이탈리아, 바티칸, 스위스, 산마리노	7000만	이탈리아의 높은 국제적 위상과, 영내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사용하므로 선정함
	3	화란어 (和蘭語)	네덜란드, 벨기에, 수리남	2400만	현 베네룩스 3국에서 사용중이며 이들 국가의 높은 국제적 위상과,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선정함
	3	서전어 (瑞典語)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2500만	과거 스칸디나비아 제국령, 현 스칸 4국에서 사용되며 오랜 전통과 이들 사용국가 군(群)의 높은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선정함
	3	파란어 (波蘭語)	폴란드 / 리투아니아, 발트3국 및 백러시아 일부 州	4800만	과거 폴란드 제국-리투아니아 대공국 연방 당시 지배령에서 많은 인구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선정함
	3	우크라이나어 (烏克蘭語)	우크라이나	4000만	현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광범위하게 사용하므로 선정함
	3	希臘어 (希臘語)	그리스, 키프로스, 불가리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터기 일부 州	1500만	발칸반도 지역 내 국가들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고,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정함
아시아	2	토이기어 (土耳其語)	터키, 키프로스, 발칸반도, 카프카스	9100만	과거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영내 지역에서 많은 인구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선정
	3	히브리어	이스라엘	600만	유대인 사용언어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이 국제사회의 높은 영향력을 가지므로 선정함
	1	말레이-인니어 (馬印語)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브루나이, 싱가포르	2억 5천만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많은 인구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에 선정함
	2	태국어 (泰國語)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미얀마 일부 州	5000만	쑤, 現 아유타야-차크리 왕국 지배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언어이므로 선정
	1	벵골어	방글라데시, 인도 일부 州	1억 4천만	인도의 지역방언으로 볼 수도 있으나, 독립된 국가지역인 방글라데시(벵골)에서 별도의 문자(벵골문자)를 기반으로 사용 중으로 별도로 취급하여 선정
	3	크메르어	캄보디아	1300만	과거 크메르 제국령 (앙코르 왕조)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오랜

					역사를 통해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선정
	3	버마어	미얀마, 타이-방글라데시 일부 州	3300만	많은 인구에 의해 사용되므로 선정
	1	힌두어	인도 각 지역 방언들 중 데바나가리 문자 및 이를 변형한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을 전부 포함함	6억	"데바나가리 문자"를 사용하는 인도 내 지역방언 군(群)류 통칭(힌디어/카슈미르어/마라티어/네팔어/ 펀자브어 등)하며 많은 인구가 사용하므로 선정함
	1	우르두어	파키스탄, 인도 일부 州	1억 4천만	힌두어와 유사하나, 사용되는 국가와 문자(우르두 문자)가 다르므로 별도로 취급하였고, 많은 인구가 사용하므로 선정함
	1	파사어 (波斯語)	이란/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바레인,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일부	1억 1천만	아랍어와 비슷하나 언어학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별도로 취급하였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광범위한 일대에 걸쳐 많은 인구가 사용하고 언어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선정함
아프리카	2	스와힐리어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콩고, 모잠비크, 말라위	5500만 명	남부 소말리아~ 북부 모잠비크에 이르는 동아프리카 해안 지역 1500km 반경에 분포하는 스와힐리족의 언어로 다수의 국가에서 많은 인구에 의해 사용되므로 선정함
	1	암하라어	에티오피아	1억명	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유럽언어 외에 독자적 토착언어로서 부족단위가 아닌 국가단위에서 많은 수의 인구에 의해 사용되며, 에티오피아의 유구한 역사와 이에 따른 문화적 가치를 감안하여 선정함
문화어	3	라틴어	모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없으나, 고대 로마이래로 전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오랜 역사와 높은 문화적 가치를 가지므로 선정함		
	3	에스페란토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인공 언어로,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고 중립적인 언어로서 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므로 선정함		
	3	산스크리트어 (梵語)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등 많은 인구가 따르는 종교의 경전에 사용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종교, 철학, 문학 등에 사용된 고급언어로 높은 문화적 가치를 가짐. 또한,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범어가 한자로 성공적으로 음역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으로 볼 때 고전 한자어와도 유기적 밀착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선정함		

출생아수 급감과 학교의 소규모화, 학교교육의 영세화에 적극 대처한다. 넘나들이 교사의 자격 도입 및 양성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시도 및 시군구 경계지역 학생들은 거주지 최근거리를 우선으로 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하여 인위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생기는 불합리성을 제거한다. 학생수가 적고 통학거리가 먼 농산어촌 지역에는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를 연계 운영하는 ‘기본’학교를 도입하여 적정 학교를 만들어 운영한다.

기본 학교의 기본교과는 국어(필수, 모든 교과서에 현대한자어 병기 포함), 외국어(영어 필수, 무학년제 단계별 수업, 하나의 생활외국어는 필수선택, 모든 교과서의 주요용어에 영어단어 병기), 수학(필수, 무학년제 단계별 수업, 난도가 낮추어져 완전학습가능한 수준의 수학, 하위영역 중 필요한 분야는 분기 학기 집중이수), 과학(관찰과 실험을 반드시 하는 STEAM형 과학, 하위분야를 분기 혹은 학기 집중이수), 사회(역사, 지리, 일반사회, 도덕을 대통합하여 하위영역을 학기 집중이수), 기술(필수선택, 기술가정, ICT 모두 포함한 직업기술, NCS활용, 일정 시간 이상 현장

직업체험활동 포함), 예술(음악, 미술, 디자인, 무용, 연극, 영화 등에서 필수선택), 체육(초등까지는 수영을 필수로 하고, 중학 단계에서는 응급처치, 인명구조를 공통 필수로 하고, 개인과 단체 운동은 필수선택)으로 편성 운영한다.

영어, 수학의 단계별 교육과정을 도입(분기를 단계로 하고, 무학년제로 운영함)한다. 중학교 졸업까지 생활영어 및 ‘생활’수학의 학습을 졸업인증으로 한다. 그만큼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모든 교과는 ‘생활’을 붙일 정도로 생활에 유용하면서 유익한 배우기 쉬운 내용으로 한다.

기본학교의 기본교과는 초등 고학년(3/4-6학년)과 중학교의 교육과정의 통합 연계에 유의한다. 기본교과를 중심으로 하되, 유기적으로 통합된 ‘중핵’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중핵교육과정은 대영역(strand)과 핵심개념(big ideas)을 중심으로 실생활과 연계하여 구성한다.

하나는 일상적이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현재의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과정을 축소약화하고, 자율과정을 대폭 확대강화한 자유학기형 교육과정으로 개정하여서 대다수 학교, 대다수 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때 기본과정에는 중학교 단계에 꼭 필요한 기본교과만을 엄선한다. 현재 자유학기제의 기본 취지(진로 탐색, 예체능 강화, 동아리 활동 강화, 학생 선택 존중 등)를 교육과정기준에 녹여내는 방안을 강구한다. 현재 중학교의 운영 형태가 준고교(junior high school)로부터 탈피하여 초등학교에 연계되는 중학교(middle school) 본연으로의 회귀 방안을 강구한다.

[참고자료] 중학교 본래의 특성 회복 필요성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려서 평소에 기본(공통)과정은 중핵 교육과정으로 축소 조정하고, 자율과정인 진로 탐색, 예술과 체육, 학생의 선택활동, 동아리 활동을 강화한다.

<표 3> 현재 자유학기제 모형별 시간 시수표 (단위: 시간, 1시간=45분)

구분	기본과정	자율과정				계
		진로교육중심	진로종일체험	예술체육중심	학생선택중심	
진로교육중심	22	5	2	3	2	34
진로종일체험	19	6	2	4	2	33
예술체육중심	22	2	5	3	2	34
학생선택중심	20	2	2	3	8	35
계(평균)	20.75	3.75	2.75	3.25	3.50	34.0

초중등교육법 제41조(목적)에서는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중학교가 공통의 기초 기본 교육의 초등학교와 상이한 진로별 교육의 고교 사이에 있음을 말해준다. 중학교의 전반기는 보다 초등학교의 특성에 가깝다면 중학교 후반기는 보다 고등학교

교 특성에 가까워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학교를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준고교(junior high school)로 운영하거나 미국의 여러 학교들처럼 초등학교의 연장(elementary school)의 8~9년제 학교 안에 포함되기도 한다.

준고교형 중학교 junior high school	초등교육	중학교육	고교교육
초등연장형 중학교 elementary school	초등교육	중학교육	고교교육
점이지대형 중학교 middle school	초등교육	초등연장형 / 고교준비형	고교교육

[그림 2] 초등과 고교의 점이지대로서 중학교육

<표 4> 중학교를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의 비교

	준(準)고교로서 중학교 (junior high school)	점이지대형 본래의 중학교 (middle school)
개념	교과담임제, 교과교실제, 학생의 과목선택제 등 고교의 운영 방식의 특징을 중학교에도 적용한 학교	초등학교의 운영 방식을 기초로 하여 사춘기 학생을 위한 학급담임의 돌봄 비중이 큰 학교
철학적 기초	학문중심주의, 합리주의	구성주의, 경험주의
교육목표	고교의 대학 입시 등을 미리 앞당겨 준비하는 진학준비교육	사춘기 학생의 급격한 성장을 돌보고 진로 탐색을 강조하는 교육
교육과정	과목위주 교육, 특별활동, 진로활동 비중 낮음	중핵 교육과정, 통합 교육과정, 진로 및 생활 체험 교육과정, 특별활동 비중 높음
자유학기제와 관계	자유학기의 앞뒤로 서로 맞지 않는 전통적인 학기가 진행됨	모든 학기가 자유학기제의 특색을 지닐 수 있음
교수학습	교사의 이론적 설명수업을 강조, 자기주도학습 강조, 경쟁학습 강조, 교내 자원 중심, 교과교실 이동수업	학생의 참여와 활동 수업을 강조, 협동학습, 프로젝트, 체험 학습 강조, 교내외 인적 물적 자원 최대 활용
교육평가	지필고사, 성적 석차 등급 강조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총평
교사역할	교과수업 교사의 역할 강조, 과업지향적인 교사 활동	담임교사의 학생지도 역할 강조, 인화지향적인 교사 활동
학생 역할	공부하는 학생, 알아서 잘 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	성장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
생활지도	규율 강조	지도 관리하의 안전한 다양한 체험 강조
시설과 설비	교과교실제	일부 교과교실, 특별교실, 학급교실
장점	안전한 학교	자유로운 학교, 다양한 경험 제공처로서 학교
단점	숨막히는 학교, 경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 중도탈락생 속출	전통적 학업성취 저하

아래 표를 보면 국어, 사회, 영어, 수학, 과학, 기술, 체육, 예술을 각각 주당 4시

간, 총32시간 배정하는 것이다. 단 세계화, 다문화,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해 생활외국어(필수선택)를 최소한 2개 학년에서 주당 3시간 분량으로 집중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예술과 체육은 부족하면 방과후학교나 학교스포츠클럽(토요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1학생 1운동과 1예술활동을 졸업필수로 부과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교과목의 편성과 운영에서 자유학기제가 강조하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통합, 블록타임의 활용, 프로젝트 및 창의적 문제해결 학습, 팀티칭과 협동학습의 일상화를 중요하게 실천하도록 한다.

<표 5> 자유학기제의 핵심 취지를 반영한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방안 (단위: 시간, 1시간=45분)

교과목	특징	주당시간
국어	필수, 교과서에 현대한자어병기	4
영어	필수, 무학년 단계별수업, 여타교과 교과서의 주요 용어 영어 병기	4
생활외국어	필수선택, 2개 학년 집중이수, 결혼이민자의 언어(15개 정도)를 대폭 허용 확대(결혼이민자를 강사로 활용)	2
사회	필수, 대통합하고, 하위 분야로 학기별 집중이수	4
수학	필수, 무학년 단계별수업, 일부 하위 분야를 분기별 집중이수	4
과학	필수, STEAM형 재구성, 실험관찰을 반드시 하는 과학수업	4
기술	필수선택, [진로와 직업] 1학기 집중이수 포함, 가정가사 통합, 일정시간(1주간) 현장직업체험 포함, NCS형, 산업분야별 분기별 집중이수(1인 1직업기술의 졸업필수화)	4
예술	필수선택,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하위분야의 분기별 집중이수, 방과후 동아리와 연계(1인 1예술의 졸업필수화)	4
체육	필수선택, 응급처치(인명구조) 필수, 방과후 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1인 1운동의 졸업필수화)	4
계		34

다른 하나는 현재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 예술체육, 동아리활동, 학생선택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 지역별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그 학교에 선택하여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 거점학교이므로, 이 학교는 전출입이 가능한 학교여야 할 것이다. 이들 학교는 위기의 청소년들이 잠시 쉬어가는 WEE school같은 학교일 수도 있다. 기존의 대안학교를 활용할 수도 있고, 폐교를 재활용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자유학기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과정에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2] 교과서 내용의 적정화를 위한 방향과 방안

1) 교과서 내용 적정화의 필요성

‘교과서에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만 엄선해 두었으니 반드시 다 가르쳐야 한다.’ 이는 교과서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를 잘 반영한 문구이다. 학생에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 지식을 교과서에 담다 보니 그 내용은 많을 수밖에 없고 지도 방법도 암기주입식이 된다. 특히 7차 교육과정 이후로 교과서의 편집·디자인·색도·지질 등은 향상되었으나 내용은 별반 달라지지 못했다는 반성과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검인정 기준은 느슨해지고 책의 분량에 대해서도 허용적이어서 책은 더 두꺼워지고 내용 분량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해설서식 교과서로 인해 배울 거리가 더 늘어나 진도를 다 맞추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하소연에 역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산업과 직업의 발달, 정보와 지식 생산의 폭주로 인해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교사와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를 정련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즉, 군더더기를 지우고 교육본질에 충실하게 각 교과목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정선된 내용을 가르치고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교실 수업의 주요 수단인 교과서에서 불필요한 지식, 불합리한 지식, 오래된 죽은 지식, 잡다한 주변 지식 등을 걸러내자는 취지에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제안한 것이다. 이를 흔히 ‘교과서 내용 적정화’라고 한다.

‘교과서 내용 적정화’란 궁극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알맞고 바르게 선정·조직하여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표현하는 교과서는 처음부터 무한한 문화내용 중에서 꼭 가르칠만한 것을 취사선택(取捨選擇)한 것이다. 가르치고 배울 가치가 있는 것은 포함(inclusion)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배제(exclusion)하게 된다. 사회·학문·직업 등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포함할 것도 있지만 그만큼 속아내야 한다. 옥석을 구분하지 않으면 교과서에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것이다. 즉, 적정화된 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에서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폐지·축소·약화하고 더 적합한 것은 확대·강화·추가·신설함으로써, 낙차, 후퇴, 비약, 중복 등이 최소화된 더 나은 교과서를 의미한다.

2) 교과서 내용 적정화를 기하는 방법

그렇다면 교과서 내용을 적정화하는 방법이나 그 기준은 무엇일까?

첫째, 교과서를 적정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모두에게 같게 가르칠 내용과 각 집단에게 다르게 가르칠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다. 각 교과목은 자기 교과목이 중요

하므로, 통합하지 않고 독립하여,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서, 내용 분량이나 시간 배분을 많이 하여 지도하고, 배운 것에 대해 꼭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곧잘 일부를 위한 내용을 전부를 위한 것인 양 과장하여 교육내용을 부풀리고 있다. 가령 건전한 민주시민이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수학은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 어느 정도 상식적인 최선답은 있다. 초등 6학년이거나 중학교 3학년 수준 정도다. 그 이상은 수학 전체 체계에서 이런 분야,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해당 분야의 사람들만 공부나 일을 위해 그 전공에서 배우면 된다. 우리의 생활에서 미적분보다 확률과 통계가 더 중요하게 많이 사용된다면 모든 사람을 위한 수학은 확률과 통계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반면, 체육활동 중 인간의 생사를 가르치는 것은 수영과 인명구조훈련인데, 이런 것은 모두에게 가르칠만한 것이다. 모두를 위한 공통 교육내용과 각 집단을 위한 진로별 교육내용을 가려내는 것이 교과서 내용을 적정화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둘째, 사회의 요구에 따라 교과서를 정련하는 것이다. 정보화·세계화사회에서는 수렵채집, 농업,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축적된 지식을 모두 가르쳐서는 발전이 없다. 통용성이 높은 지식을 요구하는 세계화사회에서는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배려와 관용의 다문화교육도 필요하다. 가령 우리 역사를 국사로 쓰지 말고, 19세기 이전사는 동아시아 발전사 속에서, 19세기 이후사는 세계사의 발전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우여곡절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교과서를 쇄신해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용어를 영어, 간편 한자 등으로 병기하는 것은 의사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정보사회로 인해 사실적·정보적 지식, 표준화·프로그램화될 수 있는 지식을 애써 암기할 필요는 줄어들었다. 정보사회에서는 수렵채집, 농업, 산업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육을 써서 일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필요성도 줄어들었다. 가령 초기 이메일에서는 상당수의 절차적 명령어를 알아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애플이 교과서를 만드는 프로그램과 앱을 제작할 수 있는 툴을 개발 공개한 것은, ICT로 모든 산업이 융합되는 시대에 미래세대는 SW생산자로서 기본소양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교과서는 전이가 높은 지혜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자의 발달단계, 수준과 능력,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교과서를 정비해야 한다. 초등 1학년 국어의 흥내 내는 말에는 경음, 격음 등이 많아 어린 아동이 익히기 어렵다. 초등 수학교과서에서 곧잘 제시되는 사례로, ‘ $3+7=10$ 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의 경우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초등의 3할, 중학의 5할, 고교의 8할 학생들은 수학부진아로 수업시간에 아무런 도움을 받

지 못하고 있다. 수학은 교육과정을 학습가능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고치고 이에 따라 교과서나 시험문제도 달라져야 한다. 초등 2학년 마을지도 그리기, 안내도 그리기는 초등학생의 발달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초등 사회과의 지역화 단원학습은 박물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온갖 지명, 인명, 역사, 지리, 산업이 망라되어 있다. 자세히 알 필요도, 가치도 없는 것을 사회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 또한, 타교과와의 연계를 고려하면 제시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도 있다. 가령 수학에서 함수, 유리식의 계산과 등식을 공부하기 전에 기술과 과학의 각종 법칙이나 계산식이 나온다. 한편, 평생학습의 기회가 많으므로 옷 개는 법, 상 차리는 법과 같이 학교에서 애써 가르치지 않아도 학생이 성장해가면서 가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은 제외해야 한다. 또, 학년 수준에 비해 내용이 너무 쉬운 것은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우므로 학습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과서의 내용이나 주제를 핵심적으로 달성할 성취기준에 따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내용 분량이나 난이도를 적절하게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한 이해(deep understanding)와 숙달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간 통합 주제를 발굴해 내용을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교과내, 교과간 핵심주제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내용이 정비되어야 교과서 내용의 전이가가 높아질 수 있다. 교과서가 점점 나아지려면 현재처럼 전면 개편보다 판수를 거듭하면서 바꾸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과교육과정기준의 개선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려면 교육과정기준 개발에 현재처럼 교과인사만 참여해서 동시·일시·전면 개정하는 것을 금하고, 총론측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년군별로 연차적으로, 교과군별로 순차적으로 교과교육과정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교육과정기준 개발을 학문체계와 이를 교과의 지식체계를 구조화하는 능력이 탁월한 교수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학생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흥미있어 하며, 어떤 내용을 유익하다고 보고,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지를 잘 아는 편이라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참여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다섯째, 더 근원적으로 교과목을 정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과목이 너무 잡다하게 분열되어 있는 편이다. 교과에 대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다과목 분산 피상학습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교정하고자 소교과 집중 심층학습을 위한 집중이수를 기획하였으나, 아쉽게도 방임적 자율화로 인해 체계적인 접근이 되지 못하였다. 본래 교과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된 것이다. 교과는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교육과정 내에서 그 비중이 결정된다.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려고 과목을 자꾸 만들어나가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너무 커진다. 교과는 학생의 능력을 증진하는 교육목표

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 모국어로 의사소통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국어과,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외국어과, 사회의 합의를 높이는 사회과, 수와 양의 관계에 관한 수학과, 자연과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과학과, 의식주를 조달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과, 정서적 안녕과 창의적 표현의 예술과, 건강을 도모하는 체육과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는 모두 교과 아래 과목 정도로 배치하면 적절하다. 교과별, 교과간에 중복, 낙차, 비약, 후퇴 등을 개선할 과제가 산적하다. 아래는 위의 논의를 교과서 내용 적정화와 연계하여 질문으로 종합해 본 것이다.

<교과서 내용 적정화를 위해 필요한 질문들>
1.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교까지 각 교과 교육내용 중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진로별로 특정 집단만 알아도 되는 지식이나 할 줄 알아도 되는 기술은 무엇입니까? 2. 건전한 모든 시민들이 학교 교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할 줄 알아야 할 기술 중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역으로 불필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3. 교과의 계열성, 학습자의 발달 정도로 볼 때 내용 수준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비약, 낙차/후퇴, 중복 등)은 무엇입니까? 특히 유치원과 초등 1학년, 초등 6학년과 중학 1학년, 중학 3학년과 고교 1학년, 고교 3학년과 대학 1학년의 연계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 전자가 후자보다 어려운 경우, 내용이 너무 어려워 다음 학기나 학년에서 가르쳐야 더 적절한 내용 2) 후자가 전자보다 쉬운 경우, 내용이 너무 쉬워 이전 학기나 학년에서 가르쳐도 되는 내용 4. 학년별 교육 내용을 재배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 다른 교과에서 관련된 내용을 배우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2) 서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지만 가까이 붙여놓거나 결합하면 더 좋은 경우 3) 어떤 단원의 내용과 다른 단원의 내용의 계열성을 볼 때, 순서를 바꾸면(도치하면) 좋은 내용 4) 어떤 단원의 내용과 그 다음 단원의 내용의 계열로 볼 때 격차가 커서 비약이 심한 내용 5. 각 교과가 달성할 교육목표에 비추거나 교과간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삭제해도 되는 것이나 분량과 비중을 줄여도 되는 것, 즉, 삭제·폐지하거나 축소·약화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1) 인접한 다른 교과와 겹치는 내용, 혹은 다른 교과에서 지도하면 더 적절한 내용 2) 해당 교과 내에서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있는 내용 3) 내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학습량이 많은 내용 6. 학습자와 사회(정보화, 세계화)의 요구를 고려할 때 추가·신설하거나 확대·강화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7.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사례, 소재, 예시로 들고 있는 것 중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3) 소결

지식정보사회, 첨단기술사회, 세계화사회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교과서 내용이 많아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사회를 비롯한 그 이전 사회에서 개발된 지식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내용의 추가·신설에 맞게 오래된 내용의 삭제·폐지를 부지런히 하여 교과서에 죽은, 비활성, 쓸모없는 지식(obsledge)이 남아있지 않도록 부지런히 쇄신할 필요가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과 기술의 엄선 작업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해졌다. 전이가 낮은 파편화되고 잡다한 교육내용으로 학생들의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앗아가서는 아니 될 것

이다. 유기적으로 통합된 산 지식, 전이가 높은 효과적 지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으로 구성된 교과서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도록 해보자.

<참고문헌>

- 김재춘(2004). "교육 내용의 적정화 : 전제와 쟁점". 교육 내용의 적정화 방안 탐색을 위한 세미나, 19-36. 6월 4일 교육과정 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4-7.
- 이돈희(2004). "교육내용 적정화 : 왜, 무엇을, 어떻게?" 교육 내용의 적정화 방안 탐색을 위한 세미나, 11-18. 6월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4-7.
- 이승미·홍후조·민부자(2011). 교과 교육과정의 적정화 지침 개발 연구, **교육학연구**, 49(2), 1-22.
- 이양락(2004). 교과별 교육내용 적정화 연구 - 제7차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4-1-1.
- 정영근·박순경(2007).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 적정화 담론 고찰. **교육사상연구**, 19, 1-25.
- 황규호(2004). 교육내용의 적정화 기준 탐색. **교육과정연구**, 23(3), 1-25.

[참고자료 3] 교과서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1. 서론

2. 교과서 제도의 전반적 개선

- 1) 교과별 교과서의 국정, 검정, 인정의 합리적 결정
- 2) 국정 대상 축소와 검인정 대상 확대
- 3) 전면 개편보다 판수(版數)를 거듭하는 교과서
- 4) 항상적 질 개선을 위한 교과서 모니터제 구축
- 5) 교과 특성에 따른 교과서 발행 및 공급 방식 다양화
- 6) 사용 후 반납하는 교과서 대여제 확대
- 7) 교과서 공급 제도의 개선
- 8) 학교의 각종 교재 구입에 대한 예산 확보
- 9) 학교 수업용 교재 정책의 책무성 확립

3. 국정 교과서 제도의 개선

- 10) 국정 교과서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 확대

4. 검정 교과서 제도의 개선

- 11) 검정 교과서의 공정한 경쟁 시장 질서의 확립
- 12) 교과별 전문 출판사화
- 13) 정기(定期) 검인정제 확립
- 14) 검정 대상에서 지도서 제외
- 15) 검정 합격 중수의 적정화
- 16) 검정 교과서에 대한 연구 개발 보조금 신설
- 17) 검정수수료의 합리적 부과
- 18) 채택 후보 교과서 선정의 권역별 광역화
- 19) 인정제의 제도적 확립

5. 결론

I. 서론

제7차 교육과정을 계기로 교과서 제도는 적지 않게 달라졌다.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도 일정 부분 나아졌으며, 이에 따라 교과서의 질적 수준도 많이 좋아졌다. 교과서의 외양적 체제도 향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검정의 실시 및 주관 기관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각종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여기서는 교과서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질적으로 우수한 학교 교육용 교재를 연구 개발, 발행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교과서 제도의 연구 개발에서 공급에 이르는 각종 측면을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 방안, 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교과서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점을 목차를 통해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II. 교과서 제도의 전반적 개선

1. 교과별 교과서의 국정, 검정, 인정의 합리적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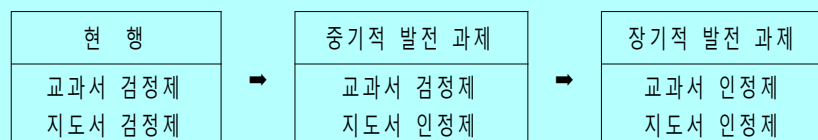
제7차 교육과정기의 경우 교과별로 국정과 검정 중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과정의 개발 고시 이후 약 1년 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공고되었다. ‘교과용도서예관규정’ 제4조에서 국정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하고, 제6조에서 검정 도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 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하고 있다. 이 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라는 규정은 매우 애매하다.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의 교육전문직 인사들이 협의하여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 제도의 발전이라는 당위에 비추어볼 때 이 문제는 그렇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정 교과서의 연구 개발 예산이 열악하여 이를 지속할 의욕이 없기도 하거니와, 제5조에서 “국정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편찬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 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교과서 편찬자(기관)이 매우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낮은 투자와 상대적으로 질 낮은 국정 도서의 발간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아 제7차 교육과정 고시 직후 교육과정 연구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절대 다수가 초등학교 교과서를 비롯하여 국어, 국사 등의 교과서도 검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검정화된 교과서의 구입에 따른 예산 부족을 들어 국정을 그대로 고수하였다. 한편, 검정 대상도 못 되는 것을 검정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막아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기의 제2외국어를 예를 들면 아랍어, 법과 사회 등은 검정에 출원할 출판사들이 거의 없었다. 이 경우 이를 국정화하든지 이를 출판할 의사가 있는 저작자와 출판사에게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금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용도서예관규정 제4조는 “국정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할 교과용 도서로 고시한 것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도서로 한다. ① 검정 신청된 도서가 없는 교과목의 도서, ② 검정신청이 되었을지라도 검정 신청된 도서들의 내용이 모두 부실하여 수정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검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교과목의 도서, ③ 검정 신청된 도서가 2권 미만인 교과목의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실패의 경우 국가가 교과서 저작·발행을 책임지는 것이 교육권,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정 도서는 초등,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중심으로 721책이고, 검정 도서는 187종 1,575책이며, 인정 도서는 1,275책이다.

특정 교과의 교과서를 국정 혹은 검정 혹은 인정으로 할 것이냐는 교과서 질 확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과용도서예관규정을 개선하여 교원, 교과서 연

구원, 교과서 연구기관, 출판사, 교육 부인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교과별 교과서제도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등의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며, 이런 교과목들은 거의 공통필수 교과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정을 줄이고 검정을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일부 교과목의 교과서는 ‘사회적 합의성’을 높이도록 임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시사하듯이 공통필수 교육과정이 주로 (국가)사회적 필요를 따라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사업이 되기 때문이다. 길게 보아 통일을 바라보며 국민적 정체성 형성을 위하여 국정 교과서는 필요하게 된다. 통일이 되면 가장 빠른 시일에 가장 효과적으로 국가적 정체성을 교육하는 것도 국정 교과서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초등학교의 교과서들은 일시적으로 검정화되더라도 통일이 되면 또다시 재국정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많은 과목을 지도해야 하므로 한 과목에 다종의 교과서가 있을 때 교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학년내, 학년간, 교사와 관리자간 합의를 도출하기도 어렵다. 사실 교과서 제도는 서로 맞물려 있는 제로섬 게임 같다. 국정이 풀리면 검정이 되고, 검정이 약화되면 인정이 된다. 결국 공정한 기구를 구성하여 질 높은 교과서를 확보하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 국정 대상 축소와 검인정 대상 확대

교과서 질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국정 교과서를 줄이는 일이다. 민간의 자유롭고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교과서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길을 더 폭넓게 여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초등학교 영어는 검정에서 국정으로 회귀하였으며, 중등학교 사회는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었다. 국정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경쟁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검정교과서에 비해 질적 발전이 더딜 수 있고, 심한 경우 정체되거나 저하될 수도 있다. 결국 이에 따른 폐해는 학생들과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게로 돌아간다. 아직도 국정 교과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국정 도서는 줄이고, 검정과 인정 도서를 늘려가야 할 것이다.



[그림 3] 교과서 제도의 발전 단계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를 비롯하여 국어, 국사, 도덕 등 국정 도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정부에서 특정 저작자와 기관을 지정하여 저렴한 가격에 제작한 도서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개별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기 공통필수 교육과정임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정 기준에 대한 독점적 해석권과 교육내용 결정권의 독점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면이 있다. 초등학교의 교과서와 지도서는 예체능 분야, 수학 및 과학 기술 분야, 그리고 국어, 사회 순서로 점진적으로 검정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정을 축소하고 검인정을 확대하더라도, 자유 발행제는 교과서 제도로써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학교수업용 교재들은 언제나 특정한 거름장치를 거쳐 제공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보다 검정을, 검정보다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채택과 공급 및 이윤 배분 활동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왜 검정이나 인정이라는 장치가 필요한지는 상술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단순히 도서 출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곧 교과서 편찬과 채택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율 채택제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도서의 내용 중에는 국체를 위협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도 스며들 수 있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숙기의 학생들의 심신의 건강을 해치는 내용은 학교교실에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이데올로기 투쟁과 선전장으로 여기는 일부 집단의 편향된 시각이 과잉 반영되는 것도 막아야 할 것이다.

3. 전면 개편보다 판수(版數)를 거듭하는 교과서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기보다, 꾸준히 수정·보완해서 판수를 거듭하는 체제로 바꾸어 가야 할 것이다. 현재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교과서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정 주기도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과정에 연동되어 있다. 국가 교육과정 기준은 전면, 일시, 단주기적으로 개정되어 왔다(홍후조, 2000). 이에 따라 교과서도 전면 개편되어 왔다.

국가 교육과정 기준도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교과서도 판수를 거듭하여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행의 교과서 전면 개편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개정판, 3판, 4판을 거치며 계속해서 꾸준히 수정해서 질 높은 교재로 만들어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는 제작비가 많이 들고, 검정 심사비도 과부담되고 있으며, 검정 심사를 단기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의 질을 찬찬히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교과서를 한 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폐기의 관행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검정 이후에도 학교수업용 교재를 수정·보완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일정 기간 쓰고 버리는 교과서가 아닌 개정판, 3판, 4판 등 판수를 거듭하는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 검정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정기 검정제가 도입되면 재검정 시비도 없어질 것이며, 교과서의 질 관리도 꾸준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항상적 질 개선을 위한 교과서 모니터제 구축

교과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교과서 모니터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발행사들은 한 번 공급하고 나면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편이며, 교과서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통로가 미비한 편이다. 별다른 제도화된 대책이 없어 교과서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 이슈 중심으로 파동을 불러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발행사들은 교과서를 사용해 본 교원과 학생들의 경험과 의견을 수용할 체제가 미흡하다.

현재와 같은 발행사의 교과용도서 발행 저수익 구조 하에서는 발행사에게 모니터 요원 운영비를 비롯한 교과서 개선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적다. 교과서 개발을 위한 편집 인력도 상시로 고용하기 어려운 영세한 출판사가 난립하고 있는 것이 교과서 출판계의 실정이다. 전문 편집 인력을 100인 이상, 교과별로 4-5명 이상 보유한 회사도 4-5개에 불과하며, 교과서 교체기마다 이들의 이동도 잦은 실정 이어서 전문성의 축적이 어렵다. 무엇보다 전문 출판사의 형성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교과서 개선 비용을 교과서 정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를 개선하는 데는 교원, 학생, 편집진, 집필진, 학부모, 해당 교과 연구자 등 다양할 것이다. 특히, 교과서를 개선하는 지름길은 이를 사용해 본 교원과 학생들로 하여금, 단위별, 주제별, 차시별로 일정 인원을 지정해 교과서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교원 교과서 모니터 체제’와 ‘학생 교과서 모니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교사는 가르치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교재 발행사나 정부의 교과 담당 관계관에게 수시 통보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 혹은 학교 수업용 교재 발행사는 교원 교과서 모니터뿐만 아니라 전국 학교와 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 모니터 체제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교재 발행사는 교과서 전문을 웹에 올려 누구나 교과서에 대해 보다 나은 의견을 제기하게 하고, 좋은 평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희망하는 시민을 ‘명예 교과서심의회위원’으로 위촉하여 교과서를 상시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교재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5. 교과 특성에 따른 교과서 발행 및 제공 방식 다양화

현재 교과 특성이나, 수업과 학습에서 교재 의존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교과에 걸쳐 학생이 1인 1책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를 주 교재로 하여 서책 형태로 개발하고 검정함으로써, 주 교재를 교과서 형태로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조차 교과서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실기, 실험, 실습용 교육 내용이 많은 교과 교재들이 그러하다. 실기, 실습, 실험과 관련한 교과 교과서는 교과 특성을 반영한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자료 형태로 개발 보급되어야 함에도 서책 형태가 주 교재가 되고 있다. 이는 교과서 설명 위주 수업을 고정시키는 면도 있다. 수업과 학습에서 교과서 의존도가 낮은 교과의 경우 학년별 학기별 1인 1책보다 학급용, 교사용, 학년용, 다학년용, 학교용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 개인용이 아닌 학교용, 학급용, 교사용으로 만들어 보급해야 할 것이고, 대여 사용 후 반납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의무교육기는 국가에서 교과서를 구입 보급하므로, 학급용, 학년용 교재는 국가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그 여유분으로 검정 대상을 확대할 수 있고, 국정 교재 개발을 고급화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보완 교재를 구입·보급할 수도 있다. 예를 든다면, 체육의 경우 초등 저학년용, 초등 고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이면 충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술은 원화를 잘 복사한 교사용 화첩을 제공함이 더욱 적절하다. 이것도 초등 저학년용, 초등 고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의 4단계면 족할 것이다. 음악의 경우 감상용 테이프를 제공하거나 악곡 내려받기를 하도록 제공하면 학생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된다. 이런 교과서들은 학생 개인용보다 학교용, 학년용, 학급용, 교사용으로 제공하고 다년간 사용하도록 하면 많은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특수학교용, 실업고용 국정 교과서 개발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6. 사용 후 반납하는 교과서 대여제 확대

전면 개편으로 교과서를 한 번 쓰고 버리는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 교재 발행사는 교과서를 학생 개인 휴대용으로 부피와 무게를 제한하여 만들고 있고, 사용 후 폐기 처분하는 소모품으로 간주하고 제작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소모품처럼 사용하고 버리는 버릇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와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며, 자원의 낭비 또한 적지 않다. 현재 교과서 재활용율은 10% 미만으로 저조하다. 새로 개발되는 교과서들은 지질이나 판형 등에서 1년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모든 수업과 학습에서 교과서 의존이 낮은 교과의 교재부터, 개인 구입 사용 후 처분형보다 무상 대여용을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정 뒤에도 학교수업용 교재를 수정 보완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일정 기간 쓰고 버리는 교과서가 아닌

개정판, 3판, 4판으로 판수를 거듭하는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절감되는 자원의 혜택은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다. 학교 보 관용 교과서는 값은 좀 비싸더라도 내구성이 높은 제품을 만들면 사용기간이 길어 져서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개인이 굳이 소지 하려는 경우에 대비하여 학생 보급용은 저렴하고 1년 쓰고 버려도 아깝지 않게 만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표 6> 주요 국가별 교과서 구입 및 사용제도

국가	교과서 구입 및 사용 제도
한 국	의무교육기(2002년 현재 중1까지)는 학생 개인용으로 무료 지급 후 개인 소유, 2002년 현재 중2부터는 개인 구입, 사용 후 소유.
미 국	교육청 교부 예산으로 학교에서 구입하여 관리하고 학생에게 무상 대여 사용 후 반납, 오용 파손은 변상 함(텍사스 주).
독 일	교육청 교부 예산으로 학교에서 구입하여 관리하고 학생에게 무상 대여 사용 후 반납, 오용 파손은 변상 함(헤센 주/바이에른 주).
프랑스	의무교육기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음 예산, 중학교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으로 학생에게 무상 대여 사용 후 반납, 오용 파손은 변상함. 이후에는 개별 구입.

<표 7> 연도별 교과서 재활용률 및 절감 예산

학년도·학기	주문대상 부수(천부)	재활용 부수(천부)	재활용률(%)	절감 예산(백만 원)
1998-1	54,540	1,500	2.75	2. 197
1998-2	37,664	2. 493	6.62	2. 067
1999-1	56,557	9,212	16.29	11,032
1999-2	37,518	2. 641	7.04	2. 066
2000-1	58,508	3,661	6.26	4,210

7. 교과서 공급 제도의 개선

검정이 확대되어 검정 교과서가 주가 되고 국정 교과서가 소수에 불과하게 되면 그 발행 방식과 공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교과서의 주문에서 공급에 이르기까 지 복잡한 업무를 교사들에게 맡기는 것도 쉽지 않다. 공급의 경우 발행사별 자율 공급을 하게 되면 주문에 매우 많은 부담과 혼란이 초래되고, 공급 비용이 높아지 고, 발행사에 의한 채택 비리가 저질러지기 쉽다. 그렇다고 모든 교과서의 공급을 일원화하게 되면 공급의 독점에서 오는 지나친 부담이 따르게 된다. 결국 적절한 범위에서 공급을 분할하여야 하는데 검정과 국정으로 분할하면 검정은 지나치게 비 대해지고, 국정은 매우 복잡하고 사소한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학교급 별 공급 방식을 고안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교, 실업계 및 기타 특수학교용 공급으로 4등분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나친 독점도 지나친

분산도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최근 들어 주문(전자상거래)과 공급(택배제도)이 용이해짐에 따라 발행사들이 학교행정실과 직거래할 수 있는, 자가 생산하여 자가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때 반드시 공급 대행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8. 학교의 각종 교재 구입에 대한 예산 확보

다양하고 질 높으며 풍족한 자료를 가지고 학교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 효과를 올리는 데 매우 중요하다. 늘 교과서 위주의 단조로운 수업을 탈피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재를 연구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이를 학교가 구입 활용할 수 있는 교재 구입 대금을 확보해 주는 데는 인색하였다. 마치 교과서와 분필과 지우개만 있으면 수업이 되는 것으로 여기다, 최근 들어 IT활용 HW와 SW만 있으면 수업이 선진화되는 것으로 여기는 극단적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위험 천만한 인식이며 다양한 형식의 사고 방식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더욱 풍족하게 공급해주어야 할 것이다. 활동 확대, 체험 학습 확대, 손발과 몸을 움직이는 학습(hands-on learning)을 권장하면서도 교과서 구입비와 약간의 수업자료 구입비만 지급하면 학교교육은 점차 초라해지고 질 높은 교육은 사교육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학교들은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급받아 학교가 그 항목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의 운영 예산은 여전히 열악하여 수업과 교사의 수업준비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과서에 이어 세트(set) 교재로 각종 참고 도서나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고 싶어도 이를 구입할 만한 예산이 없는 고로 풍부하고 질 좋은 교재가 교사와 교실에 보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교육 시장은 이런 공교육의 부실 위에 형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에 버금가는 사교육시장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과서 시장 규모(국정 약 1천억 원, 검정 약 1천억 원) 규모를 두 배 정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교육의 폐해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질 높은 공교육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9. 학교 수업용 교재 정책의 책무성 확립

제7차에 와서 검정제도는 일제(一齊) 검정에서 연차별 검정으로 시행 방식이 바뀌었다. 또한 검정 심사 주무 기관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되었다. 우리 나라의 검정 과정은 비상설 조직인 검정심의회에 완전 위임하기 때문에, 정부는 심의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다. 일본은 문부성의 전

문위원(구 교과서조사관)이 교과별 검정 전 과정을 주도하고 책임을 지며, 대만은 국립편역관이, 미국은 주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담당하는데 비해, 제7차 교육과정 아래에서 정부의 검정 관련 책임과 권한은 미약한 편이다. 2002년 여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파동에서처럼 교과서 검정제도의 정책 결정과 시행의 분리가 일어나, 문제나 쟁점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역할의 분산이 일어나고 있다. 검정 계획과 시행을 정부와 출연 연구소가 분담하여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교과서를 검정하는 일은 이윤을 동기로 하는 민간 교과서 발행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준사법적 행정처분 행위이다. 이는 마치 정부의 인허가 행위나 법조인과 의료인이 전문적 판단과 결정을 하는 행위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교과서 적부 심사를 위한 엄정한 기준 설정과 전문적 판단에 의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검정에서 교과서 적부 심사 결정은 저작자, 발행사, 교원과 학생, 학부모, 관련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언제나 이의 제기가 뒤따를 수 있다. 검정 결과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저작자와 교과용 도서 발행사가 불합격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사회(언론, 이익단체, 정치권 등)는 합격된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보편 타당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학파에 따른 상호 견해차가 교과서를 둘러싸고 대립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쟁점 발생이나 이의 제기 시 교과서 정책 결정과 집행의 분리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의 제기를 잘 수용하여 처리하는 안정적 기구와 기관이 필요하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검정제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결정, 정책집행, 사후관리는 일관성과 실효성을 위하여 정부가 공공 권한을 배경으로 수행하고, 연구소는 정책 집행 대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역할 분담으로서는 바람직하다. 예컨대,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결정, 집행, 사후관리’를 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를 역할 분담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또한 검정 실시 시기, 국정의 검정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립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질 높은 교육용 교재를 연구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제7차 교육과정기에 따르는 교과서 연구 개발은 일차적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면 그 많은 집필자와 연구자 및 편집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얼마나 더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검정과 국정 교과서 전면 개편에 참여시킬 것인가? 이런 관행들은 사라져야 하고 예측가능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그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학교 수업용 교재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립 집행해야 할 것이다. 교과별 교재별 국정과 검정 및 인정의 구분, 공정한 경쟁 질서와 시장 형성을 위한 각종 단체(예, 검정 협

회)의 역할, 출판사와 학교간 교재 채택을 둘러싼 투명한 거래 질서의 확립,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꾸준한 개선 등은 여전히 학교 수업용 교재 정책의 새로운 확립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III. 국정 교과서 제도의 개선

10. 국정 교과서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 확대

현재 국정 교과서의 문제점은 국정으로 지정된 교과목의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점과 국정 교과서의 연구·개발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정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이다. 국정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편찬하기로 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 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한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비롯하여 많은 교과목의 교과서들이 여전히 국정으로 묶여 있다. 민주화된 체제에서 더 이상 국정 이데올로기를 강제적으로 반영하려는 기도가 있지 않다고 보면, 특정 교과목의 교과서가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유일한 기준은 시장 실패 여부이다. 특수학교, 특수한 영역의 소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대해서 정부는 예산을 투자해 검정 못지 않은 교과서를 연구, 개발, 공급해야 할 것이다.

국정 교과서의 연구, 개발을 위한 예산은 그간 꾸준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연구 개발비, 원고료, 삽화료, 사진료, 개고료, 일반 관리비, 편집비 등은 검정 교과서에 비한다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고 국정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희생적 노고에 기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검정 교과서에 비해 국정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질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런 낮은 질의 교과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수업의 자료, 학습의 질 향상을 기하려면 국정 교과서는 시장 실패 부분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안이한 예산 확보와 관행은 국정 교과서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런 교과서의 연구 개발비는 검정과 같은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교과서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

이번에 검토된 국정 교과서들이 검정으로 전환된다면 초등학교의 일부 교과서와 중등학교에서 시장 실패를 보이는 특수학교 교과서, 실업계 고교 교과서, 선택이 매우 적은 일부 교과목의 교과서가 국정으로 남게 된다. 이는 집필자도, 발행하려는 출판사도 매우 적을 것이다. 결국 국가에서 교육복지 차원,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이들 교과서를 개발해 주어야 할 것이다. 후술할 교과서 발행 형식의 변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이런 국정 교과서를 질 높게 개발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IV. 검정 교과서 제도 개선

11. 검정 교과서의 공정한 경쟁 시장 질서의 확립

교과서 출판사가 독립적으로 교과서를 발행하여 판매 수익을 올리는 체제가 아닌 협회를 통한 공동생산 공동판매 체제 속에서도 교과서 판매 이익금의 적절한 배분은 교과서 출판의 전문화, 교과서 모니터링제 도입을 통한 지속적 개선을 위한 재투자, 공정한 질 경쟁 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6차 교육과정기에는 검정협회에서 출판사들에게 총판매 수익금액을 35%는 균등(획일) 배분하고, 65%는 주문에 따라 곧 시장 점유율에 따라 차등 배분하였다. 7차 들어 총판매 이익금의 100% 균등배분은 채택과정에서 채택을 위한 과당 경쟁과 있을 수 있는 채택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정교과서협회 회원사들 간에 이루어진 계약사항이었다. 그러나, 교과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원사들은 이런 균등 배분이 오히려 교과서에 대한 재투자 의욕을 꺾는 것으로 보아 그 시정을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다.

한탕주의식 투기로 검정 교과서 제작에 뛰어드는 군소 출판사들이 적지 않은 것은 교과서 시장이 질적 경쟁에 따라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데서 연유한다. 대체로 질 높고 점유율(채택률)이 높은 교과서 회사들이 질 낮고 점유율(채택률)이 거의 없는 출판사들을 먹여 살리는 체제를 유지해 왔다. 결국 교과서 시장은 교과서 제작 및 질 관리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보상과 퇴출이 없는, 곧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 판매 수입 금액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판매 부수에 따라 나누는 방법; 둘째, 과거처럼 총판매금액의 일정 부분은 합격 검정 교과서를 낸 모든 출판사에게 균등 배분하여 투자비를 보장하고, 나머지는 판매 부수에 따라 나누는 방법; 셋째, 판매 부수(채택률, 주문 부수)에 관계없이 합격 검정 교과서를 낸 모든 출판사에게 균등하게 n 분의 1로 나누는 방법이다. 6차 교육과정기에는 둘째 방법을 취하였는데, 이 때 균등 배분을 총판매금액의 얼마로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최근 7차 교육과정기에는 두 번째 방법에서 더욱 후퇴하여 세 번째 방법으로 갔다. 결국 교과서에 관한 한 품질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균등 배분방식을 취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교과서를 잘 만들어 많이 팔린 출판사나 재검정을 거치면서 간신히 합격한 질 낮은 교과서를 낸 출판사는 똑같은 금액을 배분받게 된다. 이는 교과서의 질 개선에는 가장 나쁜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누가 질 높은 교과서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이 제도는 교육의 목적, 교과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파괴하는 조치이다. 그러므로, 하루 바빠 고쳐저

야 할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21,033책을 판매한 E사와 648책을 판 G사가 같은 이익배당금을 분배받는다. 검정교과서협회에서는 그 해의 총매출(교과서 판매 총액)에서 여러 경비와 수수료 등을 제한 순이익을 지분율(출자금 비율)에 따라 회원사에 분배하고 있다. 이 때의 지분율은 교과서 합격 종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익배당금은 교과서 전체 판매액에 바탕을 둔 총액 기준으로 제시될 뿐, 교과서 종별 이익금 내역은 회원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 예의 수치들은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판매 수익률(순이익/총 매출액)은 해마다 약간씩 변하나 2000~2001년 수익률의 중간값을 취하면 대략 13%이다. 이익 배당은 순이익을 N(교과서 합격종수)으로 나눈다.

<표 8> 중학교 사회 1학년 교과서의 이익 배당 예(2003년 기준)

출판사	주문부수	정가	판매액	판매 이익금(A)	실판매 이익금(B)	이익금 차액(C)
A	49,726	3,770	187,467,020	24,370,713	32. 285,704	7,914,991
B	129,485	3,730	482. 979,050	62. 787,277	32. 285,704	-30,501,573
C	97,955	3,730	365,372. 150	47,498,380	32. 285,704	-15,212. 676
D	93,180	3,290	306,562. 200	39,853,086	32. 285,704	-7,567,382
E	221,033	3,820	844,346,060	109,764,988	32. 285,704	-77,479,284
F	11,918	3,650	43,500,700	5,655,091	32. 285,704	26,630,613
G	648	3,640	2. 358,720	306,634	32. 285,704	31,979,070
H	7,363	3,460	25,475,980	3,311,877	32. 285,704	28,973,827
I-1	20,430	3,690	75,386,700	9,800,271	32. 285,704	22. 485,433
I-2	43,247	3,470	150,067,090	19,508,722	32. 285,704	13,226,982
계	674,985		1,326,915,968	260,069,824	320	

* A=판매액×0.13(수익률), B=판매액 계÷10(교과서 합격 종수), C= A-B

위 표의 차액은 1년에 해당한다. 교육과정 적용 기간이 5~6년임을 감안하면, 시장점유율이 높은 출판사의 경우 질 좋은 교과서 1~2종을 개발할 비용을 손해 보는 셈이다. 점유율이 낮은 출판사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된다. 일부 출판사들은 매출액보다 이익금이 더 많은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2004년 중학교 검정교과서를 발행하는 40개 출판사가 달성한 매출액은 460억원이며, 53억원의 이익금을 균분함에 따라 매출액보다 이익금이 더 큰 출판사는 9개였다. 같은 해 고등학교 검정교과서를 발행하는 62개 출판사가 달성한 매출액은 597억원이며, 67억원의 이익금을 균분함에 따라 매출액보다 이익금이 더 큰 출판사는 6개였다(이주호·유승민, 2004).

검정협회에서 출판사를 통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인세(정가의 약 9% 정도)는 본검정과 재검정 판매 부수에 따른 차등 지급하고 있다. 중학교의 저자 인세 배분 방법은 50%는 본검정·재검정 균등분배, 15%는 본검정 균분, 35%는 본검정 매출비

로 지급하고, 고등학교의 그것은 50%는 본검정·재검정 균등분배, 20%는 본검정 균등분배, 30%는 본검정 매출비로 지급한다.

교과서의 과목별 전문화, 교과서의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제 설치 운영 등은 출판사의 몫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출판사의 이익금 배분의 차등화가 더욱 시급하다. 검정 제도는 점차 정부와 검정 시행 관리 기관의 권위적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의해 질 높은 것은 보상받고 질 낮은 것은 퇴출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교과서 판매수익금의 성과 위주 배분 문제이다.

검정협회 내 출판사간 합의는 중요하게 존중될 수 있으나 이들의 합의가 교과서 품질 개선을 통한 교육 발전이라는 더 높은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볼 때 목적 달성에 저해되는 것이면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투기적 검정 교과서 제작과 출원, 재검정 등 비교적 쉬운 검정 기준 통과와 합격, 교과서 판매 대금의 균등 배분으로 연결되는 교과서 시장의 형성을 방해하는 관행과 담합 행위는 교육의 목적과 검정 교과서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검정 교과서의 카르텔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정 교과서 발행사들의 가입을 강제하고 탈퇴를 금지한 검정교과서협회 정관 제6조(가입), 제9조(탈퇴) 사항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의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법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를 원천적으로 강제하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9조 2항(검정 도서의 원활한 발행·공급을 위하여 검정에 합격한 검정도서 발행자로 하여금 서로 공동하여 검정 도서를 인쇄·발행하게 할 수 있다.)도 손질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이익금 균등배분제도가 경쟁을 통한 교과서 질 개선,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한 전문 출판사 육성 등을 저해한다면, 즉 검정 교과서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존속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검정교과서협회에서 밝히고 있듯이 교과서 채택 경쟁 방지가 목적이라면 다른 방지책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것은 대학 교재에서 보듯이 채택의 과열 경쟁이나 비리는 규제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투명한 경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를 제재할 법규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권처럼 교과서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의 메이저 교과서 출판사들이 우리 교과서 시장을 넘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전에 교과별 전문출판사화를 이루고, 항상적 개선을 뒷받침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확립하는데 재정적 바탕이 되는 교과서 판매에 따른 이익금의 차등 배분제를 하루바삐 확립해야 할 것이다.

12. 교과별 전문 출판사화

이 문제는 앞서 밝힌 대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이윤 배분이 합리적으로 되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별 교과서 발행사의 전문화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질 높은 교재를 생산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부의 교재 발행사들이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 있고, 이들은 검정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집필진, 편집진 등을 확보하고 교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미 개발된 도서의 개정판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재의 질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검정에 출원하는 출판사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교과서 사업을 1회성 투기 사업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전문적인 집필, 편집진이 상시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 출원 당시 일시적으로 모여 작업하고 흩어지는 방식이다. 또한 설문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비전공자가 교과서를 편집하는 경우도 많다. 교과별 전문 발행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검정실시공고 때마다 교재 발행의 경험이 일천하거나 없는 영세 군소 출판사들이 완성도 낮은 심사본을 제출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어 왔으며, 그들의 전문성 부족과 경험 부족, 영세성으로 인해 교과서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과다한 투자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기존의 발행사들도 여러 교과용 도서를 한꺼번에 편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이 높지 못하다.

교과용도서 전문 출판사 육성을 위한 가장 큰 요건은 교과서 발행사의 수익성 보장이다. 교과용도서 발행사에서 질 높은 교과서 편찬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정부는 현재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는 보장해 준 수익이 다른 곳에 전용되지 않고 오직 교과용도서의 연구, 개발 및 편집자의 전문화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또한 유관 대학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한국검정교과서협회와 같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교과용도서 편찬 전문 출판사 및 편집자 양성을 위한 이론·실무 교육 및 법률, 교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13. 정기(定期) 검인정제 확립

연차별 검정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엄밀히 따지면 연차 검정에 대한 동의라기보다는 교과용도서 개발의 지속성에 대한 지지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연차별 검정으로 인해 이전의 일시 검정 혹은 동시 검정에 비해 질 높은 교재 확보에 중요 요인이 되는 집필자의 원고의 질과 편집자의 편집 전문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차별 검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첫째, 무엇보다 교육과정기별로 단 1회의 검정기회를 부과할 뿐이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저작자와 발행사가 모든 자원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투기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것은 일부 출판사 및 저자의 안이한 태도와 맞물려 중학교의 경우 2.

3학년 교과서가 1학년 교과서에 비해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수 교과목에서 중2 교과서가 검정 탈락한 예가 많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출판사는 재검정을 통해서도 교과용도서로 합격되지 못하면 투자한 자본의 원금을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재검정 도서를 만드는 경우도 아주 많았다.

셋째, 학년별 검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드러내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가 합격했다고 하여도 2학년 때 불합격하면, 일선 학교에서 합격한 1학년 교과용 도서를 채택 사용하다가 2학년 때에는 다른 출판사의 교과용 도서를 채택,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검정이 모두 끝나는 2002년 이후 중학교의 경우 1, 2, 3학년에서 교과서·지도서가 모두 합격된 도서가 확인되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으나, 그런 과도기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은 분명하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기의 검정에서 보듯이 중학교 2학년과 고교 국민공통기본 교과를 동시에 검정하게 되면,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 교과서를 개발하는 문제가 생긴다.

넷째, 동시검정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동시에 집필하고 편집하는 데서 오는 일시적 병목현상으로 출판사의 집필자 확보, 편집진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되고, 집필진과 편집진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질 높은 교재를 집필, 편집, 확보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연차별 검정으로 출판사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집필자와 편집자를 확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있다. 이미 확보한 집필진과 편집진들도 중간에 교체, 변화될 수 있어 업무의 단절이 있을 수도 있다.

다섯째, 다른 한편으로 출판사들은 첫해에 원고의 질이나 성실도, 팀워크를 보고 좋지 않을 경우 이를 다음 해에는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또한 검정 시행 기관의 검정위원 확보, 검정 심사 기간 확보 면에서 무리가 따르게 되며, 그렇게 되면 발행과 검정에서 철저하게 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검정 과정에서 1학년 때 합격된 것을 2학년에서 불합격시키지 못하거나, 1, 2학년에 합격되었다고 하여 3학년 검정에서 불합격 처분하는 데 주저하게 되어 교과서 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定期) 검정제를 확립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해 오던 교과서는 교재 발행사와 저자가 책임지고 꾸준히 수정 개선하여, 교과 특성에 따라 내용이 안정적인 교과서는 4년마다, 내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변하는 교과서는 2, 3년마다 검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새로 발행된 교과서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매년 검정을 시행하는 정기(定期) 검정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현행 검정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교재 발행사는 완성도가

낮은 교과서를 출원하고, 심의 과정에서는 검정 심사 기간이 짧아 적은 수의 위원이 단기간에 내용 오류와 질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심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기 검정제는 교재 발행사로 하여금 보다 완성도 높은 심사본을 안정적으로 출원할 수 있게 해 주고, 검정심사를 질 높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된다. 정기 검정제는 검정 기회를 다시 줄 수 있어서 부적격 판정에 따른 시비를 방지할 수도 있으며, 불합격 도서를 낸 출판사를 달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써 재검정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채택은 적게 되면서도 판매 수익금을 균등 배분 받음으로써 다른 출판사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줄어든 것이다. 또한 발행사들도 교과서 관련 인력을 상시 구축하고 그 전문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도 매년 교과서를 달리 채택할 수 있는 열린 채택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과서 질을 매년 높여가는 출판사의 교과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교과별 출판사의 전문화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14. 검정 대상에서 지도서 제외

현재 교과별 검정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교과서와 지도서이다. 특정 교재가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기본이 되면 그것은 검정 대상이 되어 공익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질 관리를 받게 된다.

지도서는 교직 경험이 적거나, 부전공, 복수 전공으로 수업이 서툰 교사, 소규모 학교에서 여러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 통합 교과에서 특정 과목을 전공하고 전체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업 전개와 수업 참고 자료 및 평가 안내 자료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경륜 있는 교사들은 수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하고 이를 획일적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런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는 지도서는 검정하기보다 인정도서로 하고 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의 지도서 편찬, 검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현재까지 발행사들은 교과서 검정 출원 직후 곧바로 지도서를 제작하여 검정 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간, 인력, 비용을 집중할 수 없어 줄속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2차 심사 직후 곧바로 지도서를 제작해서 심사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출판사로서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교과서와 함께 지도서를 검정하게 되면 교과서에 집중되어야 할 인력과 자원을 분산시키고 피로를 가중시키는 폐단이 있어 왔다. 또한, 교과에 따라 지도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더라도 그 사용도가 미미한 교과도 적지 않다.

검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과서만이 검정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교과서는 학생의 학습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

도서는 교과서를 학생에게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도서이므로 원칙적으로 검정의 대상으로서 타당성이 적다. 왜냐하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해석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도서를 검정하는 것은 이를 획일화하는 것이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지도서는 교과서를 편찬한 발행사의 후속 서비스 차원에서 발행되고 공급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전문적인 교원 단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마련될 수도 있다. 지도서를 검정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서는 출판사 관계자들과, 교육 전문가들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함수곤 외, 2002).

지도서에 해당하는 자료를 학교 수업용 교재 발행사들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길은 여러 가지다. 예컨대,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할 때, 지도서 유무나 내용을 참조토록 하면 발행사가 시간을 두고 다양하고 독창적인 지도서를 개발할 것이다. 또한, 발행사들은 개별적 혹은 연합하여 교과서에 따라 학생용 혹은 교사용 참고 자료집을 개발하여 ‘인정’받는 방식으로 지도서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해당 학교 수업용 교재 발행사의 교과서를 사용해본 교사들이 단원별, 차시별, 교과서별로 학교 수업용 교재 발행사별로 참고 자료나 수업지도안을 홈페이지에 올려 다른 교사들이 간편하게 참고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민간의 창의와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 교재들을 검정보다 인정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현재 계통 학습 위주로 되어 있는 교재 발행 형식에 더하여, 주제 학습, 토의 학습, 각종 참고 자료, 연습용 자료 등이 많이 발간되도록 하는 방향이다. 지물류 서책 중심에서 벗어나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교과별로 어떤 교재가 검정 대상인지, 어떤 교재가 인정 대상인지 상세화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듯이 검정 심사에서 지도서를 제외하고, 교과서만 검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학교 수업용 교재 발행사에서 지도서 혹은 참고서를 제작하되,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궁리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도 교과서의 ‘문제’를 기초로 한 문제 풀이 ‘정답’이 나오는 학생용 ‘자습서’는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런 도서를 출판했다면 학생에게는 판매를 금하고, 교사들에 한하여 판매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15. 검정 합격 종 수의 적정화

과목별로 검정 교과서를 몇 종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교과서 질 향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자유 발행을 촉구하는 일부 인사들의 요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또한 검정에 불합격한 출판사의 제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정의 합격 종수는 늘어났고, 검정제의 가장 큰 장점인 교과서 질의 제고를 담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때는 검정 교과서들이 5종 이내 혹은 8종 이내에서 제한되기도 하였다. 분명한 것은 합격 종수가 많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증가하였다. 예컨대 문학 18종에서 다루는 서로 다른 작품 수가 600개가 넘는다는 것은 학습의 범위가 늘어났고 작품의 엄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적으로 차별화되지 않는 여러 종의 교과서가 등장하여 질적인 저하도 일어났다. 과다한 합격으로 인한 전문 발행사 설립 어려움, 자원의 낭비, 과다 경쟁 초래, 도산 업체의 발생, 전문화 저해, 발행 비용 증가, 공급비 증가가 초래되었다. 다종화로 발행사별 발행 부수는 감소하고, 규모의 경제가 없어 교과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졌다. 합격 종수가 이대로 지속되면 앞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면 교과서는 더욱 치명적인 약점을 안게 된다. 주요 교과서들이 5-8종 이내에서, 일부 학생들이 쓴 교과서들이 3-5종 이내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교과서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격 종수는 제한되어야 한다. OECD 여러 나라의 교과서 전문 발행사의 수를 살펴보면 교과서 합격 종수의 제한은 더욱 설득력이 있다. 이익금의 배분 방식을 바꾸는 것도 이를 앞당기는 효과적인 방식이 된다.

16. 검정 교과서 연구 개발 보조금 신설

검정 교과서에 대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출판사들이 특정 교과목의 교과서를 거의 독과점적으로 장악할 수 있으며, 그 혁신적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다. 질 높은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교과서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군소 출판사들을 육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교과서 판매대금을 균등배분하여, 잘 만들어 잘 팔리는 교과서 회사들에게 기생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하며, 군소 출판사라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교과서에 대한 혁신 의욕이 있으면 정부는 연구 개발 계획서를 공모 받아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시장질서의 확립과 경쟁의 확대를 통해 개발 경쟁, 검정 출원 경쟁뿐만 아니라, 편집 경쟁, 질 경쟁, 가격 경쟁, 생산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장 실패 부분인 국정 교과서의 연구 개발 및 위탁 편찬도 일반 출판사들에게도 공모할 수 있도록 열려져야 할 것이다. 국정 교과서라고 하여 반드시 특정 대학이나 연구소가 편찬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그 중 수도 반드시 한 가지일 필요는 없다. 이런 모든 문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연구 개발 예산을 제도적으로 확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과서에 이어 참고서, 자습서, 각종 문제집을 발간하여 교과서에 의한 영세한 이윤을 보충하여 왔다. 실제로 교과서는 가격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참고서는 가격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편이어서 참고서나 자습서는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비해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참고서와 문제집 등을

학원 교재를 중심으로 구입하고 있어 이전처럼 교과서에 의한 적자를 보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어 자칫 교과서 시장을 방치하면 무너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정부는 의도적으로 주의 깊게 교과서 시장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교과서의 가격은 학습 참고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교과서의 가격이 낮은 것은 정부가 교육비 상승 및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교과서의 가격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교과서 가격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규제는 양질의 교과서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학습 참고서가 학생들의 기호에 맞춰 점점 고급화되고 내용이 풍부해지면서, 교과서와 학습 참고서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학습 참고서에 대한 학생들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교과서 가격의 적정화는 고품질의 교과서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1인당 1책의 교과서를 소지해야 하는 대상을 줄여감으로써 이런 정책의 도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보다 값이 3배 정도 비싸고 질이 좋아진다면 3년 정도 내구성이 있다면 매년 사서 쓰고 버리는 것보다 낭비도 줄고 값도 싸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검정 교과서를 개발하는 출판사의 대부분이 학습 참고서를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교과서와 학습 참고서의 겸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과서 가격 규제를 완화하여 양질의 교과서를 출판할 수 있는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해야 한다. 검정 교과서를 생산하는 출판사들이 학습 참고서 출판을 겸하고 있는데, 특히 중요 교과목(영어, 사회, 수학, 과학)의 경우 검정 교과서 출판사의 상당수가 교과서 자습서가 아닌 학습참고서(주로 평가문제집)를 출판하고 있으며, 체육, 음악, 미술, 기술·가정, 한문과 같은 교과목 또한 검정 교과서 출판사가 학습참고서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보통 교과서 자습서의 가격은 교과서 가격의 대략 3~7배 정도로 책정되어 있으며, 자습서가 아닌 학습 참고서의 가격 또한 비슷하다. 그리고 교과서 자습서나 학습 참고서의 판매 수익은 전액 해당 출판사의 몫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정 교과서를 생산하는 출판사들이 정부에 의해 가격이 제한되는 교과서의 질은 검정 통과 수준에 맞추고,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 고가의 자습서와 학습 참고서 부분에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교과서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검정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한다 해도, 교과서의 질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와 학습 참고서의 겸업을 제한하여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17. 검정 수수료의 합리적 부과

현행 검정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검정 수수료가 6차에 비해 책당 수배에서 수십배 인상되어 출판사의 부담이 늘어났다. 둘째, 현

재와 같이 검정수수료가 비싼 것은 검정 업무 수행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출판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검정 출원 종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책정하거나 부과하면 채택 가능성이나 사용 부수가 적은 소위 비인기, 비수익성 교과서의 경우 출원 종수가 적게 되고 기본 비용은 비싸 지고, 책당 수수료 단가가 매우 높아지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정제는 국가가 교과서 발행과 공급의 일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검정은 발행을 민간이 하되, 그 내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판단은 국가가 하게 된다. 그러면 검정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 검정 교재를 사서 공급해야 하는 국가와 학부모가 결과적으로 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검정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과정까지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국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으며,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사업에 지나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 원리가 개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검정 업무에 드는 비용에 대해 적절히 부담하면서 공익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출판사들은 교과서를 발행하고 이익을 얻게 된다. 또한 발행권을 국가로부터 획득하는 것이므로 검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검정에 드는 비용 중 접수, 결과 통지 등에 드는 실비적 수수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출판사에게 부과하고, 교육과정의 기준을 지켜내고, 교과서 질을 높이거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18. 채택 후보 교과서 선정의 권역별 광역화

현재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전시하고 채택하기까지 기간은 약 1개월 정도(검토 기간은 15일 내외임)이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개별 교사가 여러 책을 모두 검토하여 비교 판단하려면 기간이 짧은 편이다. 단위 학교에서 교과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채택하여 질 낮은 도서를 자연 도태시키는 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교원의 잦은 이동으로 교과별로 교사 수가 소수인 학교는 자신이 참여하여 검토 추천하고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별 학교보다 채택 단위를 광역화하여, 학생 수를 감안하여 지구별 자율장학회별로 혹은 권역별 채택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의 공론에 따라 질 높은 교과서를 공동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교과서 출판 전문화와 고품질화를 위해 교과별로 2-5종 내에서 복수 추천하고 학교에서 현행 절차를 활용하여 채택하도록 하여, 채택 과정에 다수가 참여하여 선택의 타당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 등을 통해 교과서 질에 대한 평가 결과를 권장하고, 다양한 사회단체의 교과서 질 평가 결과를 공개

하는 것도 교과서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19. 인정제의 제도적 확립

제도적으로 보면 인정제는 아직 안정적인 제도가 아니다. 교사,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장 혹은 교육감의 인정을 위한 제도의 확립이 요청된다. 또한 질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학생의 수준에 맞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거나 온정적인 입장에서 채택해주는 등 제도 확립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V. 맺는 말

교과서 제도의 목적은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최고로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 확보하여 학생과 교사들에게 들려주는데 있다. 교과서 문제의 근본적인 측면은 학교교육에서 교과서의 위상을 어디에 위치시키느냐의 문제이다. 교과서의 내용 기준, 교사의 교육 수행 기준, 학습자의 성취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거해 교육을 이끌어 가느냐의 문제이다. 현재와 같이 교육과정기준은 교과서를 집필하기 위한 모본(母本)에 불과하고, 교육의 중심에 교과서를 여전히 위치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점차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시각을 대표하는 것이 열린 교과서관이다. 교과서를 교육과정 목표, 일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 자료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이지만 교과별로 단일의 유일한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것은 편협하고 후진적인 시각이며, 이를 좀더 확대하면 검인정 교과서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복지적 차원에서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국정 교과서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교과서 제도가 교육과정의 기본 성격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서로 다른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의 공통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누구나 반드시 동일한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공통필수 교육과정기(期)와 개인차를 존중하여 학습자의 서로 다른 적성, 능력, 진로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선택해서 이수해도 되는 상이선택 교육과정기에 따라 교과서 제도를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공통필수 교육과정기에는 보다 공통된 통일적인 교육과정 자료가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상이선택 교육과정기에는 학습자들이 저마다의 적성, 능력, 진로에 따라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종류의 교육과정 자료를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공통필수 교육과정기에 보다 적절한 국정 교과서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군데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교과

서 제도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역의 역할(논리적 정합성, 경험적 실증성, 기술적 효율성, 사회적 합의성, 국제적 교류성, 개인적 덕성, 예술적 심미성, 신체적 건강성 등을 높임)에 따라 교과서 제도는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역의 성격에 따라 교과서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국어, 도덕, 국사, 사회 등은 국정 교과들로서 오랫동안 국정제를 적용받아 왔다. 이번 연구는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였다. 여전히 이런 교과들에 대해서는 국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방한 연구도 있다(유학영 외, 2003). 그러나 수학, 과학, 기술 등 상대적으로 탈이데올로기적이며, 학문공동체 내에 시공을 넘어 합의가 비교적 굳건한, 보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들은 검정제로 전환하여도 커다란 반대가 없다. 또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학습자들의 적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체능 교과들도 주관적 견해가 개입될 여지는 있지만, 학습자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교과서들이므로 검정으로 전환하여도 큰 반대가 없는 편이다. 이처럼 교과역의 성격과 그 존립 목적에 따라 교과서 제도의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되어 있는, 국가사회의 공통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로 되어 있는 국어, 도덕, 국사 등의 경우는 국정제와 훨씬 친화적이다.

교과서 제도를 국정, 검정, 인정 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의 문제이고, 나아가 정부에서 현재 원활한 시장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여겨지는 교과서 부문에 대하여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검인정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의 확립이다. 즉, 시장 실패 부분으로서 국정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과 민간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이며 질 높은 교과서 확보를 위한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의 확립이 그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검정 제도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주로, 교과서 발행 관련 주체(집필자, 편집자, 심사자, 채택자, 사용자, 교육인적자원부, 교재 발행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간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 측면과 교과용 도서 발행과정(집필과정, 심의과정, 수정과정, 채택과정, 사후 질 관리과정)에서 나타난다. 교과서의 질(質)은 ‘교육과정기준의 질,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심의과정, 꾸준한 질 관리’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학생과 교사에게 가장 좋은 질의 교과서를 확보하여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행 교과서 제도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국정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실패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 교육복지를 구현하거나 사회적 합의성을 높이기 위한 교과나 시기에 적용되어야 하고, 정책 집행기관이거나 연구개발기관은 이를 위한 책무성을 굳건히 유지해야 하며, 검정은 출판사의 적정 수입 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여 그 수익금으로 전문화, 특성화, 모니터링제, 대여제 등을 확립해야 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형 출판사뿐만 아니라 소형 영세 출판사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틈새를 공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교과서 제도에서 후진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인정제이다. 이론상으로 보면 국정보다 검정, 검정 보다 인정이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질이 높아야 하지만 실상을 그렇지 못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검정과 국정에 연구자들의 노력, 시간, 관심, 자원이 쏠린데 비해 전체 교과서의 2/7를 차지하면서도 주목받지 못하여 여기는 황무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잘 제도화하는 것이 교과서 제도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과서연구원(2000), ‘교과서연구백서.’
- 교육인적자원부(2003), 고등학교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정가표.
- 교육인적자원부(2003), 중학교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정가표.
- 박도순·홍후조·전효선·김명화(2001),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 연구보고서,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유학영 외(2003), ‘국정 도서 발행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이주호·유승민(2004), “교과서 카르텔을 해체하고 경쟁을 도입하라” 9월 29일 보도 자료.
- 조난심·홍후조·송현정·김지현(2004), ‘초중등학교 국정 도서의 검인정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검정교과서협회, <http://www.ktbook.com/>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 체제 연구,’ 연구보고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국정교과서 검인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공청회 발표자료(2005년 6월 16일).
- 함수곤·강환동·홍후조·조성준(2002), ‘교과용도서 검정 업무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홍후조(2000),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미발표원고.